

발 간 등 록 번 호

11-1051000-00066-10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대한민국정부

목 차

제 1 부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개념과 실효성 / 3
2.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절차 / 5

제 2 부 | 2017~2021년 경제·재정운용 여건

1. 대내·외 경제여건 / 11
2. 재정운용 여건 / 13

제 3 부 | 2017~2021년 재정운용방향

1. 재정운용 기본방향 / 19
2.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 21
3. 분야별 자원배분 방향 / 39

제 4 부 | 12대 분야별 투자방향

1. 보건·복지·고용 분야 / 51
2. 교육 분야 / 75
3. 문화·체육·관광 분야 / 88
4. R&D 분야 / 103
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 112
6. SOC 분야 / 124
7. 농림·수산·식품 분야 / 134
8. 환경 분야 / 144
9. 국방 분야 / 152
10. 외교·통일 분야 / 164
11. 공공질서·안전 분야 / 171
12. 일반·지방행정 분야 / 191

제 5 부 | 사람 중심의 경제구현을 위한 재정혁신

1. 기본방향 / 203
2. 강도 높은 양적·질적 지출 구조조정 추진 / 206
 - (1) 추진방향
 - (2) 양적 지출 구조조정
 - (3) 질적 지출 구조조정
3. 세입기반 확충 / 211
 - (1) 국세수입 확충
 - (2)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4. 재정의 민주성·투명성 강화 / 215
 - (1) 국민참여예산제도 도입
 - (2) 재정정보 공개 확대
5. 재정관리체계 개선 / 219
 - (1) 공공기관 운영·관리·평가 체계 개선
 - (2) 지방재정 분권 추진방향
 - (3)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 (4) 유사·중복 통폐합
 - (5)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 개선
 - (6) 사회보험 재정 안정화
 - (7) 안정적 국고채 발행 및 시장 선진화

제 1 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제1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개념과 실효성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에 대한 재정운용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재정운용 계획을 말한다.

■ 중기적 시계에서 재정운용 전략과 자원배분 방향을 제시

국가재정을 운용하는데 있어서는 매 년도마다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배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시계에서 국가 정책적 목표를 반영하기 위한 전략적 자원배분도 중요하다. 단년도 위주의 예산 편성만으로는 국가 발전전략을 뒷받침하는 중장기 전략적 자원배분 기능을 수행하기에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장기적 시계에서 재정운용전략과 자원배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5개년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연동계획으로서 계획 수립 이후의 경제상황과 재정운용 여건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매년 수정 및 보완하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04년에 최초로 수립되었으며, 2007년부터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2013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2013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회계연도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다.

■ 전략적 자원배분과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더욱 강화

우리나라는 2004년에 4대 재정개혁을 추진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비롯한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Top-down), 성과관리제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등을 도입하면서 제도적 측면에서 선진 재정운용시스템을 구비하게 되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도입과 발전으로 기존 단년도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거시경제 및 재정여건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재정운용의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전략적인 자원배분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정책의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04년 최초 수립된 이후, 현재까지 계속 발전되어 왔으며 2010년 5월 「국가재정법」이 개정되면서 현재와 유사한 체제와 내용을 갖추게 되었다.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부터 수입을 국세·세외수입·기금수입으로 세분화하였고, 통합재정수지의 전망, 근거 및 관리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전년도 계획 대비 변동사항 등에 대한 평가·분석보고서를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다.

2012년부터는 재정지출을 의무·재량지출로 구분하여 지출성격별로 전망근거와 관리계획 등을 제시하였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도 첨부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있다. 또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절차에 있어서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 재정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2.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절차

■ 각 부처에 계획 수립지침 통보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기획재정부는 2016년 12월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각 부처에 통보하였다. 각 부처는 동 지침에 따라 부처별 중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2017년 1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 분야별 작업반 운영 등 폭넓은 의견 수렴

2017년 2월부터 정부, 학계,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18개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하고 각 분야별 정책방향과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다.

2017년 8월 23일에는 재정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방향 및 분야별 중점 투자방향에 대한 외부 전문가, 관계부처, 지자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국회 보고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2017년 8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였다.

■ 2018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 제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18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되었으며, 2018년 예산안과 함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다.

■ 1982년부터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중기재정계획 작성

- 정부는 재원배분에 있어 중기적 시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82년부터 중기재정계획을 작성하였다. 초기의 중기재정계획은 재정적자 전망이나 적자축소 계획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을 제시하였고, 예산편성 시 재정당국의 내부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 「국가재정법」 제정을 통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제도화

- 2004년에는 중장기적 시계에서의 전략적 재정운용을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최초로 수립하고,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을 통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동 계획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 정부는 경제·재정여건을 전망하여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 5년 단위 재정총량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12대 분야별 중점투자계획 및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또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30일전까지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방향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포함범위 확대 및 실효성 강화

- 2005년부터는 일반회계 등 예산 중심에서 예산과 기금을 망라하는 총지출 기준으로 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또한 계획 수립과정에서 분야별 작업반, 재정정책자문회의 등을 통해 민간전문가, 정책고객, 관계부처, 지자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계획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 이와 함께,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제시하는 중기 재원배분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재정소요를 분석하고 단년도 예산의 기본 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건전재정 도모

-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브렉시트의 파급효과, 조선업 구조조정 등 대내외 불확실성과 인구구조 변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과제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재정운용의 중점을 두었다.
- 세입여건 개선 등을 반영하여 총수입 증가율을 2015~2019년 계획대비 상향 조정하였고 중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지출 증가율도 상향 조정하였다.
- 재정수지는 2016~2020년 계획기간 중 단계적으로 개선되어 2020년에는 관리재정수지가 GDP 대비 $\Delta 1.0\%$ 수준으로 개선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또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대 초반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 재정의 역할을 성장과 고용 중심으로 강화

- 재원배분 측면에서는 일자리를 재정운용의 중심에 두었으며 산업 경쟁력 제고와 신성장동력 창출도 역점을 두었다.
-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와 저출산·고령화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총량 >

(단위 : 조원, %)

	'16		'17	'18	'19	'20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안					
▪ 재정수입	391.2	401.0	414.5	436.0	456.3	476.4	5.0
- 국세수입	222.9	232.7	241.8	252.1	264.5	277.2	5.6
▪ 재정지출	386.4	398.6	400.7	414.3	428.4	443.0	3.5
▪ 재정수지**		$\Delta 39.1$	$\Delta 28.1$	$\Delta 25.0$	$\Delta 23.2$	$\Delta 20.4$	
(GDP 대비, %)		($\Delta 2.4$)	($\Delta 1.7$)	($\Delta 1.4$)	($\Delta 1.2$)	($\Delta 1.0$)	
▪ 국가채무**		637.8	682.7	722.5	756.8	793.5	
(GDP 대비, %)		(39.3)	(40.4)	(40.9)	(40.7)	(40.7)	

* 국회 확정예산 기준, ** '16년은 추경안 기준

■ 우리나라의 재정은 예산(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19개)과 기금(67개)으로 구성

-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된다. 일반회계는 국세 등 일반 세입으로 경제개발, 복지, 교육, 국방 등 일반적 지출을 충당하는 회계이고,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 운영, 특정 자금 운영, 기타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회계이다.
- 기금은 사회보험료, 부담금 등 특정 자금을 운용하여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로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 재정의 회계구조 >

구분	예 산		기 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개수	1개	19개	67개
규모	총지출 400.5조원*		
내 용	세 입	세 출	기타 특별회계 (14개)
	- 내 국세 - 관세 - 교통세 - 교육세 - 종합부동산세 - 세외수입	- 사회복지 - 교육 - 교통및물류 - 국방 - 일반지방행정 - 농림수산물등	- 기업특별회계 (5개) - 양곡관리 - 조달 - 책임운영기관 - 우편사업 - 우체국예금 - 교통시설 - 농어촌구조개선 - 지역발전 - 에너지 및 자원사업 등
			사회보험성 (6개)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금융성 (8개)
			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기금 등
			계정성 (5개)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등
			사업성 (48개)
			주택도시기금, 남북협력기금 등

* '17년 국회 확정 본예산 기준

제 2 부

2017~2021년 경제·재정운용 여건

제2부 2017~2021년 경제·재정운용 여건

1. 대내·외 경제여건

(1) 대외여건

2017년

세계경제는 세계교역 회복, 유가 회복 등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성장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미국은 고용시장 호조 등에 힘입어 소비가 개선되며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연준의 자산 축소, 금리 인상 등은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로존은 소비 개선, 수출 호조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ECB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능성, 브렉시트 등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리스크 요인이다. 중국은 소비 및 수출 호조 등으로 성장세가 정부 목표치를 상회하는 등 안정적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나 부동산 시장 불안, 과도한 기업부채 등 하방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브라질, 러시아 등 자원 신흥국은 유가 회복 등으로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

2018년 이후

세계경제는 양호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 하방위험이 상존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은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 관련 불확실성 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신흥국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융 불안 가능성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IMF, '17.7월) >

	'16	'17	'18	'19	'20	'21
세 계	3.2	3.5	3.6	3.7	3.7	3.7
- 선진국	1.7	2.0	1.9	1.9	1.7	1.7
- 신흥국	4.3	4.6	4.8	4.9	4.9	5.0

(2) 대내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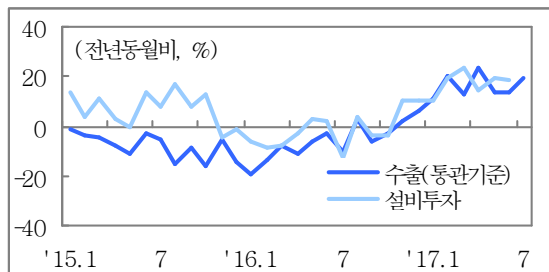
2017년

우리경제는 수출·투자를 중심으로 전년보다 개선된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내수는 IT 업황 개선, 건설업 호조 등으로 설비·건설 투자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가계부채 상환부담 등에 따른 소비 회복 지연은 제약 요인이다.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 반도체 등 주력품목 호조 등으로 전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은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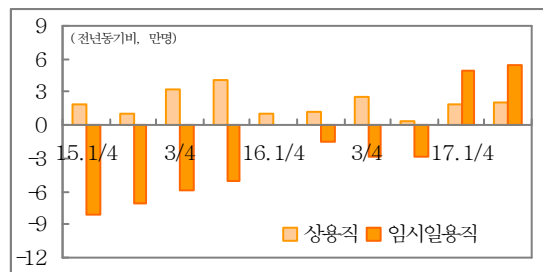
고용은 수출·투자 회복, 일자리 추경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취업자 증가폭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제조업 일자리 둔화, 일용직 증가 등으로 일자리의 질적 개선은 미흡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수출·투자 증가율 추이



* 자료 : 통계청, 무역협회

종사상지위별 신규채용 증감



* 자료 : 고용부

2018년 이후

세계경제 개선 및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2018년 이후에도 우리경제는 양호한 성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 성장 회복세, 교역량 개선 등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며, 추경을 비롯한 일자리 확대, 가계소득 확충 등 새정부 정책효과로 인한 소비 개선 등은 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美금리인상 등에 따른 가계부채·부동산 시장 불안, 기업구조조정 등 대내외 위협요인들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재정운용 여건

(1) 재정수입

■ 국세수입

2017년 수출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향후 경제성장세가 유지되고 2017년 세법개정안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국세수입은 안정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세수입은 경상성장을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2016~2020년 계획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보호무역주의 심화 가능성, 美 추가금리 인상 등에 따른 가계부채·부동산 리스크 등은 국세수입 증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 세외수입 및 기금수입

세외수입은 2016~2020년 계획보다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불공정 거래 행위 과징금 상한 상향, 연체·불납 결손액 해소, 한국은행 이익잉여금 실적 개선 추세('15년 1.9조원 → '16년 2.3조원) 등이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금수입은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확대 등으로 지속 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대내외 경기여건 변동에 따른 융자금 회수의 불확실성, 부담금 수입 증가율 감소 등 증가세는 다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재정지출

■ 의무지출 소요 증가로 재정운용의 경직성 심화

새 정부 정책과제 이행을 위한 소요를 적극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및 소득주도 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복지지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지면서 향후 노후소득 및 건강보장에 대한 재정 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의무지출 중 법에 따라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교부하는 지방이전재원(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세수입이 경상 성장률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계획기간 중 확대될 전망이다. 이자지출 규모도 국가채무가 늘어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의무지출 비중은 향후 복지지출 확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확대되어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량지출 비중 감소 전망

새 정부 정책과제 이행 소요 마련을 위해 2018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강도 높은 재량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분야간 투자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사업성과, 집행수준, 지출성격 등을 Zero-base에서 검토하여 성과가 낮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 및 불요불급한 지출을 감축하였다. 또한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에서 인프라·플랫폼 지원체제로 전환하는 등 질적 구조조정도 실시하였다. 국정과제 재원조달계획 이행을 위해 2022년까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할 것이므로 재량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각 부처 중기요구 기준 지출증가율은 연평균 6.2% 수준

2017년 1월말 각 부처에서 요구한 2017~2021년 중기사업 계획기간 중 지출규모 증가율은 연평균 6.2%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지출 증가율 3.5%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지출소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강도 높은 양적·질적 지출 구조조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16~'20년 계획 대비 '17~'21년 부처요구 >

(단위 : 조원, %)

	'16	'17	'18	'19	'20	'21	증가율
▪ '16~'20년 계획(A)	386.4	400.7	414.3	428.4	443.0		3.5
▪ '17~'21년 부처요구(B)		400.5	443.2	466.0	488.6	508.5	6.2
▪ 계획대비 추가요구(B-A)		△0.2	28.9	37.6	45.6		

제 3 부

2017~2021년 재정운용방향

제3부 2017~2021년 재정운용방향

1. 재정운용 기본방향

■ 새 정부 정책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적극적 역할 추진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등을 거치면서 이전에 비해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되는 가운데 분배까지 악화되며 저성장 고착화와 양극화 심화의 구조적·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고도성장을 위한 물적자본 중심의 투자전략과 모방·추격형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경제·사회 구조의 전반을 바꾸는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이 시급하다.

정부는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 총지출 증가속도를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관리하는 등 재정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 복지, 교육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첫째,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어 재정정책을 재설계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에 대한 재정투자를 총지출 증가율 이상으로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재정의 분배 개선 효과 분석,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분배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셋째, 누리과정 어린이집 국고지원, 대학 등록금 부담완화 등 사람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기초연구 R&D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R&D 투자 효율화도 병행하고, 선제적 예방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민안전도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Zero-base에서 강력한 양적·질적 지출 구조조정 추진

정부는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Zero-base에서 강도 높은 양적·질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제개혁도 병행할 계획이다.

우선,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성 지출 등에 대한 양적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8년 예산안에 당초 계획(9.4조원) 대비 2.1조원 늘어난 11.5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반영하였다.

이와 함께, 보상체계 혁신, 전달체계 개선, 정기적 준치평가 등을 통한 질적 구조조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2018년 예산안에 대학창업·ODA 융합예산 편성 등을 추진하였다.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을 추진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여력 있는 일부 고소득층·대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등 고소득층·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참여를 확대하여 예산과정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우선, 국가 단위에서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민이 예산과정에서 직접 참여하여 제안·심사·결정하게 되어 예산과정에서 민주성을 크게 강화할 것이다.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市(1988년), 서울시(2012년) 등 전세계 50개국 1,500여개 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정정보 공개 내용 등을 대폭 확대하고 공개주기도 단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국민의 모니터링을 통해 예산낭비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1) 재정수입

■ 재정수입¹⁾은 연평균 5.5% 증가 전망

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재정수입은 2017~2021년 기간 중 연평균 5.5%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2017년 국세수입 호조세, 2018년 이후 경제성장 회복세 등에 따른 것으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재정수입의 연평균 증가율(5.0%)보다 높은 수준이다.

< 중기 재정수입 전망 >

(단위 : 조원, %)

	'17		'18	'19	'20	'21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 재정수입	414.3	423.1	447.1	471.4	492.0	513.5	5.5
(증가율)	(5.9)	(8.1)	(7.9)	(5.4)	(4.4)	(4.4)	
○ 국세수입	242.3	251.1	268.2	287.6	301.0	315.0	6.8
○ 세외수입	26.4	26.4	26.7	28.1	27.4	26.7	0.3
○ 기금수입	145.6	145.6	152.2	155.7	163.6	171.8	4.2

* '17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1) 재정수입은 예산수입과 기금수입을 합친 규모이며, 예산수입은 크게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나뉜다.

■ 국세수입은 연평균 6.8% 증가

2017년 국세수입 호조세와 2018년 이후 경제성장세 유지 등에 따라 국세수입은 2016~2020년 계획(연평균 5.6% 증가)보다 개선된 연평균 6.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중기 국세수입 전망 >

(단위 : 조원, %)

	'17		'18	'19	'20	'21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 국세수입	242.3	251.1	268.2	287.6	301.0	315.0	6.8
(증가율)	(-)	(-)	(10.7)	(7.2)	(4.7)	(4.6)	

* '17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 세외수입은 연평균 0.3% 증가

세외수입은 2017~2021년 기간 중 26~28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 이익잉여금 개선 등의 요인에 의해 2019년까지 28조원 수준으로 증가한 후 2021년에는 2018년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중기 세외수입 전망 >

(단위 : 조원, %)

	'17		'18	'19	'20	'21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 세외수입	26.4	26.4	26.7	28.1	27.4	26.7	0.3
(증가율)	(△2.9)	(△2.9)	(1.0)	(5.2)	(△2.5)	(△2.5)	

* '17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 기금수입은 연평균 4.2% 증가

기금수입은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의 확대에 따라 2017~2021년 기간 중 연평균 4.2% 증가할 전망이다.

< 중기 기금수입 전망 >

(단위 : 조원, %)

	'17		'18	'19	'20	'21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 기금수입	145.6	145.6	152.2	155.7	163.6	171.8	4.2
(증가율)	(3.2)	(3.2)	(4.6)	(2.3)	(5.1)	(5.0)	

* '17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 조세부담률은 '16년(19.4%)보다 증가할 전망

조세부담률은 경상성장률 수준의 국세수입 증가로 '18년 이후 19.6~19.9%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부담률은 같은 기간 27%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중기 조세부담률 전망 >

(단위 : %)

	'17		'18	'19	'20	'21
	본예산	추경				
■ 조세부담률	18.8	19.3	19.6	19.9	19.9	19.9
■ 국민부담률	25.8	26.3	27.0	27.5	27.7	27.8

* '17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 지방세부담률은 '16년 4.6% 수준과 동일 전제

■ 조세부담률

조세수입(국세 및 지방세 수입)이 경상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민들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 국민부담률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경상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조세 부담률보다 포괄적으로 국민부담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사회보장기여금은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여금을 의미한다. 사회보장부담률은 사회보장기여금이 경상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며, 조세부담률에 이를 더하여 국민부담률을 산출한다.

$$* \text{국민부담률} = \text{조세부담률} + \text{사회보장부담률}$$

< 주요국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

(단위: %, '15년 기준)

	한국	미국	일본 (2014년)	영국	프랑스	OECD 평균 (2014년)
조세부담률	18.5	20.1	19.3	26.5	28.6	25.1
국민부담률	25.2	26.4	32.0	32.5	45.5	34.2

*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16년)

(2) 재정지출

가. 총괄

■ 재정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5.8%

정부는 2017~2021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5.8%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는 2016~2020년 계획의 재정지출 증가율인 3.5%보다 2.3%p 상향 조정한 것이다.

새 정부 정책과제 이행 및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고려하여 재정지출을 확대한 것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유지할 계획이다.

< 중기 재정지출 계획 >

(단위 : 조원, %)

	'17		'18	'19	'20	'21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 재정지출	400.5	410.1	429.0	453.3	476.7	500.9	5.8
① 예산·기금별 구분							
○ 예산지출	274.7	280.3	295.0	313.3	328.1	343.4	5.7
(비중)	(68.6)	(68.3)	(68.8)	(69.1)	(68.8)	(68.6)	
○ 기금지출	125.9	129.8	133.9	140.0	148.5	157.5	5.8
(비중)	(31.4)	(31.7)	(31.2)	(30.9)	(31.2)	(31.4)	
② 지출성격별 구분							
○ 의무지출	197.0	201.1	217.9	233.3	246.5	260.1	7.2
(비중)	(49.2)	(49.0)	(50.8)	(51.5)	(51.7)	(51.9)	
○ 재량지출	203.5	209.0	211.0	220.0	230.2	240.9	4.3
(비중)	(50.8)	(51.0)	(49.2)	(48.5)	(48.3)	(48.1)	

* '17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나. 의무지출

■ 의무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7.2%

2010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부터는 재정지출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하고 증가율, 산출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의무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의해 단가, 대상 등이 결정되므로 지출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여력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지출규모의 통제 가능성, 재정건전성 등 측면에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무지출의 범위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재정지출에 한정하였으며, 정부 총지출 산정방식에 따라 보전거래(국채·차입금 등 원금상환), 내부거래(회계/기금간 거래),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 사업은 제외하였다.

의무지출은 2017~2021년 기간 중 연평균 7.2%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총지출 증가율 5.8%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49.2%에서 2018년에 50%를 초과하여 2021년 51.9%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의무지출 유형별 전망 >

(단위 : 조원, %)

	'17		'18	'19	'20	'21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 지방이전재원	87.6	91.0	99.4	107.0	112.6	117.5	7.6
▪ 복지분야 법정지출	87.2	87.8	95.7	103.1	109.9	118.5	8.0
▪ 이자지출	16.1	16.1	16.7	17.0	17.6	17.7	2.4
▪ 기타 의무지출	6.0	6.0	6.1	6.2	6.4	6.3	1.2

* '17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다. 재량지출

■ 재량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4.3%

재량지출도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및 혁신성장 등을 선도하기 위해 연평균 4.3% 수준으로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재량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감축해나갈 계획이다.

■ 지방이전재원²⁾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전액 및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6년까지는 내국세 총액*의 20.27%와 교육세 전액을 지원하였다.

* 담배값 개별소비세의 20% 제외(소방안전교부세)

2017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27%를 기존 방식대로 교부하되, 교육세 일부를 세입으로 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17~'19년 3년 한시)하여 안정적인 누리과정 지원을 도모한다.

지방이전재원 중 의무지출은 정부에서 추계한 내국세, 종합부동산세 및 교육세 등 세입 전망치와 의무지출 사업 등을 통해 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2018년 의무지출은 세입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12.0조원(14.4%) 증가하고, 이후에도 세입의 증가에 따라 2017년 83.6조원에서 2021년 115.7조원으로 연평균 8.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지방이전재원(의무지출) 전망 >

(단위 : 조원, %)

	'17	'18	'19	'20	'21	연평균 증가율
【 합 계 】	83.6	95.6	103.3	110.7	115.7	8.5
▪ 지방교부세	40.7	46.0	49.7	52.5	54.9	7.8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2.9	49.6	53.6	58.2	60.8	9.1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 제외

- 2)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조정제도에는 교부금(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지방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의미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이전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율과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꾸준히 상향 조정해왔다. 지방교부세율은 1995년 13.27%에서 2006년 19.24%(내국세 대비비율)로,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은 1995년 11.8%에서 2010년 20.27%로 상향조정되었다.

■ 보건·복지·고용 법정지출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무지출로 분류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장제급여)에 대한 국가부담액은 2017년 9.6조원에서 2021년 12.7조원으로 연평균 7.3%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 소요추정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 확대와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등을 고려하여 추계하였다.

급여별로 보면, 생계급여는 2017년 3.6조원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 2021년에는 4.1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의료급여는 2017년 4.8조원에서 2021년 6.5조원으로 8.1%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대상 확대 및 단가 인상 등 감안 2017년 0.9조원에서 2021년 1.8조원으로 연평균 18.4% 증가할 전망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출 전망 >

(단위: 억원, %)

	'17	'18	'19	'20	'21	연평균 증가율
【 합 계 】	95,609	103,497	113,841	120,113	126,513	7.3
▪ 생계급여	36,702	37,216	38,332	39,482	40,667	2.6
▪ 의료급여	47,992	53,466	57,209	61,213	65,498	8.1
▪ 주거급여	9,399	11,252	16,527	17,519	18,466	18.4
▪ 교육·해산·장제급여	1,516	1,563	1,773	1,899	1,882	5.6

② 건강보험

건강보험 관련 의무지출 사업은 2017년 7.6조원에서 2021년 9.6조원으로 연평균 6.2%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라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 예상수입의 14% 상당액을 지원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는 보험료 예상수입의 6% 상당액(단,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의 65% 상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이러한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부칙에 따라 2022년말까지 한시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018년 일반회계 지원규모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전년보다 0.4조원 가량 증액하였다. 2018년 이후에는 2022년까지 일반회계 지원규모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규모는 2018년 담배 반출량 추정치인 34.5억갑을 기준으로 편성하였다. 2018년 이후에는 금연효과 등으로 담배반출량이 감소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국가부담금보험료

향후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국가부담금보험료는 최근 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2021년까지 연평균 5.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건강보험 의무지출 전망 >

(단위 : 억원, %)

	'17	'18	'19	'20	'21	연평균 증가율
【 합 계 】	75,807	80,713	84,965	90,341	96,371	6.2
▪ 가입자 지원(일반)	48,828	54,201	58,474	63,825	69,788	9.3
▪ 가입자 지원(기금)	19,936	18,848	18,444	18,067	17,711	△1.1
▪ 공무원·교직원 국가부담금	7,043	7,663	8,047	8,449	8,871	5.9

③ 4대 공적연금

○ 국민연금

노령·유족·장애연금 및 반환일시금으로 구성되는 국민연금 의무지출은 2017년 19.5조원에서 2021년 25.8조원으로 연평균 7.2% 증가할 전망이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2017년 367만명에서 2021년에는 486만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은 2017년 15.5조원에서 2021년 21.4조원으로 연평균 8.4% 증가할 전망이다. 연금수급인원 증가(2017년 45.8만명 → 2021년 59.3만명, 연평균 6.7%)에 따른 퇴직급여 증가분과 퇴직자 증가(연평균 4.8%)로 인한 퇴직수당 증가분이 반영되었다.

○ 사학연금

사학연금 의무지출은 2017년 3.0조원에서 2021년 4.1조원으로 연평균 7.9% 증가할 전망이다. 연금수급자 수는 2017년 10.4만명에서 2021년 14.0만명으로 연평균 7.7% 증가하는데, 이는 연금선택률 및 퇴직자 증가, 수급기간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과거 3년 평균 수급자 증가율을 반영한 결과이다.

○ 군인연금

군인연금기금 의무지출은 2017년 3.1조원에서 2021년 3.6조원으로 연평균 4.3% 증가할 전망이다. 평균수명 증가로 인해 연금수급기간 장기화 및 수급인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최근 5년간 평균 순증인원을 연금지급금 예상에 반영하였다.

< 4대 공적연금 의무지출 전망 >

(단위 : 억원, %)

	'17	'18	'19	'20	'21	연평균 증가율
【 합 계 】	410,748	441,268	473,976	509,792	549,500	7.5
▪ 국민연금	194,997	211,779	225,011	242,900	257,998	7.2
▪ 공무원연금	155,111	166,982	180,995	194,596	214,482	8.4
▪ 사학연금	29,925	30,399	34,507	37,395	40,629	7.9
▪ 군인연금	30,716	32,108	33,463	34,901	36,390	4.3

④ 노인부문

○ 기초연금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액('17년 최대 20.6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2017년 약 8.1조원에서 2021년 14.2조원(국비 기준)으로 연평균 15.1% 증가할 전망이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이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은 2018년 치매등급 신설(6등급) 및 요양보험료 수입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2017년 6,689억원에서 2021년 9,168억원으로 연평균 8.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노인부문 의무지출 전망 >

(단위 : 억원, %)

	'17	'18	'19	'20	'21	연평균 증가율
【 합 계 】	87,650	105,638	119,316	127,504	151,060	14.6
▪ 기초연금	80,961	98,400	111,485	119,030	141,892	15.1
▪ 노인장기요양보험	6,689	7,238	7,831	8,474	9,168	8.2

⑤ 보훈부문

국가유공자, 유족 등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보상금은 2017년 2조 6,047억원에서 2021년 3조 15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1급과 2급 상이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은 인원감소분을 반영하여 2017년 581억원에서 2021년 498억원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을 위해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2017년 6,147억원에서 2021년 6,412억원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2018년 단가 8만원 인상 이후 2021년까지 지급단가를 동결하고 지급인원은 참전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감소 효과를 반영한 결과이다.

그 외 국가유공자 등의 의료지원을 위한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비는 2018년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율을 60%에서 90%로 확대하여, 2017년 5,544억원에서 2021년 7,594억원으로 연평균 8.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보훈부문 의무지출 전망 >

(단위 : 억원, %)

	'17	'18	'19	'20	'21	연평균 증가율
【 합 계 】	41,776	46,399	46,995	47,662	48,273	3.7
▪ 보상금	26,047	27,438	28,249	29,215	30,015	3.6
▪ 간호수당	581	555	535	516	498	△3.8
▪ 참전명예수당	6,147	7,696	7,267	6,840	6,412	1.1
▪ 보훈병원 · 위탁병원 진료	5,544	7,009	7,113	7,347	7,594	8.2
▪ 기타	3,458	3,701	3,731	3,745	3,754	2.1

* 보상금: '18) 5%, '19) 3.5%, '20) 3.0%, '21) 2.5% 가정/ 지급인원: '17년 191천명→'21년 197천명(+6천명)

* 간호수당: 단가동결 / 지급인원 : '17년 3,142명→'21년 2,648명(△494명)

* 참전수당: '18년 8만원 인상, '19년부터 단가동결, 지급인원 : '17년 213천명→'21년 178천명(△35천명)

■ 이자지출

○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채이자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채이자에는 최근 금리하락에도 불구하고,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적자성 국가채무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17년 11.8조원에서 2018년 12.7조원으로 증가한 이후 2021년 13.6조원 수준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 주택도시기금 국공채이자

주택도시기금 국공채이자에는 2017년 1.6조원 수준이나, 2018년 1.2조원으로 감소한 이후 2019년 1.3조원, 2020년 1.5조원 수준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국공채이자에는 주택 인·허가, 등기·등록시 발행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5년 만기)에 따른 이자가 대부분인데, 최근 저금리 추세에 따라 2018년까지는 이자규모가 감소하다가, 2019년부터는 상환원금이 증가(2018년 10.1조원, 2019년 12.2조원, 2020년 16.1조원)함에 따라 이자상환 규모도 함께 증가할 전망이다.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지급이자

우체국예금 지급이자에는 저금리 기조 유지 등으로 예금수신고 소폭 증가(2017년 61.5조원 → 2021년 63조원)가 예상되며, 조달금리 인상(2017년 2.64% → 2021년 2.79%) 등으로 인해 지급이자에는 소폭 증가가 예상되어 2017년 기준 1.6조원에서 2021년 1.8조원으로 연평균 2.0% 증가할 전망이다.

< 이자지출 전망 >

(단위: 억원, %)

	'17	'18	'19	'20	'21	연평균 증가율
【 합 계 】	161,269	166,829	170,454	175,537	177,082	2.4
▪ 공공자금관리기금	118,270	126,926	128,998	131,154	135,583	3.5
▪ 주택도시기금	15,941	12,419	13,196	15,246	11,509	△7.8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16,286	16,286	16,728	17,175	17,627	2.0
▪ 기 타	10,772	11,198	11,531	11,962	12,363	3.5

■ 기타 의무지출

①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³⁾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은 쌀 생산 여부와 관계없이 논·밭의 기능과 형상을 유지하는 경우 소득을 직접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수매제 등 가격지지정책과 달리 논·밭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⁴⁾하기 위해 정부재정에서 직접 개별농가에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WTO에서 허용하는 정책(허용보조)이다.

지원단가는 매년 100만원/ha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대상 농지(1998~2000년간 논·농사에 이용된 농지)는 농지전용 등으로 연간 △0.85% 수준으로 지속 감소(2012년 : 866천ha → 2016 : 837천ha)하는 점을 고려하여 809천ha로 산정하였다.

② 유엔 PKO(평화유지활동) 예산분담금

국제기구분담금 중 유엔 PKO(평화유지활동) 예산분담금은 유엔 PKO(평화유지활동) 예산 절감 노력을 통해 2017년 1,946억원에서 2018년 1,682억원으로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따른 UN 분담율 증가 전망 및 환율 전망 등에 따라 2017~2021년 전체적으로는 연평균 4.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기타 의무지출 전망 >

(단위 : 억원, %)

	'17		'18	'19	'20	'21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 합 계 】	60,479	60,479	61,098	61,771	64,225	63,181	1.1
▪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8,160	8,160	8,090	8,021	7,953	7,885	△0.9
▪ 유엔PKO예산분담금	1,946	1,946	1,682	2,029	2,151	2,280	4.0
▪ 기 타	50,373	50,373	51,326	51,721	54,121	53,016	1.3

3) 정부가 시장기능을 통하지 않고 재정에 의하여 농가에 직접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쌀소득고정직불금 등 9개의 직불금이 시행 중에 있음

4) 홍수조절, 환경보전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

(3)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 관리재정수지⁵⁾ 적자는 △2% 내외에서 관리

2017~2021년 계획기간 중 관리재정수지는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GDP 대비 △2% 내외에서 관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8년 관리재정수지는 2017년보다 소폭 개선된 GDP 대비 △1.6%로 예상되고, 2019년 이후부터는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보다 높게 유지되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GDP 대비 △2.1%로 예상된다.

관리재정수지에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지가 개선되면서 지속적으로 흑자를 시현할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가 2021년에는 GDP 대비 0.6%에 이를 전망이다.

< 중기 재정수지 전망 >

(단위 : 조원, %)

	'17		'18	'19	'20	'21
	본예산	추경				
■ 관리재정수지	△28.3	△28.9	△28.6	△33.0	△38.4	△44.3
(GDP대비, %)	(△1.7)	(△1.7)	(△1.6)	(△1.8)	(△2.0)	(△2.1)
※ 통합재정수지	13.7	13.0	18.1	18.0	15.3	12.5
(GDP대비, %)	(0.8)	(0.8)	(1.0)	(1.0)	(0.8)	(0.6)
■ 경상 GDP 성장률	4.6*		4.5	4.9	4.9	4.9

* '17.7.25 발표

5)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입 - 통합재정지출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수지

■ 국가채무비율은 40% 초반 수준에서 관리

2017~2021년 계획기간 중 국가채무는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선제적 투자 등 적극적 재정정책 추진에 따라 GDP 대비 40% 초반 수준에서 관리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9년부터 소폭으로 상승하여, 2020년에 40.3%, 2021년에는 40.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0%대 수준은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양호한 수준으로, 국제기구 및 국제 신용평가사에서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 저출산·고령화, 통일 등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에 따른 중장기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적·질적 지출구조조정,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 국가채무를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중기 국가채무 전망 >

(단위 : 조원, %)

	'17		'18	'19	'20	'21
	본예산	추경안				
■ 국가채무	682.4	669.9*	708.9	749.1	793.0	835.2
(GDP대비, %)	(40.4)	(39.7)*	(39.6)	(39.9)	(40.3)	(40.4)
■ 경상 GDP 성장률	4.6**		4.5	4.9	4.9	4.9

* 추경안 기준, 추경 확정기준으로 국가채무 GDP대비 39.6%

** '17.7.25 발표

■ 통합재정수지

- 당해 회계연도의 통합재정수입에서 통합재정지출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통합재정수입 및 통합재정지출은 예산, 기금 등 정부 재정수입·지출 규모에서 회계와 기금간 내부거래, 차입 및 채무 상환 등의 보전거래를 제외하여 계산한다.

<table><tr><th>통합재정수입</th></tr><tr><td> ■ 경상수입 (조세,세외수입 등) ■ 자본수입 (토지매각 등) </td></tr></table>	통합재정수입	■ 경상수입 (조세,세외수입 등) ■ 자본수입 (토지매각 등)	-	<table><tr><th>통합재정지출</th></tr><tr><td> ■ 경상지출 (공사비, 용역비 등) ■ 자본지출 (토지매입비 등) ■ 순융자 </td></tr></table>	통합재정지출	■ 경상지출 (공사비, 용역비 등) ■ 자본지출 (토지매입비 등) ■ 순융자	=	<table><tr><th>통합재정수지</th></tr></table>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입									
■ 경상수입 (조세,세외수입 등) ■ 자본수입 (토지매각 등)									
통합재정지출									
■ 경상지출 (공사비, 용역비 등) ■ 자본지출 (토지매입비 등) ■ 순융자									
통합재정수지									
+		+							
<table><tr><th>보전수입</th></tr><tr><td> ■ 국채발행수입 ■ 차입금 · 차관수입 ■ 전기이월 (세계잉여금포함) ■ 내부거래수입 (회계 · 기금간) </td></tr></table>	보전수입	■ 국채발행수입 ■ 차입금 · 차관수입 ■ 전기이월 (세계잉여금포함) ■ 내부거래수입 (회계 · 기금간)		<table><tr><th>보전지출</th></tr><tr><td> ■ 국채원금상환 ■ 차입금 · 차관상환 ■ 차기이월 ■ 내부거래지출 (회계 · 기금간) </td></tr></table>	보전지출	■ 국채원금상환 ■ 차입금 · 차관상환 ■ 차기이월 ■ 내부거래지출 (회계 · 기금간)			
보전수입									
■ 국채발행수입 ■ 차입금 · 차관수입 ■ 전기이월 (세계잉여금포함) ■ 내부거래수입 (회계 · 기금간)									
보전지출									
■ 국채원금상환 ■ 차입금 · 차관상환 ■ 차기이월 ■ 내부거래지출 (회계 · 기금간)									

■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하여 산출한다. 사회보장성 기금수지 흑자는 장래의 연금·보험 등의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것으로 당해연도의 재정건전성 상황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재정수지 산정시 제외한다.

*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

* 사회보장성 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3.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1) 기본방향

■ 사람중심의 지속성장 경제 구현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 추진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 분야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사람중심의 지속성장 경제 구현에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에 대한 재정 투자를 총지출 증가율 이상으로 지속 확대하고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사업에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과 사회안전망을 지속 확충하고 교육 등 사람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혁신성장 분야에 집중 투자

그간의 투자 스톱을 감안하여 경제분야의 투자 내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혁신성장을 위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기초연구에 대한 R&D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SOC 분야에서는 시설투자는 축소하고 교통서비스의 공공성 제고, 생활밀착형 안전 강화, 성장동력 확충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 국가안보·국민안전 관련 투자 지속 확대

안보·안전 분야에서는 국방 핵심전력 확대와 병 급여의 단계적 인상 등 방위력 개선에 집중 투자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조성을 위해 재해 예방 인프라 확충 및 해경·소방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2)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조원, %)

구 분	'17	'18	'19	'20	'21	'17~'21 연평균
1. 보건·복지·고용	129.5	146.2	159.4	172.7	188.4	9.8
2. 교 육	57.4	64.1	68.1	72.7	75.3	7.0
3. 문화·체육·관광	6.9	6.3	6.4	6.5	6.6	△1.0
4. R&D	19.5	19.6	19.7	19.8	20.0	0.7
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0	15.9	15.7	15.4	15.1	△1.5
6. SOC	22.1	17.7	17.0	16.5	16.2	△7.5
7. 농림·수산·식품	19.6	19.6	19.5	19.4	19.2	△0.5
8. 환 경	6.9	6.8	6.7	6.6	6.5	△1.6
9. 국 방(일반회계)	40.3	43.1	45.3	47.7	50.4	5.8
10. 외교·통일	4.6	4.8	4.9	5.0	5.0	2.3
11. 공공질서·안전	18.1	18.9	19.0	19.2	19.5	1.9
12. 일반·지방행정	63.3	69.6	74.2	77.9	81.3	6.5

■ 보건·복지·고용 분야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재량지출 증가율은 중기 계획 5년간 연평균 14.1% 수준으로 전망된다.(2017년 40.0 → 2021년 67.9조원)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일자리 창출 및 청년취업 지원과 서민 주거 수요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취업률 제고를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취업 후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확대할 계획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새로일하기센터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또한 청년, 신혼부부 및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과 전세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현장 방문 차량도 지원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 교육 분야

교육분야 재량지출은 2017~2021년 중기 계획기간 중 연평균 7.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2017년 57.4 → 2021년 75.3조원) 동 기간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포함)은 연평균 7.5% 증가되어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2017년 46.9 → 2021년 62.7조원) 정부는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국립대학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거점 국립대학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강화 및 대학재정 지원사업 개편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지출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면서 교육 최종수요자인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출구조를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 분야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량지출은 2017~2021년 중기 계획기간 중 연평균 $\Delta 0.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2017년 6.9 → 2021년 6.6조원) 이는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등 완료 사업이 증가하여 2018년 예산규모(6.3조원)가 2017년대비 8.2%(0.6조원) 감액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2016~2020년 계획(+8.6%)보다 증가율이 대폭 축소되었으나, 문화예술의 창작과 향유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콘텐츠·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지역밀착형 생활체육 시설이 충분히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분야는 지속적인 지출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보조사업 지원방식 개선 등 세출 구조개선을 추진하여 재정지출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면서도 국민의 문화기본권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 R&D 분야

R&D 분야 재량지출 증가율은 중기 계획 5년간 연평균 0.7% 수준으로 전망되어(2017년 19.4 → 2021년 19.9조원) 2016~2020년 계획(연평균 1.4%)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그간 R&D 분야는 정부 총지출을 상회하여 증가해왔지만 투자 대비 효율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수요자 중심 및 성과에 기반한 R&D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현재 R&D 분야는 세계적인 수준의 투자비중(GDP 대비)을 유지하고 있고, 더 이상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성장을 기할 시점이라는 지적 등을 반영하였다. 다만, R&D 분야는 미래를 대비한 투자임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새정부 국정과제 등 핵심분야에 대해서는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 등 원천기술 확보와 기존 기술·산업의 융합 R&D 및 인재양성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자 주도

(Bottom-up)의 창의적 기초연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행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장기계속사업에 대한 일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성과가 미흡하거나 우선 순위가 낮은 사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화하는 등 지출효율화 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재량지출 증가율은 2017~2021년 계획기간 동안 연평균 $\Delta 1.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2017년 15.1 → 2021년 14.2조원) 이는 주로 에너지 분야에서 용자사업의 단계적 감축, 해외자원개발 내실화 등으로 인한 감소분 때문이다.

향후에도 유사중복 통폐합, 성과미흡 및 집행부진 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면서 민간역량이 충분히 성숙한 부문에 대한 투자는 과감히 줄여나갈 계획이다. 지출효율화로 마련된 재원은 크리에이티브랩 등 혁신성장 거점 구축, 모험자본 조성 및 안전망 지원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20% 달성과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 등에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 SOC 분야

SOC분야 재량지출은 2017~2021년 계획기간 동안 연평균 $\Delta 7.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2017년 22.1 → 2021년 16.2조원). 이는 그간 축적된 SOC스톡 및 소득주도 성장 등 성장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투자규모의 양적 확대보다는 투자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신규사업은 최소화하고 고규격·과잉설계를 지양하면서, 시설의 신설·확장보다 기존시설의 활용도 제고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과거 집행실적 및 투자성과에 따라 계속사업의 연차소요를 재검검한다. 다만,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투자 및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예방적 투자, 4차 산업혁명과 미래신산업 대응, 지역의 산업기반 확충 등에 대한 재정투자는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 명절 무료화 등 교통시설의 공공성 및 편의성을 제고한다.

■ 농림·수산·식품 분야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량지출 증가율은 2017~2021년 계획기간 동안 연평균 $\Delta 0.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2017년 16.7 → 2020년 16.2조원) 이는 그간 쌀 중심의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과 성과미흡 사업의 구조조정,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은 실소요를 감안하여 감축하기 때문에 감소하지만, 농어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스마트팜 확대, 농어업 후계 인력 양성 등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위한 질적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새정부의 국정과제의 이행과 농정현안 해결 등에 중점을 두면서, 농어업의 체질개선 및 평가강화 등 지출 구조조정 노력을 지속 추진하여 농어업 발전으로 도모할 계획이다.

■ 환경 분야

환경 분야 재량지출 증가율은 2017~2021년 계획기간 동안 연평균 $\Delta 1.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2017년 6.9 → 2021년 6.5조원) 이는 그동안 환경기초시설(하수관로, 하수처리장 등)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투자규모의 양적 확대보다 투자 효율화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특히 하수관로 정비의 경우 신설투자에서 노후 하수관로 개량(교체·보수)에 중점 투자하였다.

아울러, 미세먼지, 생활화학제품, 녹조, 수질오염 등 국민의 삶을 현저히 저해하는 환경현안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여 안전관리를 강화

하였다. 미세먼지 저감 실효성 제고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노후 화물차, 건설기계 등에 대한 조기폐차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생태계 보존·복원 강화, 폐기물 에너지화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를 지속 투자하는 등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국방 분야

국방 분야 재량지출은 2017~2021년 중기 계획기간 중 연평균 5.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2017년 37.7 → 2021년 47.0조원) 이는 북 핵·미사일 위협대비 핵심전력인 Kill-chain, KAMD(Korea Air & Missile Defense,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및 KMPR(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대량 응징보복)의 3축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 방위력개선비를 대폭 확충하기 때문이다.

또한 방위력개선분야의 투자 확대에 따른 무기체계에 대한 정비소요 등 군수지원 및 예비군 훈련장 현대화 및 시설 개선 등에 따라 재량지출 규모가 증가하였다. 국방분야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장병 근무여건 개선과 병영문화 개선, 국방개혁에 따른 간부증원 등으로 병력유지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따라서 군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체계 수립과 총사업비 관리 강화, 국방비에 대한 소요검증 및 사업타당성 조사 강화 등을 통하여 국방비 지출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 외교·통일 분야

외교·통일 분야 재량지출은 2017~2021년 중기 계획기간 중 연평균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2017년 4.6 → 2021년 5.0조원) 된다. 이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출범을 맞아 ODA를 통한 국제사회 기여를

지속 확대하고, 미·중·일 등 핵심 국가 및 아세안·인도와의 전략적 외교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을 위한 실질적 통일준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외교·통일 분야의 지원 확대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향상시키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데 이바지 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집행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 공공질서·안전 분야

공공질서·안전 분야 재량지출은 2017~2021년 중기 계획기간 중 연평균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2017년 18.1 → 2021년 19.5조원)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 조력 확대,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 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강화, 빠르고 편리한 전자소송서비스 확대, 기초 치안활동 및 해양재난 대응역량 강화 등에 중점 투자하였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지속 확충해 나가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고 교정행정의 패러다임을 “수용” 중심에서 “사회복귀 지원”으로 전환해나가기 위해 교도작업과 직업훈련을 취업연계형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공동체 중심의 예방치안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치안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재해예방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육·해상에서의 재난 및 대응 능력도 지속 확충해나가고자 한다.

■ 일반·지방행정 분야

일반·지방행정 분야 재량지출 증가율은 중기 계획기간 중 연평균 4.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2017년 10.2 → 2021년 12.4조원) 또한 국세-지방세 구조개선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으로 8:2 수준인 국세-

지방세 비율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이 공공 및 민간부문의 지역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향후 열린혁신 기반을 조성하고, 빅데이터, 공공데이터 개방 등을 활성화하는 한편, 2018년 지방선거 등의 공정하고 차질없는 지원을 준비할 계획이다.

제 4 부

12대 분야별 투자방향

제4부 12대 분야별 투자방향

1. 보건·복지·고용 분야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 복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충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건강보험(1977), 국민연금(1988), 고용보험(1995), 국민기초생활보장(2000), 기초노령연금(2008) 제도 등 사회보장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최근에도 4대 중증 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질환),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2013), 기초연금 도입(2014) 및 장애인연금 확대(2014),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개편(2015) 등 복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확충해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복지 분야 투자규모는 최근 5년간 정부 총지출 증가율(4.0%)을 상회하는 연평균 7.4%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정투자 추이 >

	'13	'14	'15	'16	'17	연평균 증가율
* 보건·복지·노동 분야(조원)	97.4	106.4	115.7	123.4	129.5	7.4%

* 본예산 기준

■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강화

2014년 12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을 통해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하였고, 2015년 7월부터는 급여별 선정 기준과 지원 내용을 다층화하는 맞춤형 급여체계를 시행하고 있다.

새로 도입된 맞춤형 급여체계는 모든 혜택이 수급자에게만 집중되는 최저생계비 단일기준(All or Nothing)을 폐지하는 대신, 생계(기준 중위 소득의 30%)·의료(40%)·주거(43%)·교육(50%)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다층적 급여체제로 개편하여 소득이 더 늘어나도 주거비, 교육비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201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고 특히, 교육 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총 수급자 수가 2014년 133만명에서 2016년 165만명으로 늘어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였다.

■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 확충

지난 5년간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다. 만 0~5세 영유아에 대해 무상보육을 실시(2013)하여 양육 부담을 낮추고, 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높이고 아빠의 달을 시행(2014)하여 육아 휴직 사용을 활성화하였다.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2008) 뿐만 아니라 주택연금(2007), 농지연금(2011) 등 다양한 노후 대비 수단을 도입하여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도입(2008) 및 대상자 확대, 노인 틀니(2012) 및 임플란트 급여화(2014)를 통해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었다.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추진

지난 5년간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고 집중 투자한 결과, 일자리예산이 지속 확대되었다. 특히, 정부 일자리 예산이 시장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중장기적으로 고용성과가 높은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분야에 투자를 확대하였다. 그 결과 취업성공패키지('16년 30만명), 고용복지+센터('16년 70개소), 한국형 도제식 교육훈련인 일학습병행제

(‘16년 참여기업 6.3천개소)가 대폭 확대되었다. 반면, ‘10년부터 5차례에 걸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도 추진하여 유사·중복사업을 통합·정비하고, 사업의 성과평가 및 일모아시스템을 통한 통합 관리를 강화하였다. 2016년에는 KDI를 통해 일자리사업 심층평가를 실시하여 196개 일자리사업을 185개로 통합·단순화하고, 전달체계 효율화 및 일자리사업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를 강화하였다.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 취약계층별 맞춤형 소득지원체계 확충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간 개선 추세를 보여 왔던 소득분배 지수가 2016년 들어 악화(소득 5분위 배율 2015년 5.11 → 2016년 5.45)되는 등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소득주도·지속가능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아동·노인·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 계층에 대한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주거·의료비 등 서민 생활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확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주거·의료·교육비 등 필수 생계비의 부담이 높아 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저소득층 교육 지원 확대 등 서민 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 가처분 소득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확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2017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특히, 2017년 들어 신생아 수가 급감(상반기 출생아 수 2016년 21.5만명 → 2017년 18.9만명)하는 등 저출산 현상이 우리경제에

심각한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정부는 합계출산율을 제고하고자 제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착실히 추진하여 임신·출산·육아 등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일을 통한 자립지원 강화

각종 복지 제도를 일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 체계로 설계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적극적인 근로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자활근로 중 민간 시장 취·창업의 가능성이 높은 시장진입형의 비중을 늘리고, 수급자가 자산을 형성하여 탈수급·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희망키움·내일키움통장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 일자리 사업 효율화

매년 전체 일자리사업의 고용효과와 사업성과를 고려하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을 마련하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성과에 따른 예산 차등 등 효율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필요한 국민들이 제 때 쉽게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 방식과 내용도 개편한다. 직접일자리사업은 통합공고·참여신청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자들이 민간일자리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의 경우 범정부 품질관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사업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현장모니터링과 사업성과 평가를 대폭 강화한다.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집행과정의 애로사항 및 예산낭비요인을 신속히 파악·해소하고, 개별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고용효과와 사업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주요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를 창업아이디어 발굴, 신약개발서비스 지원, 감염병 예측 및 감시시스템 구축 등에 활용하고,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분야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도 확대함으로써 국내 보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거점 공공병원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감염병 전문 병원 구축을 통해 감염병 대응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고용 분야 투자계획 >

(단위 : 십억원, %)

구 분	'17	'18	'19	'20	'21	연평균 증가율
□ 보건·복지·고용	129,483	146,164	159,392	172,687	188,389	9.8
○ 사회복지분야	119,127	135,237	147,731	160,401	175,432	10.2
▪ 기초생활보장	10,490	11,317	12,581	13,418	14,300	8.1
▪ 취약계층지원	2,608	2,820	3,192	3,619	3,921	10.7
▪ 공적연금	44,993	47,801	51,326	54,948	58,826	6.9
▪ 보육·가족·여성	5,923	7,021	8,158	8,746	9,302	11.9
▪ 노인·청소년	9,801	12,013	13,578	14,538	17,078	14.9
▪ 노 동	18,265	23,765	25,539	28,151	31,367	14.5
▪ 보 훈	4,975	5,513	5,607	5,691	5,761	3.7
▪ 주 택	21,242	23,867	26,610	30,111	33,599	12.1
▪ 사회복지일반	829	1,121	1,140	1,180	1,278	11.4
○ 보건분야	10,356	10,927	11,661	12,286	12,957	5.8
▪ 보건의료	2,341	2,390	2,689	2,769	2,831	4.9
▪ 건강보험	7,581	8,073	8,498	9,035	9,638	6.2
▪ 식품의약품안전	434	465	475	482	488	3.0

(3) 중점 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단계적 인상

65세 이상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현재 20.6만원 → 2018년 25만원 → 2021년 30만원)하여 노인·장애인의 소득기반을 확충한다.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 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노인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일정액의 소득을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의 수를 늘리고 단가도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독거노인 안전 확인 등 기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재·가스감지기 등 장비 설치를 확대할 것이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활동보조인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하여 혼자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 가족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지원한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 하는 '비수급 빈곤층' 등 사각지대 문제가 여전히 지적되어 왔다.

이를 고려하여, 향후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지우기 이행하기 가구나 주거급여 등을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주거비 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서민 주거안정 강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 지원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 서민들에게 따뜻한 주거복지의 손길이 닿도록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주거급여 대상자를 기존 중위소득의 45%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수급자의 최저주거 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해 나갈 계획이다.

무주택 서민·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다. 신혼부부, 청년, 노인 등 계층별 맞춤형 공적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연평균 17만호씩 총 8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의 30%는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하고,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세어하우스 등 청년임대주택도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입지가 양호한 역세권 등 위치에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수혜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공급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노후공공시설물 재건축, 노후주택 매입 후 리모델링 등 공급방식을 다양화하는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민·중산층의 전월세 비용 부담완화, 내집마련 자금 지원 등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신혼부부에게는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금리수준을 우대해주는 '신혼부부 전용 대출상품'을 신설하는 등 신혼부부가 집 문제로 결혼을 미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치매국가책임제 이행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가가 치매 예방 및 검진, 요양, 치료 등 치매전주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이행한다.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초기 상담 및 의료·요양시설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가족들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치매카페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치매안심형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센터를 지속 확충하여 치매 어르신을 안심하고 모실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요양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환자를 위해서는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통해 집중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치매의 예방부터 진단, 치료, 돌봄에 필요한 기술과 치료법 개발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학적 비급여를 해소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특히 노인, 아동, 여성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취약계층에게 부담능력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간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소득 수준에 맞추어 설정하는 한편, 재난적 수준에 달하는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지원하는 대상을 확대(4대 중증 질환 → 전 질환)하여 서민층에 대한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아동수당 신설, 공보육 시설 확충 등 보육 지원 강화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과 아동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영유아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고,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를 충원하여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을 낮추고 보육품질은 높여나갈 것이다.

또한 요보호 아동,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의 가입가능 연령도 만 12~13세에서 만 12~17세로 확대할 예정이다.

■ 자활사업 확대 및 청년희망키움통장 도입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 계층에 일자리와 근로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도 지원하는 자활사업의 참여자 수를 확대하고 급여도 인상해나갈 계획이다.

근로소득이 있는 만 34세 이하 청년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신설한다. 일하는 수급자에게 월 10만원의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와 월 평균 30만원의 자산형성 장려금을 지급하며, 3년 후 탈수급할 경우 약 1,500만원 수준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 희망키움통장·내일키움통장도 계속 지원하여 근로빈곤층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촉진해나갈 것이다.

■ 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복지 체감도 제고

복지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복지지원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확충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취약 가정 등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방문·상담·교육 등 맞춤형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각종 '사례관리 사업'에 대해 2018년부터 연계·통합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통합사례관리사, 방문관리인력, 의료급여관리사, 자활사례관리사, 중독사례관리사, 독거노인생활관리사(노인돌봄 기본), 드림스타트 아동사례 관리사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업무분야·소속기관별로 업무체계도 나뉘어 있어 복합 문제 요인을 가진 가정에 대해서도 통합적·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연계·통합모델을 마련하여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취약지·취약계층 의료접근성 제고 및 국민 건강관리 강화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방 중소도시 주민들을 위해 지방의료원 기능 보강, 농어촌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산부인과 등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사 부족한 의료취약지역 지원도 계속한다.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해 그간 생후 6~59개월에 한해 지원하던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2018년부터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60개월~만 12세)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금년부터 시행한 의료기관·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 고위험군 잠복결핵 검진 외에, 노인·외국인근로자 등 결핵발생 취약계층 검진 시범사업을 신규 실시하여 결핵 전파 조기차단 체계를 마련한다.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긴급상황 센터를 구축·가동하고 신종 감염병 환자 전문 치료를 위해 감염병 전문 병원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백신 종속 탈피, 정신건강·흡연·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투자도 강화한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시행(2017년 5월)에 따라 기존 정신병원 입퇴원 관리시스템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연계하여 정신보건과 복지 사례관리가 One-Stop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 등 국가 차원의 심리지원을 위하여 2018년부터 국가 재난트라우마 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자살, 중독 등 사회적 병리현상에 대응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전문인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보건의료산업 지원 강화

맞춤형 신약, 암·치매 진단·치료기술 등에 대한 개발·임상·해외판매 지원 등을 통해 종합적인 신약 생태계를 조성하고, 정밀·재생의료 산업 지원을 통해 바이오산업을 육성해나갈 것이다. 한편,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적용한 마이크로 의료 로봇,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 의료기기 지원도 계속한다.

또한 국산 의료기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산 의료기기 신제품과 기존 외산제품과의 성능비교 테스트 등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병원 ODA 사업으로 납품된 해외 의료기기 대상 전문상담인력 배치, A/S업무, 입찰참가 지원 등을 위한 ODA 지원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 식품·의약품·의료기기 안전 관리 강화

식품 기준규격 재평가를 보다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리 과정에서 실제 발생하는 유해성분과 유용성분의 변화량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직구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산물 유통단계에서의 국가잔류물질프로그램(NRP)을 운영할 계획이다.

첨단 의료기기 지원 및 의약품 신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맞춤형 의료기기(3D 프린팅)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적용 예시 모델을 개발한다.

■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기업과 청년의 눈높이를 맞춰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우선, 취업준비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재학단계에서부터 장·

단기 직무체험기회를 확대하고, 내일배움카드와 같은 직업훈련 대상에 대학 최종학년을 포함함으로써 기업이 원하는 직무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유도한다.

취업준비 과정에서는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 병행, 해외취업지원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구인-구직자간 정보 부족으로 인한 미스매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일자리센터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취업 이후에도 청년들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등에서 2년 근속시 1,600만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 일·생활 균형 및 출산·육아부담 경감을 통한 여성 고용 제고

여성에게 집중된 출산·육아부담을 경감하고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 균형 고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2017년도 추경으로 추진하는 육아휴직급여 인상은(첫 3개월 최대 2배 인상) 2018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18년도 하반기부터는 아빠육아휴직에 대한 보너스를 강화(모든 자녀대상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하여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10 to 4 더블어 돌봄” 실현을 지원하고자 육아기 부모들이 근로시간 단축 시, 이로 인한 임금감소분 보전을 확대(60→80%)할 계획이다. 또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하고 일하는 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직장어린이집을 지속 확대하는 등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시간, 근로장소 등의 유연화를 유도하며, 유연·재택근무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 간접노무비, 원격근무를 위한 인프라 구축비 지원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시간선택제 전환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 포용적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혁신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므로 신기술 분야에 대한 고급인력 양성과 직업훈련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대표적 공공 직업훈련기관인 폴리텍 교육·훈련 과정을 미래 신기술 분야 위주로 재편하고, 2017년 처음 시작한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 훈련’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직 근로자가 미래 기술변화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기술향상 훈련을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훈련비 지원도 강화한다.

한편, 기존 직업능력개발체계에서 소외되었던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공동훈련을 시범 실시하는 과정을 개설한다. 이와 함께 신중년의 취창업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자 ‘폴리텍 신중년 특화 캠퍼스’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

취업이 어려운 중장년, 장애인, 비정규직 등에 대해서는 대상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중장년층은 재직 중 직업훈련 등을 통해 직무 역량을 향상하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단축제도를 활성화하고, 경력을 살려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설계-직업훈련-취업으로 이어지는 One-Stop 재취업지원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퇴직 이후 경험을 사장시키지 않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일자리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원수준을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인 취업촉진을 위해 장애인 및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을 2016년 중증여성에 이어 2018년부터 중증남성에 대해 지원단가를 10만원 인상하여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훈련인프라 확대를 위해 맞춤형훈련센터와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각 2개소씩 확충하고, 장애인에 대한 민간위탁훈련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장애인고용기금으로 이관하여 전문적인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장애인에 대한 고용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고용서비스 및 고용안전망 확충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상담인력의 전문성 강화, 처우개선 등을 통해 구직자가 만족하는 취업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각 부처별로 산재된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등 일자리 정보들이 일목요연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On-line상의 다양한 고용서비스 시스템을 워크넷 중심으로 통합·연계해 나가는 한편, 개인별·기업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위해 일자리 정보 시스템을 표준화·연계한 정보인프라인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다양화된 고용형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임금근로자 이외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예술인 등에게도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확대로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업급여 보장성을 OECD 주요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실업급여의 지급기간 및 지급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실직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및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는 노사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맞물려 있으므로 수급요건의 합리적 개편 등과 함께 노사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다.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구분	'17		'21
▪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자활성공률(%)	34	⇒	38
▪ 기초연금 수급자 수(만명)	498.3	⇒	598.1
▪ 돌봄서비스를 받는 독거노인 비율(%)	39.1	⇒	40.2
▪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31	⇒	25
▪ 해외환자 유치 수(만명)	32	⇒	80

■ 추진배경

- 본인의 소득 수준은 낮더라도,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가 부양능력이 있어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
 - 특히, 노인(자식)이 노인(부모)의 부양의무자인 경우와 같이 보호가 시급한 사례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

■ 주요내용: 향후 5년간 대상·급여별 단계적 완화 추진

- ('17.11)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소득 하위 7분위 노인·중증장애인 포함시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18.10)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19.1)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분위 중증장애인 포함시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22.1)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분위 노인 포함시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22.10)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4.17→2.08%)

■ 기대효과

- 2017년 대비 연간 46~54만 가구(약 90만명) 추가 보호 효과
 - (2017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13만 가구, 163만명 수준
 - (2018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67만 가구, 253만명 수준

■ 추진배경

-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향상에 기여
-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 추세를 완화
및 인구의 질적 수준 제고

■ 주요사업내용

- '18.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주요특징 및 기대효과

- (지원 대상) 만 0~5세 아동 양육가정 (최대 72개월)
 - '18년 기준 월 평균 253만명 (추산)
- (시행시기) '18년 7월부터 지급
- (지원방식) 현금지급 원칙, 다만 지자체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현금 이외 방식도 선택 가능
- (신청방식)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기대효과) 연 250만명의 아동 양육가정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수급
 - 이로 인해, 출산율을 제고하고 아동의 권리보장 및 복지향상에 기여

■ 추진배경

- 그간 자산축적 기회가 없었던 청년 수급자에게 근로의 유인과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여 탈수급을 촉진할 필요
- 그런데 현행 생계급여 제도는 수급자의 근로소득만큼 급여를 덜 주는 방식이므로 근로의욕 저해 요인으로 작용 가능
 - 본인이 매월 일정액을 저축해야 하는 기존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은 수급자에게 부담이 되는 측면이 존재

■ 주요사업내용

- 청년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① 근로소득에 대해 생계급여 수급액 산정시 10만원을 공제하여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입금 ② 통장을 3년간 유지하고 탈수급한 경우 기여금과 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만 34세 이하 +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 (지원수준) 3년 만기 탈수급시 1,500만원 수준
 - * 근로소득공제 360만원(월 10만원×36개월) + 정부 장려금 1,080만원(월 평균 30만원×36개월, 기존 희망키움통장 수준)
 - (지원조건) 3년간 근로소득 유지 + 3년 내 탈수급

■ 주요특징 및 기대효과

- (수급자 입장) 일하는 청년 수급자에게 정부가 3년간 1,500만원 수준 지원
- (복지재정 측면) '일을 통한 복지' 원칙에 부합한 제도 운용으로 수급자의 자립·탈수급을 유도하여 복지재정 내실화

■ 추진배경

- 그간 청년취업인턴제는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하면서 소규모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
 - 다만, 기업 중심의 지원으로 인해 청년 체감도가 낮고, 일자리의 질이 낮아 장기근속의 유인이 적다는 지적 존재
- 이에 인턴제 근로자 지원을 현금지급 방식에서 자산형성 방식으로 전환하여 청년 정책 체감도 향상과 장기근속을 유도

■ 주요사업내용

- 2016.7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설, 가상계좌에 기업 납입금 및 정부 근로자 지원금 적립 → 2년 만근시 적립금(1,600만원+이자) 수령

■ 주요특징 및 기대효과

- (특징) 청년 직접 지원 강화 및 자산형성 방식 지원
- (기대효과)
 - (근로자)
 - 실질적 경력형성(최소 2년 동일사업장 근속 유지)
 - 미래설계 기반 마련(본인 납입금의 4배 이상 일시금 수령)
 - 장기근속 지속 유지 가능(2년 후 중기청에서 시행중인 내일채움공제(5년, 2천만원)로 재가입 가능)
 - (기업)
 - 우수인력 고용유지
 - 기술력과 생산성 향상 도모
 - 인건비 절감 목적 기업 필터링

■ 추진배경

- '16년 기준 청년실업률 9.8%로 '00년 이후 최고수준, 청년취업 애로계층 110만명 등 청년들이 취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이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업종) 중심으로 청년을 추가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나갈 필요

■ 주요사업내용

-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업종)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한 명분의 임금 전액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

■ 주요특징 및 기대효과

- (특징) 청년 실업문제가 급박한 상황을 고려하여 청년 3명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한 명분의 임금 전액을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
- (기대효과) 청년 채용을 원하지만 경영여건 혹은 인건비 부담으로 애로를 겪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여 청년 추가 채용을 유도
 - 성장 가능한 분야(업종)를 중심으로 추가 고용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3년간 지원을 통해 청년 근로자는 업무 숙련도가 높아지고, 기업은 성장 및 지속가능성 여건 조성

■ 추진배경

- '14년부터 청년층 실업률이 10%를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등 그 심각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청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시급

* 청년(15~29세) 실업률(%) : ('13.4)8.4 ('14.4)10.0 ('15.4)10.2 ('16.4)10.9 ('17.4)11.2

■ 주요사업내용

-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서 구직활동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예: 어학학원 수강비, 자격증 취득비용, 교통비 등)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1단계) 취업상담 → (2단계) 직업능력·직장적응력 증진 → (3단계) 취업알선”에 이르는 단계적·통합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동시장 진입 촉진 도모

-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참여예정) 중 청년(만34세 이하)
- (지급방식) 구직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매월 30만원(최대 3개월) 지급

■ 주요특징 및 기대효과

- 미취업 청년층에 대하여 기존의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에 구직촉진수당을 결부시켜 취업유도를 통한 청년층 취업률 제고 기여
- 청년층에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구직활동에 전념하도록 하여 보다 양질의 일자리로의 취업을 기대
- 일부 지자체*에 국한하여 지원하던 구직촉진수당을 정부에서 지원함으로써 지역간 편차를 해소하고 보편적인 고용안전망 마련

*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지역에서 해당지역 거주 청년층에게 구직활동수당을 지원

■ 추진배경

- 급격한 산업구조 재편 및 신산업 분야의 전문 기술인력 수요 증가 등 4차 산업혁명*에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

*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하여 작업 경쟁력을 높이는 차세대 산업혁명(공장과 제품의 지능화)

■ 주요 사업 내용

-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확대 가능성 높은 신산업 분야(스마트 제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정보보안 등)에 직업훈련을 통해 핵심인재 양성

* ('17) 10개 과정 200명 → ('18) 28개 과정 700명

** (지원내용) 훈련비, 훈련장려금, 과정개발비

-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우수 교·강사, 첨단 시설·장비, 고급 훈련 콘텐츠를 통해 1,000시간 내외의 전문적·압축적 고급훈련 진행
-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복합문제 해결역량(complex problem solving skills) 및 현장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편성, 집중 관리

■ 주요특징 및 기대효과

- 협약기업 확보, 산업수요 반영 등을 통한 NCS Level 5수준 이상의 난이도 있는 고급 훈련과정 편성·운영 및 취업 연계
- 훈련기관이 훈련과정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신청 시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격, 경력 등 일정기준에 따라 훈련생 자율 선발
- 복합문제 해결역량(complex problem solving skills) 습득·향상이 가능토록 총 훈련시간의 25% 이상을 프로젝트 실습으로 편성
- 충분한 훈련시설·장비 구축, 현장전문성이 높은 교·강사 등을 갖춘 민간훈련기관 선정·운영

■ 추진배경

-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5060세대가 일자리를 통해 인생 2·3모작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강화 필요
⇒ 폴리텍 신중년 특화캠퍼스 지정 및 학과개편을 통해 신중년의 취·창업지원

■ 주요 사업 내용

- (학과운영) '18년 4개 캠퍼스·7개 학과 운영 계획

캠퍼스	운영과정		비고
정 수	자동차복원	공조냉동	(2개과정 × 2회)
서울강서	시니어 헬스케어	-	여성친화 신중년 (1개과정 × 2회)
남인천	특수용접	전기시스템제어	(2개과정 × 2회)
대 구	전기설비기술	특수용접	(2개과정 × 1회)

- (훈련대상) 50세 이상 실업자, 전직예정자 등
- (지원사항) 훈련직종에 대한 핵심 기술·기능 훈련을 통해 재취업 및 창업 역량강화 지원, 훈련비(무료) 및 훈련수당 지원

■ 주요특징 및 기대효과

- (親신중년 환경구성) 기숙사 우선 제공, 안전관련 장비 및 전용 휴게시설 등 환경구축
- (훈련프로그램) 장기 숙련과정(6개월)으로 교과를 구성하여 직무 숙련훈련 및 창업지원 교육훈련 실시
- (신중년 적합직무 개발) 뿌리산업 등 중소 제조업을 중심으로 현장 요구와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을 연계하여 신중년 일자리 창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은 결핵, B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폴리오(소아마비), 풍진, 일본뇌염, 수두, 뇌수막염, 소아폐렴, A형간염, 자궁경부암 백신(HPV), 인플루엔자 등 총 16종의 감염병이 대상이다.

정부는 겨울철 학령기 아동 등의 건강보호를 위해 2018년에는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60개월~만 12세)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접종 대상자는 가까운 보건소 및 민간 병의원에서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 교육 분야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 창의성·인성 중심의 공교육 체제 확립 지원

유아 및 초·중등교육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3년 41.1조원에서 2017년 46.9조원(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9조원 포함)으로 연평균 3.4% 증가하였다.

이러한 재정 확충을 통해 자유학기제 확산, 2015 개정 교육과정 확정·고시 등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행정업무 경감을 통한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해왔다.

학교폭력 사전대응, 학생 안전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을 통해 안전한 학교를 구축하는 한편, 다문화·탈북·학업중단 학생 등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누리과정을 도입하여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공통의 교육·보육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누리과정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였다.

■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고등교육 지원

누구나 경제적 부담없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정부재정: 2012년 1.15 → 2017년 3.63조원)하여 2015년에는 정부와 대학의 자체노력 분담 구조 하에 총 등록금 대비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하였고 이후 정책 기조 유지를 통해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해왔다.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지원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2010년 1학년 → 2011년 1~2학년 → 2012년 1~3학년 → 2013년 1~4학년)하였으며, 2009년 학자금 대출 시행 이래로 대출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2009년 5.8%→2017년 2.25%)하는 등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하였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완료하고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하여 학령인구 감소 및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대학·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을 지원하여 대학이 자신의 건학이념과 특성, 지역 산업 여건을 감안하여 자율적 특성화를 달성하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잘 가르치는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학부교육 선도대학(ACE) 사업,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사업, 대학 연구기반 확충을 위한 BK21(Brain Korea 21) 플러스 사업 등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충해 왔다.

■ 학습과 일이 연계된 직업·평생교육

고졸 취업자의 대학진학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과 전문대학 연계를 통한 청년고용 창출 및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비문해 학습자, 농어촌 주민 등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확충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기술·태도 등 직무 수요를 체계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기반으로 학습모듈(교재)을 개발·보급하고, 특성화고·전문대학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직업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하였다.

- * 자유학기제 학교 수(교) : ('13) 42 → ('15) 2,551 → ('17) 3,208
- * PISA 2015 한국 순위(OECD 34개국) : 읽기 3~8위, 수학 1~4위, 과학 5~8위
- * Times 세계대학평가 400위 권 국내 대학 수(교) : ('13) 7 → ('16) 9
- * 특성화고 취업률(%) : ('13) 40.9 → ('16) 47.2
- * 평생학습 참여율(%) : ('13) 30.2 → ('16) 35.7

< 교육 분야 재정투자 추이 >

	'13	'14	'15	'16	'17	연평균 증가율
* 교육 분야(조원)	49.8	50.7	52.9	53.2	57.4	3.6%

* 본예산 기준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 교육의 공공성 강화

유아부터 대학까지 국가의 공교육 책임을 강화하여 출발선 단계부터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학생 안전보장을 위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및 대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일반고 중심 고교체제 개편, 1:1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혁신학교 성과 확산, 자유학기제 확대, 전문성 있는 교원 양성·배치 등을 통해 교실에서 시작되는 공교육 혁신을 도모할 예정이다.

학교·대학의 지능정보·융합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사회 대비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시설 개선 종합계획, 학교 안전교육 강화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낡은 학교를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고등교육의 질 제고

국립대학의 자율적인 개혁 및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거점 국립대를 국가균형발전의 축으로 육성하는 등 국립대 역할 및 기능을 재정립하고, 국공립대 간 기능별, 중점 분야별 특화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간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양질의 일자리 취업을 통한 지역의 우수인재를 공동 양성할 계획이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재구조화하고 대학 구조개혁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2019년 이후 대학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업간 유사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재구조화해 나갈 것이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행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일반재정지원과 특수목적지원사업(연구, 교육(특성화), 산학협력)으로 구분·지원하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이와 아울러 2주기 구조개혁평가와 연계하여 대학에 투입되는 재원의 효과적 집행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순수 기초연구비 예산을 2배 수준으로 증액하고 창의·도전적 연구 및 보호·소외 분야에 대한 연구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학 내 산학협력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대학 유휴부지에 기업, 연구소 등을 입주시켜 대학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상시적 산학협력 촉진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국가 책임의 직업교육 강화 및 평생교육 혁신

직업계고에 단계적으로 수준별·맞춤형 학점제를 운영하도록 지원하며 학생과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을 만들어 나가고, 미래직업교육 운영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평생 직업교육 기능 강화 및 대학별 특성화 강점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현장 선호도가 높은 우수 전문 인력을 양성할 것이다.

중소기업 재직자 등에 대한 후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경력단절 최소화, 학사제도 유연화, 학비부담 완화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여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I·빅데이터·SW·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K-MOOC를 확대하고, 대학·기업이 참여하는 단기 학위과정 모델을 개발·도입할 계획이다.

■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 등을 통해 최종교육 수요자인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지출구조를 확립하고, 학부모와 아이들이 마음 놓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 등록금 등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누구나 의지와 능력이 있으면 경제적 부담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 등록금 지원 확대를 통해 단계적 반값 등록금 확대 추진 등 대학생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담을 경감할 것이다. 아울러, 국·공유지 확보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대학기숙사 수용인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다문화·탈북·학교 밖 학생 등에 대한 학교생활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지속 지원하는 동시에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평생교육 바우처 제도를 신설하여 평생교육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다.

< 교육 분야 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 분	'17	'18	'19	'20	'21	연평균 증가율
□ 교육 분야	574,123	641,428	681,196	727,417	753,408	7.03
○ 유아및초·중등교육	471,494	537,326	575,548	604,433	630,558	7.54
○ 고등교육	94,584	96,159	97,245	112,107	111,900	4.29
○ 평생·직업교육	6,935	6,673	7,086	9,494	9,497	8.18
○ 교육 일반	1,110	1,269	1,317	1,383	1,453	6.98

(3) 중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무선 인터넷망을 단계적으로 설치하여 ICT 기반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디지털교과서에 최신 기술이 접목된 실감형 콘텐츠 도입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력과 실생활 문제 해결력을 키워주는 융합인재 교육(STEAM)을 확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컴퓨팅 사고력을 갖춘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교 소프트웨어(SW) 교육의 내실화 및 필수화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시설 안전관리, 노후시설 개선 및 재난위험 시설 해소 등 5개년 교육시설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시설·학생수련시설의 안전 기준 마련 및 안전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초·중·고교 필수과목 최소화 및 선택과목을 다양화하는 등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고, 일반교과에서 활용 가능한 학교급별 예술활동 확산 및 지역사회를 활용한 초·중·고 문예체 교육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학생의 진로·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고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는 등 유아부터 고교까지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핵심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1:1 맞춤형 교육을 위한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을 확대하고, 단위 학교별 학습코칭팀을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로 확산할 계획이다. 학력 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교과목에 대해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원을 위한 1수업 2교사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논술 및 교과특기자 전형 등 사교육 유발이 우려되는 대입전형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도록 유도하고, 학생부와 수능 위주로 단순화할 계획이다.

■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누리과정 지원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고 국공립 유치원 이용 아동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유아 공교육 기반을 강화하며, 온종일 돌봄교실 내실화 및 단계적 확대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완전 돌봄 체제를 구축하고,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현실화 및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학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학생, 학교 밖 학생, 다문화·탈북 학생 등의 안정적 성장·정착을 위해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및 다양한 교육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학생들이 과도한 주거부담에서 벗어나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숙사 수용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고등교육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

국립대별 강점 분야를 집중 지원하여 국립대 전반의 경쟁력을 상향 평준화하고 국립대를 지역발전 허브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거점 국립대와 지자체 간 공동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교육-고용 연계를 통해 지역발전의 근간인 인재 유입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복잡하고 사업간 유사중복성이 높은 대학재정지원사업을 19년에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 크게 4가지 연구/교육(대학특성화)/산학협력/대학자율 역량강화로 단순화하고, 기존의 하향식(Top-Down) 방식에서 벗어나

목표부터 성과까지 자율적으로 프로그램 등을 설계하는 상향식(Bottom-Up) 비중을 높힐 계획이다.

‘창업’을 중심으로 대학의 역할과 운영의 변화를 유도하고, 대학생들이 실패에 대한 부담 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대학창업펀드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원생 기술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대학발 창업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과기부-중기부와 융합예산을 추진하여 대학원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 K-MOOC 등 성인평생학습 활성화

생애주기별·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콘텐츠를 다양한 온라인 도구를 통해 제공하는 온라인 평생학습 지원체제(한국형 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개발을 확대하고, 한국형 단기학위(Nano-degree) 운영을 통해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구직자의 직무능력 함양을 지원한다.

비문해자에 대한 문해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방송중·방송고 운영을 성인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소외계층에 바우처를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다.

■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및 산학협력 활성화

국가차원의 직업교육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범 부처가 참여하는 미래직업교육추진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준별·맞춤형 직업교육을 위한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이를 전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학생 노동인권 의식 제고 및 학생보호와 안전을 최우선하기 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선교육훈련 경험제를

도입, 직업계고 졸업생의 교육훈련 경험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여 편입학 및 취업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학과 중소기업이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운영하고 교육과정에 산업체 참여를 보장하는 등 대학생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취업 연계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확대하고 신청절차를 개선하여 장학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구분	'17		'21
▪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25.0	⇒	35.0
▪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명)	20,000	⇒	44,000
▪ 특성화고 취업률(%)	48.0	⇒	54.0
▪ 문해교육 수혜자 수(명)	약 29.4만	⇒	약 58만
▪ 학교시설 석면제거(천 m ²)	3,000	⇒	16,232
▪ 학교시설 내진보강(동)	800	⇒	5,990

■ 추진배경

- 국립대학은 산업화시대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의 핵심 기능을 담당해왔으나, 낮은 교육투자 등에 따른 국립대 위상 약화로 지역 인재 유출, 수도권/지방 격차 심화의 악순환 우려
- 국립대 고유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고, 대학 간 연계·협력을 통해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및 경쟁력 제고 추진 필요

■ 주요 사업 내용

- 거점 국립대 육성 지원
 - 대학별 대표 연구브랜드 육성 등 강점분야 육성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 제고 추진
 - 거점 국립대·지자체 협력을 통해 교육-고용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인재 유입 촉진 및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강화
- 지역중심 국립대 등 육성
 - 지역 전략발전에 특화된 강점 교육분야 집중 육성 및 지역 기반 교육-고용 연계 체제 강화 지원

■ 주요특징 및 기대효과

- 거점 국립대를 명문 대학으로 육성하여 지역 인재 유입, 고용-연계를 통한 지역인재 선순환 구조 구축
- 국립대학 간 기능특화를 통해 전반적인 국립대학 경쟁력을 제고하고 중장기 대학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그 성과를 공유·확산

■ 추진배경

- 지역대학이 지역의 혁신거점으로 지역사회와 상생발전하기 위해 지역의 대학-지자체-산업체간 유기적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필요
- 특히,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지역우수인재 육성, 청년일자리 창출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 강화 필요

■ 주요 사업 내용

- 지자체-지역대학-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협력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우수 인재 채용확대
 - * 클러스터 : 지역대학(국·사립 4~5대학)+지자체(광역, 기초)+공공기관+혁신기업
- (공공기관 채용연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의 대학-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우수인재 공동양성 및 지역 명품학과 육성
- 융·복합 효과가 큰 학과 또는 지역의 주력산업 중심으로 인근 대학과 연합학과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방대 경쟁력 강화 및 지역발전 선도

■ 주요특징 및 기대효과

-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등 양질의 일자리 취업과 연계한 협력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 우수인재 유치-양성-정주의 선순환 체계 구축
- 대학과 지자체-공공기관-지역기업 등의 연계·협력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배경

- 대학은 석·박사, 교수 등 고급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기업 성장 가능성이 높고 고용 창출력이 뛰어난 혁신형 기술창업 선도 가능

■ 주요 사업 내용

- 창업인재를 선발하여 교육과정과 대학 내 창업지원 인프라 융합으로 기술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대학원 Lab 중심 창업지원사업 추진
 - 특성화 된 Lab(바이오, IT, 나노 등)을 선정하고, 해당 Lab은 학생 선발, 교육과정 운영, 각종 창업 지원 등을 수행
- ※ 창업계획서 및 창업 실행으로 졸업 요건 부여 가능

■ 주요특징 및 기대효과

- 학생 창업경력단절 방지 및 창업 핵심인재 양성을 통한 창업 활성화
- 대학 창업지원조직 통합운영 및 창업지원 절차 일원화를 통한 대학 창업 생태계 확대 가능

■ 추진배경

-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이직·전직 활성화, 일자리 감소 등 노동·고용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평생학습을 통한 지속 역량 개발 필요
- 그러나 소득 등 경제적 여건 차이에 따라 평생학습 참여 차이 → 능력개발 기회 격차 확대로 인해 장기적으로 사회 양극화 우려

■ 주요 사업 내용

- 저소득층(소득 1·2분위),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실질적 평생학습 참여 제고를 위해 연 최대 75만원의 평생학습 바우처 제공
 - 소득분위 등 경제적 여건에 따라 지원한도를 조정하고, 나노디그리 이수 또는 자격 취득 등과 관련하여 지원 시 우대
 - 지원 대상자는 바우처를 활용하여 대학, 학점은행제 등을 활용한 학점 취득 또는 독학학위,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이수 가능
- 지원 대상자의 학습 관리를 위해 학습 내용을 평생학습계좌에 가입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학습자가 입력한 내용 등을 분석하여 중장기 학습계획 컨설팅 등 제공

■ 주요특징 및 기대효과

-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제거하여 평생 학습에 참여하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 제고와 사회적 자립 등에 기여

3. 문화·체육·관광 분야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 국정기조 ‘문화재정 2%’ 실현을 위한 지속적 투자 확대

문화재정 투자의 기본방향은 국정기조였던 문화참여 확대, 문화예술 진흥, 문화와 산업의 융합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고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문화기본법」(‘14.3.31) 및 「지역문화진흥법」(‘14.7.29)을 제정·시행하여 문화융성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2018년 예산기준 ‘문화재정 2%’ 달성을 목표로 정부재정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2012~2016년간 문화분야 재정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9.4%대로서 동기간 동안 정부 재정투자 증가율 4.4%보다 2배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 문화 분야 재정투자 추이 >

	'12	'13	'14	'15	'16	연평균 증가율
* 문화분야(조원)	4.6	5.0	5.4	6.1	6.6	9.4%

■ 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산 및 문화소외계층 지원 확대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4년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여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문화시설에 대한 이용할인 혜택 등을 적용해 왔다. 2015년부터는 다양한 기획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연간 300만명 이상이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공연장과 전시관, 또는 다양한 장소에서 문화행사를 접하고 있다.

- * 문화가 있는 날 인지도 : ('14년1월) 19% → ('16년10월) 57.8%
- * 문화가 있는 날 비수도권 참여비율 : ('14년1월) 49.3% → ('16년11월) 59.3%

보편적인 문화향유권의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이루어졌다. 생활 가까이에서 다양한 문화활동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적 여건으로 문화활동이 어려운 소외계층의 문화역량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체육·관광 통합문화 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하였다.

- * 문화누리카드 발급매수 ('15년) 1,378천매 → ('16년) 1,451천매
- * 문화예술 관람률 ('12년) 69.6% → ('16년) 78.3%

■ 기초예술 창작 저변 구축, 예술 향유의 기회 보장 추진

예술가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저소득 예술인 창작준비금, 사회보험료 등을 지속 지원하여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여건을 조성하고, 공정 생태계 조성, 장르별 맞춤형 창작 지원을 통해 창작여건을 개선하였다. 또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고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문화예술센터'를 개관(2015년 11월) 하는 등 예술 체험·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 * 예술인 창작지원금 수혜자 수 ('13년) 1,831명 → ('16년) 4,000명
- * 문화예술교육 수혜자수 ('13년) 231만명 → ('16년) 301만명
- *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14년) 6.9% → ('16년) 10.6%(문화향수 실태조사)

■ 4차 산업혁명 시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콘텐츠산업 육성

최근 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둔화 극복이 핵심과제로

대두되면서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 산업인 문화콘텐츠 산업의 육성에도 많은 투융자와 연구개발을 지원하였다. 꿈과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 영화·게임·대중음악·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사업화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여, 건강한 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 콘텐츠산업 매출액 : ('12년) 87.3조원 → ('16년) 105.7조원
- * 콘텐츠산업 수출액 : ('12년) 16.1억달러 → ('16년) 62.1억달러

■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균형 성장을 통한 선순환 구조 구축

건강 100세를 위해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손쉽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지도자·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생활체육 저변확대 정책을 추진하였다. 스포츠클럽을 확대하고 방과 후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등 접근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국민생활체육 참여율이 지속 증가하였다. 전문체육에서도 선수촌 시설 재정비, 우수선수 육성시스템 개선, 체육단체 통합으로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선순환하는 선진국형 스포츠 시스템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 * 생활체육 참여율(주 1회) : ('12년) 43.3% → ('16년) 59.5%
- * 스포츠클럽 결성 : ('13년) 8개소 → ('16년) 36개소
-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 ('13년) 2,230명 → ('16년) 2,600명
- * 국민체육센터 건립 : ('13년) 184개소 → ('16년) 220개소

■ 국내관광 활성화 등 내수창출 기여 및 외래관광객 유치 증대

국내관광 활성화 및 내수 진작을 위해 여행주간 캠페인을 전개하고, 광역권 관광개발, 창업지원 및 우수 관광벤처기업에 대한 상품개발 등 사업화 지원을 통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 * 국내여행 참가 횟수 : ('12년) 21,347만회 → ('16년) 24,147만회
- * 국내여행 참가자 수 : ('12년) 3,691만명 → ('16년) 3,929만명
- * 봄·가을 국내여행자 수 : ('15년) 3,720만명 → ('16년) 4,849만명
- * 관광경쟁력 제고 : '17년 세계경제포럼 관광경쟁력 평가 결과 19위

또한, 국제회의업(MICE), 의료·웰니스 관광, 크루즈 관광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방한관광시장 고품격화 및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에 더하여 해외시장별 외래관광객 유치활동의 적극적인 전개, 전략적 해외 홍보활동 강화, 테마별 관광 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여 외래관광객 및 관광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 * 외래관광객 입국자수 : ('12년) 1,114만명 → ('16년) 1,724만명
- * 국제회의 개최 건수 : ('12년) 563건(5위) → ('16년) 997건(1위)
- * 관광수입 : ('12년) 134억불 → ('16년) 171억불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정부는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문화분야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문화소외계층 지원, 문화·체육·관광 향유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 문화 기본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과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관광·체육 산업 육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

■ 안정적 예술창작여건 조성 및 예술인 복지 강화를 통한 예술 창작역량 강화

예술 창작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축소되거나 폐지된 '작가창작지원', '문예지발간', '공연장 대관료지원' 사업 예산을 '16년 이전수준으로 확대(+63억원)하여 예술인의 창작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을 위해 '공연 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 노후 공연장 리모델링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국립한국문학관,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등 복합 문화예술 공간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창작준비금 확대(4,000명→4,500명)와 더불어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을 신규 추진한다. 예술인에게 긴급 생계비 지원 등 예술인 복지환경을 개선하여 예술인의 창작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체감 제고

국민들의 생활속 문화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가 있는 날’을 지속 운영하고, 국민생활 속에 문화가 스며들 수 있도록 민간과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의 문화접근성을 확대하고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저소득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 단가를 1만원 인상(6만원→7만원/1인) 한다. 주민 주도형 생활문화공간인 생활문화센터를 지속 조성하고, 지역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생활문화센터, 문화재단 등에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을 위해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을 지속 조성하고,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정책 사업과 연계하여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아동·청소년 예술교육 활성화,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속적 확대

지역 생활권 단위 유휴공간에 학교 밖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여 상시적으로 아동·청소년이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한국형 아난탈로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 예술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아마추어 예술동아리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이 새롭게 시작될 예정이다.

■ 콘텐츠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금융 등 간접 지원 확대

콘텐츠 기업이 자생력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장르별 직접지원을 축소하고 투융자 지원, 유통플랫폼 등 간접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콘텐츠 기업의 금융권 대출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완성보증과 펀드에 대한 출자규모를 늘리는 한편, 이차보전 제도를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콘텐츠가 세계시장에서 지속 성장 할 수 있도록 문화콘텐츠 창업 및 성장거점과 인재양성을 지속 지원하고 해외시장 개척, 온라인 유통 지원 등 유통 플랫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 및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 저변 확대

생활체육을 향유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등 인프라 확충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 공급하여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체육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을 위해 기존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생활권 단위까지 확대하여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학교 등과 연계한 개방형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체육활동 참여가 어려운 농산어촌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지도자도 확충할 예정이다.

■ 융복합 관광콘텐츠 개발 지원 및 관광산업 활성화

산업 간 융·복합, ICT 접목 등을 통한 혁신적 관광 상품·아이디어를 지닌 관광벤처기업 발굴·육성 및 지역 주민들이 관광 사업공동체를 만들어 숙박, 음식, 기념품 등 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관광두레 PD 운영 등 주민사업체 발굴·창업 지원 등을 통해 관광기업 육성 및 고용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프리미엄 관광상품 등 상류층 유치를 위한 고품격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미용·건강·휴양·한방 등을 결합한 “웰니스 관광”의 전략적 육성 및 국제회의(MICE)·의료관광 시장 확대 등 방한 관광시장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노력도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근로자 여행지원 사업을 통해 근로자가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의 여행기회를 확대하여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지원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 분야 투자계획 >

(단위 : 십억원, %)

구 분	'17	'18	'19	'20	'21	연평균 증가율
□ 문화·체육·관광 분야	6,893	6,328	6,426	6,526	6,627	△ 1.0
○ 문화예술	2,750	2,640	2,678	2,707	2,732	△ 0.2
○ 관광	1,554	1,403	1,419	1,437	1,461	△ 1.5
○ 체육	1,502	1,157	1,170	1,187	1,207	△ 5.3
○ 문화재	789	775	787	803	814	0.8
○ 문화 및 관광일반	298	353	372	392	413	8.5

(3) 중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 자유로운 예술 창작환경 조성

표현의 자유 등 예술인 권익 보장,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및 예술인 복지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예술가 권익보장, 예술의 자율성 확보 및 기초예술의 장기적·안정적 지원을 위한 행정·제도적 기반 마련, 예술인 고용보험 및 복지금고 도입(2019년) 등 창작안전망 구축, 안정적 창작공간 조성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의절차, 예술지원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독립성, 자율성 보장을

위해 ‘팔길이 원칙’에 입각한 문화예술위원회의 자율적 위상을 재정립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 콘텐츠 기업 정책금융 지원 확대

영세 콘텐츠 기업들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이차보전제도를 신규로 도입한다. 최근 콘텐츠 산업의 성장이 둔화되고 외부적 요인에 따라 피해가 큰 대다수의 영세 콘텐츠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민간 금융시장에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콘텐츠 기업 지원을 위해 이차보전 사업의 신규 실시하여 민간 금융권 이용 시 일부 이자비용을 보전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콘텐츠펀드와 완성보증에 대한 출자를 확대하여 투자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문화콘텐츠 수출의 지속 성장을 위한 시장개척 지원

최근 외교·안보 요인으로 인해 수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화콘텐츠가 세계시장에서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수출시장 편중을 해소하고 해외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한류에 대한 선호도 및 구매력을 갖춰 시장 전망성이 높은 동남아와 중남미 지역을 차세대 시장으로 개척한다. 이를 위해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화장품·의류·식품 등 연관 산업까지 확장한 한류 종합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현지 한류 붐을 조성하고 연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경 없는 온라인 유통이 활발해지고 있는 최근 시장현황을 반영하여 분야별 핵심 플랫폼과 협력해 우수 콘텐츠의 현지화 및 유통을 지원하고, 콘텐츠 기업의 해외현지 정보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여 계약·저작권·조세 등 분야별 전문상담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 ‘관광두레’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모델 구축

지역의 관광발전 혜택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이 주도하는 자생적이고 협력적인 관광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

관광두레 조성 사업은 지역의 관광전문인력(관광두레 PD) 양성을 통해 지역주민이 직접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 식음, 체험 등의 관광사업을 창업하고 자립 경영하도록 지원한다.

주민의 참여 가능성과 지역 관광자원 연계성을 중심으로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를 선정하여 최대 5년간 지원하며, 주민사업체 간 두레(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동체 의식과 함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지속 성장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조성

날로 늘어나는 생활체육 수요 충족과 스포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언제 어디서나 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재 거점형으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를 ‘생활밀착형 체육시설’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2018년 20개소 지원)

* (참고) 독일 골든플랜: 누구라도 10분 이내에 다양하고 편리한 스포츠시설에 갈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스포츠 시설 건립 확대 추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어린이 놀이공간, 어르신 체육공간 등 읍면동 특성 및 수요에 맞는 동네 체육관으로 조성되며,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조성 등 시대와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새롭고 다양한 공공체육시설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분야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문화재정의 양적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낭비적 재정지출의 증가 또는 부정수급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사업구조를 단순화하고, 보조사업의 선정 및 지원기준을 분야별로 명확화하여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등 문제가 있는 단체는 지원을 중단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관례적·연례적으로 지원하는 행사 보조사업은 축소하거나 단계적으로 공모방식으로 전환하여 국고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업효과가 지역에 한정 되거나 단순 지역 배분 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관하여 지역예산 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추진토록 유도하여 지자체 수요 맞춤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17년		'21년
▪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79.0	⇒	83.5
▪ 문화산업 매출규모(조원)	110.5	⇒	136.4
▪ 3대 전략시장* 외래객 유치(만명) * 비중국 중화, 아시아·중동, 일본	639	⇒	840
▪ 생활체육 참여율(주 1회 이상, %)	60.0	⇒	64.0
▪ 문화 기반시설 수(개)	2,657	⇒	2,992

■ 추진배경

-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향유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해소
- 現지원금은 공연, 관광분야 등 이용단가가 높은 분야의 사용을 제한하여 다양한 문화·여행·체육활동 향유 저해

■ 주요 사업 내용

- 경제적 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만 6세이상)에게 문화예술 향유, 여행, 체육활동이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 지원내역 : 연간 개인당 6만원('17)→7만원('18)
세대내 합산사용시 최대 7매까지 사용 가능
 - 사용처 : 문화예술(공연·전시, 영화, 도서·음반 구입 등), 여행(숙박, 관광지, 교통 등), 체육활동(4대 스포츠관람, 운동용품 구입, 체육 시설 이용 등)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문화누리카드.kr) 또는 www.munhwanuricard.kr) 신청

■ 기대효과

- 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 기반조성

■ 추진배경

- 현 정부는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을 국정과제 79로 채택, ‘소규모 동네 재생’, ‘지역주도’, ‘생활 밀착형 편의시설 지원 확대’ 등 차별화된 정책 구상
- 문화·예술·관광은 도시재생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적 자산 등을 활용한 문화적 도시재생 추진으로 지역문화 활성화 기반 필요

■ 주요 사업 내용

- 지역의 문화적 개성과 고유성, 특수성이 기반이 된 도시재생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 활성화 추진
 - (도시문화 기록 및 활용) 도시의 역사, 시민의 삶과 기억을 기록함으로써, 도시의 정체성을 찾고 도시재생이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재생의 밑바탕이 되도록 지원 (‘18년, 15곳)
 - (문화재생 커넥터 활동 프로그램 지원) 문화적 도시재생 매개인력인 ‘문화재생 커넥터’를 선정하여 도시재생지역에 파견하고, 이들의 문화재생 컨설팅과 마중물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18년, 15곳)

■ 주요특징 및 기대효과

- 문체부의 문화도시, 문화마을 등 문화관광 콘텐츠사업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등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할 경우 시너지 효과 배가
- 문화를 테마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지역공동체 파괴와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지역문화의 활성화에 기여

■ 추진배경

- 기업 및 근로자의 휴가문화 개선을 통한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 및 국내관광 수요 창출을 통한 내수 경기 활성화

* 근로자 휴가사용 장애요인 1위 직장내 분위기(근로자 휴가실태 조사, 산업연구원)
국민 국내여행 어려움 2위 경제적 여유부족(2016 국민여행 실태조사, 문광연)

** 근로자 평균 연차휴가 부여 15.1일, 평균 사용 7.9일(근로자 휴가실태 조사, 산업연구원)
1인당 평균 노동시간 OECD 국가 중 2위(OECD 2017 고용현황)

■ 주요 사업 내용

- 근로자·기업이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할 경우, 정부에서 추가로 여행비 10만원 지원
 - (지원대상) 1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 (분담비율) 근로자 50%, 기업 25%, 정부 25%
 - (사용방식) 카드에 포인트로 지원금 적립, 여행 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

■ 주요특징 및 기대효과

- 근로자가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자의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삶 실현
- 국내여행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및 내수 경기 진작

■ 추진배경

- 외래관광객 중 82.8%가 무료 WiFi 또는 WiFi 에그를 사용하는 등 외래관광객의 무료WiFi 수요가 높은 상황(관광공사, 2015 외래객 무선인터넷 이용환경 실태조사)
- 개별 여행을 즐기는 방한 외래관광객의 비중이 67.4%에 육박하며, 방한 외래관광객의 74.1%가 인터넷을 통해 한국 여행정보를 입수(문체부, 2016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 주요 사업 내용

- 전국 주요 관광지 대상 공공 와이파이 설치·확대 추진('18년, 585개소)
 - 정부(12%)·지자체(38%)·통신사(50%) 매칭사업 형태로 추진
 - AP(Access Point)*가 없거나 추가설치가 필요한 관광지(지자체 제출)를 기준으로 설치 진행
- *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기

■ 주요특징 및 기대효과

- 기존('15~'17년), 강원도 지역 시범 실시 → 전국 지자체 확대('18년~)
- 관광객들의 관광현장 정보 접근성이 높아져 관광 편의가 제고되고, 여행 중 통신비용이 절약되어 관광비용 절감 가능
- 관광지 사물인터넷(IoT) 기반 조성을 통해 관광사업체의 관련 서비스 개발·적용 촉진

4. R&D 분야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R&D 분야 지원

혁신적 신기술의 등장, 국가 간 교역량 증가, 급격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글로벌 경제·산업·사회 트렌드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은 기술혁신을 토대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들 주요 국가들은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등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 4차 산업혁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R&D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투자확충에 힘쓰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는 등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재난재해·안전 및 기후변화대응 분야에도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복지수요가 증대되는 등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정부와 기업의 R&D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으며, 정부재정 지출을 통한 양적인 R&D투자 노력은 한계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매년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였고, 두 차례의 「정부 R&D 혁신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한 바 있다. 공공-민간의 역할분담,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관행적 장기계속 사업 일몰 등 R&D 혁신방안의 주요 과제들은 단기적인 처방 차원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지출효율화를 위하여 꾸준히 추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출효율화의 노력으로 절감된 재원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재투자 될 것이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국내 산업 경쟁력 향상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신기술 개발을 지원할 것이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SW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및 공용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SW교육 등에도 집중 투자할 것이다. 한편으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도 강화하는 등 국정과제 중심의 전략적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지출효율화를 통한 정부 재정지원의 효과성 제고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총 R&D 투자비중은 4.23%로 세계 2위 수준이며, 절대 규모도 742억 달러로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정부 R&D예산은 지난 6년간('11~'17년) 정부재정지출 증가율(4.4%)을 0.2%p 상회하는 4.6%의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R&D투자 노력에 힘입어 최근 5년간('11~'15) SCI 논문 건수는 연평균 6.0%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정부 R&D를 통한 국내 등록특허 증가율(17%)은 국내 전체 등록특허(1.8%) 대비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정부 R&D를 통한 해외특허 등록 건수도 2011년 671건에서 2015년 1,89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성과의 양적 증가와 별개로 질적 성과는 다소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 횟수는 세계 평균(0.58회) 보다 낮은 0.53회이다. 정부 R&D를 통한 특허의 질적수준은 민간 R&D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외국인 국내 등록특허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 대학원(IMD)이 최근 발표한 2016년 기준 과학기술경쟁력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2단계 하락한 세계 8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국가 전체, 그리고 정부 R&D예산의 투자 규모와 연구개발의 1차적 성과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은 더욱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통한 과학기술경쟁력의 향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의 체계적 지원과 함께 연구환경 개선을 통한 연구생산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유망한 기초·원천·혁신 기술과 미래성장동력 창출 관련 분야에 중점 투자하면서 R&D 효율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갈 것이다.

< R&D 분야 재정투자 추이 >

	'11	'12	'13	'14	'15	'16	'17	'18안	연평균 증가율
* 정부R&D 투자 (조원)	14.9	16.0	16.9	17.8	18.9	19.1	19.5	19.6	4.0%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반기술 확충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본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장 및 산업 구조의 혁신을 창출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뇌과학(감각·감성인지, 인지기능 등)과 같이 지능정보기술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하드웨어(HW), 데이터 유통 및 활용(ICBM) 관련 원천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대응기술과 기존 기술·산업의 융합 R&D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이 완료된 기술을 민간 및 공공부문에 적용하는 실증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기반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1년까지 핵심기술 개발, 실증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며, 정밀의료 항암 임상시험도 추진한다.

한편, 미래 세대의 기술 대응 및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ICT를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교육방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융합적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및 미래 노동시장에 적합한 현장 맞춤형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며, SW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밖 SW교실'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 연구자 주도의 창의적 기초연구 및 도전적 융합연구 지원

국가 과학기술의 기반이 되는 기초연구의 체력강화를 위해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확대하고, 자율적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우수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기초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자 주도의 도전적 연구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되 불필요한 행정적 간섭과 평가 절차 등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 예산을 2017년 1.26조원에서 2022년까지 2배로 증액하여 개인의 창의성에 기반한 상향식 기초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함으로써 선순환적 연구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청년 과학기술인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기술혁신을 연계하고, 사람중심의 과학기술정책을 뒷받침 할 것이다. 출연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는 학생연구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이공계 박사 출신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산업맞춤형 연수와 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결혼, 임신, 출산 과정에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 과학기술인의 연구 현장 복귀를 지원하여 연속적인 연구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한편, 미래의 신산업 및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융합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인문·사회·문화예술 등 다양한 영역의 학문과 과학기술 간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및 국가전략 분야 육성강화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중점 추진하고, 국가전략프로젝트 관련 기술 및 서비스 실증과 함께 시장선점을 위한 원천기술개발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수요와 연계한 에너지 분야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확보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밀의료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신약 후보물질의 기업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세계시장에서 성장률이 높고 핵심기술의 선점도 가능한 태동기 바이오 의약품, 융복합 의료기기 등의 시장진입을 지원할 것이다. R&D 투자를 통해 신 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환경규제가 신산업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며, SW, 콘텐츠, 의료, 관광, 물류, 교육, 금융 등 7대 유망新서비스 관련 R&D를 지원하여 서비스 신산업 육성의 초석을 마련할 것이다.

■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위한 R&D 투자확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구현을 위해 재난재해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부처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상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예측 기술, 온실가스 감축 기술, 기상현상에 의한 피해 저감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R&D 투자도 강화한다. 또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세계적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치매 조기진단, 치료, 돌봄서비스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진단 및 예방, 확산 방지 등 감염병 대응 R&D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 R&D 분야 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 분	'17	'18	'19	'20	'21	연평균 증가율
□ R&D 분야	194,615	196,338	197,319	198,306	200,289	0.7
○ 기초·나노 등	23,368	24,032	24,846	24,882	25,185	1.9
○ 에너지·환경 등	21,849	22,367	22,860	23,742	24,855	3.3
○ 우주항공·생명 등	50,407	49,669	50,825	51,612	48,884	△0.8
○ 기계·제조·공정 등	14,330	13,690	14,071	13,967	14,026	△0.5
○ 전자·정보 등	25,951	26,033	28,002	27,751	26,965	1.0
○ 기타	58,709	60,548	56,715	56,352	60,374	0.7

(3) 중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 수요에 기반한 R&D지원체계 구축

그동안 R&D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예산 편성 및 배분 과정에서 기초·응용·개발 연구간 적절한 비중에 대한 고민은 다소 부족했다. 또한, 정부는 지속적으로 기초연구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나, 연구현장 체감도가 낮아 상향식(Bottom-up) 자유공모사업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R&D 총량 유지를 전제로, 기초·응용·개발 연구 간 비중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중장기적으로 R&D 투자방향을 설정 검토할 예정이다.

기초연구 분야의 개인 연구자를 위한 R&D예산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투자가 중장기적인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연구성과의 질적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집단연구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공동·협력

연구에 대한 효율성 저하 우려를 불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개인 연구과제 평가 시 peer review 강화로 우수과제를 엄정하게 선정하고, 논문 수, 특허 수 등의 '양 중심' 평가에서 '질 중심' 평가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집단연구는 사업평가 시 전용 공동연구실 확보여부 및 활용실적 등 실질적인 집단연구 수행 여건을 검증하여 평가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확대와 함께 시장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지원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자유공모·품목 지정 혼합형 과제를 완전 자유공모형 과제로 전환하고, R&D 사업 평가 지표를 개선하여 신기술 개발에 대한 성능 인증 절차를 완화할 것이다.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개별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R&D'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기술·신제품 개발에 따르는 리스크를 분산하고 개발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대학 내 구성원이 자본 없이 우수한 기술만 보유해도 창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중기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가 상호 연계지원하여 사업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기술창업이 활성화되는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수도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R&D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 지역이 원하는 과제를 발굴·기획하는 '지역수요 맞춤형 R&D'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중앙 정부 주도의 R&D 기획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적으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D 기획 및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관행적 R&D 지원체계 개선

그동안 기반구축형 지역 R&D 사업은 각 지역의 요구에 따라 확대되어왔으나, 일부 지역R&D센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지역별 유사 센터 건립 요구가 빈발하고, 가동률이 계획 대비 현저히 낮은 곳이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부처 및 사업군 중심으로 현황 조사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국가 전반에 걸친 체계적 관리는 다소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에 지역 기반구축형 R&D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기존에 구축된 시설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활용성과를 신규 센터 설립 여부 결정시에 참고하는 등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구축 현황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사·분석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고 중복 연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3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부처 R&D 사업은 2017년 현재 총 16개 부처, 20개 사업이다. 2017년 예산 편성 시 다부처 R&D 추진체계를 2단계로 개편하여 ①예산요구 단계부터 실질적인 협업 유도를 위해 ‘부처매칭형 방식’을 도입하고, ②운영 및 평가 단계에서는 실질적 협업상황에 대해 분기 또는 반기별로 정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는 차년도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향후에도 다부처 R&D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진체계 점검을 통하여 전반적인 협력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투자규모가 크고, 위험도가 높은 우주분야 등 대형연구시설 장비사업의 경우에는 PM제도(종합사업관리제도, Project Manager)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 전과정에 대한 전문적·과학적 기법의 분석이 이루어지고, 공정·비용·성과·리스크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고위험·고비용 R&D사업에 대한 사전 위험요인을 예방하고, 철저한 사업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다.

끝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 확대 등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존에 성과가 미흡하고 관행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R&D 사업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유사·중복 사업들에 대한 통폐합,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들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 관행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장기계속사업에 대한 일몰제 적용, 대형 R&D 사업들에 대한 사업계획 재점검 등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지출 효율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적용하여 새정부의 국정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점검해 나갈 것이다.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17		'21
▪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조원)	1.3	⇒	2.2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조원)	1.2	⇒	2.2
▪ 중소기업 R&D 지원(조원)	3.1	⇒	3.8

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지난 5년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총지출은 연평균 0.8% 수준 증가하였다. 그간 정부는 산업체질 개선, 미래 신성장 산업의 조기 창출, 수출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적 관리,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보편적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한 재정적 노력도 함께 확대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오고 있다.

어려운 국가 재정여건 속에서도 산업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우리나라 개별 기업은 물론 전체 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FTA 시장규모가 2012년 55.2%에서 2016년 77%로 확대되었고 신흥시장에서의 우리나라의 수출비중과 우리 제품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경제 환경은 이러한 현실에 안주할 만큼 우호적이지 않다. 글로벌 저성장 기조의 지속, 중국 등 신흥국가의 추격 등으로 제조업 위주의 성장전략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선진국은 4차 산업혁명의 대변혁에 대응하여 자국의 강점을 활용한 선제적 정책 마련으로 후발국과의 격차를 더욱 벌려 놓고 있다. 우리나라도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통하여 수출과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제조업 부흥과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재정투자 추이 >

	'13	'14	'15	'16	'17	연평균 증가율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조원)	15.5	15.4	16.4	16.3	16.0	0.8%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 신속한 산업 구조조정 및 제조혁신 강화

정부는 제조업 부흥을 위한 우선적 조치로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활력법」을 통해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위한 금융·R&D 지원을 지속하고 협력업체·소상공인 등 지역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와 체계적 지원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ICT 기술융합을 통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한국의 제조업 현실에 적합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속 지원한다. 이미 2016년말까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2,800개를 구축하였고, 2017년에는 누적 5,400개를 보급하고, 2022년까지 총 20,000개의 스마트공장을 전국에 보급할 예정이다.

■ 수출구조 혁신 지원 및 외국인투자의 질적 고도화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 모멘텀을 지속하기 위해 수출 품목·주체·시장·방식 등 수출구조 혁신도 가속화한다. 수출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 대상 해외마케팅, 무역금융 등을 집중 지원하여 연간 5천개 내수기업을 수출기업화하고 중소기업부터 대기업을 아우르는 수출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도 병행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고 무역마찰이 적은 관광·콘텐츠·지재권 등 유망 서비스 분야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 중국에 대한 교역집중도를 완화하고 10개 신흥국(Next-10) 중심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경제규모 대비 여전히 낮은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을 높이고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도 강화한다. 권역별 타겟팅과 집중적인 IR을 통해 고용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 서비스업·그린필드형·스타트업 분야의 외국인투자를 중점 유치하고, 맞춤형 원스톱 유턴지원을 통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할 계획이다.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산업구조 혁신

우리만의 강점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전을 신산업 창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세계적 수준의 IT 인프라와 제조업 포트폴리오 등을 기반으로 미래 유망 신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신소재, 자동차, 조선, 가전, 에너지신산업 부문에서 AI, IoT 등의 기술선점과 응용·산업화 관련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적기 대응을 위해서는 개별 기업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선순환적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업종별 글로벌 동향, 산업 생태계 경쟁력 등에 대한 상시분석 체계를 통해 사전예보를 강화하고 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 청년창업가 양성을 위한 창업지원 확대

청년창업, 대학 내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유망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고, 창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유망한 청년 창업자에게 창업교육, 사업화, 자금 지원, 창업 보육 등 창업 전 단계를 원스톱(One-Stop) 방식으로 연계 지원하는 ‘창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한다. 창업 단계별로 성과를 점검하여 각 단계를 완수한 창업자에게는 다음 단계의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 필요성을 점검하여 신속히 후속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대학(원)생들의 창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창업교육,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는 창업선도대학 지원도 강화한다. 창업선도대학의 성과 관리 강화를 통해 창업지원 성과를 제고하는 한편, 교육부·과기부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하여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을 도입함으로써 대학 내 구성원들의 우수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의 유망 아이디어와 고경력 퇴직인력의 경험을 매칭하여 우수한 창업기업 육성도 지원한다. 창업을 원하는 청년과 퇴직자를 연계 지원하여 창업 효율성을 제고하고, 청년 창업가에게 고경력 퇴직인력의 경험을 전수해주는 컨설팅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청년 전용 창업자금 용자를 비롯한 창업기업 자금 용자를 확대하는 등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확대하고, 자금 지원과 연계되는 컨설팅 등 후속 지원도 지속한다.

■ 민간 인프라를 활용한 창업 저변 확산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다양한 혁신적 아이디어가 손쉽게 사업화까지 연계되어 다수의 새로운 사업 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민간 인프라를 활용한 창업 저변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학생·직장인 등 일반인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쉽게 구현화되고, 사업화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혁신·융합형 메이커 스페이스(크리에이티브랩) 구축을 지원한다.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여 아이디어를 구체화해볼

수 있는 공간(일반랩)과 전문적 시제품 장비 등을 활용하여 아이디어의 창업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공간(전문랩)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메이커 전문인력 양성 및 메이커 페어 등 혁신적 문화활동도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민간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더 강화한다. 성공한 벤처기업 등이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창업기업을 선발하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집중 지원·육성하는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소·중견기업 및 벤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혁신적 아이디어가 또 다른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내창업·분사(Spin-off) 활성화를 지원한다. 민간 기업에서 사내창업에 투자를 하면 정부가 추가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적극적인 사내창업·분사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성장단계별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강화

우수한 창업 기업의 생존률을 제고하고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창업 기업의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극복을 위해 창업 후 3~7년의 업력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 사업 아이템 검증 및 사업모델(business model) 고도화, 판로개척 및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창업 초기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신성장기반자금 등 성장 단계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을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융자를 도입한다.

재도전 계획을 가진 재기 기업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재도전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우수한 사업 계획을 가진 재창업자에게 과거 실패원인 분석, 재창업 교육, 사업화 자금까지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는 ‘재도전 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 지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성장 주기(창업-성장-재도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지속한다.

창업 주기에는 생계형 업종 중심의 무분별한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 보급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신사업창업사관 학교를 확대하는 한편, 전국 업종별 상권 정보 제공도 강화하여 창업 희망자가 스스로 생계형·과당경쟁 분야 진입을 자발적으로 자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장 주기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소상공인 평생교육원 구축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e-러닝 교육 고도화를 통해 보다 손쉽고 효과적으로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조직화·협업화 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협업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생계형 소상공인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종별 공동브랜드·상품 개발 및 공동마케팅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슈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슈퍼조합 등을 통한 체인화 추진도 지원한다.

재도전 주기에는 영세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유도하고, 유망업종 재창업 지원 강화를 지속함으로써 과잉진입-과당경쟁의 구조적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를 일정 부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해 매출액에 따라 상환 규모가 결정되고 사후관리 컨설팅까지 연계 지원하는 자금을 신설한다.

■ 전통시장 인프라 확충

전통시장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통시장 주차장 신설을 확대한다. 또한, 전통시장의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 점포에 사물인터넷 기반 화재감시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고 안전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전통시장의 시장매니저 채용 지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등을 통해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및 매출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추진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의 심화, 지진 등에 따른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 고조에 따라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정부는 원전과 석탄발전을 축소하고 대체에너지로서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높이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가로막아 온 입지 등 현장규제를 완화하고, RPS 의무비율 상향 및 선제적 계통보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투자 여건 개선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촌 태양광 확대, 주택·아파트 등에 대한 자가용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직간접적 지원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 전력믹스 전환에 필수적인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지속한다. IoT·AI 등 융합기술 적용을 통한 전력시스템의 스마트화와 함께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자립마을 등의 성공모델화를 추진한다. 건물·공장에 EMS 활용을 촉진하고 실시간 전력데이터 수집·분석이 가능한 IoE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ICT 융합기술을 바탕으로한 기존 에너지산업의 스마트화·고도화는 신기후체제 대응과 동시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통한 신성장 동력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원의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현실화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중증질환자 가구 등을 추가하고 가구당 지원단가도 에너지 가격 인상 수준을 반영하여 상향조정한다. 저소득층 거주 주택에 단열재, 창호 공사 비용 등을 지원하여 에너지절감을 돕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도 2012년 이후 동결된 단가를 인상하여 재정지원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도시가스 등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농어촌 지역 등에 도시가스 배관 또는 소형 LPG저장탱크 보급을 지원하여 에너지 사용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투자계획 >

(단위 : 십억원, %)

구 분	'17	'18	'19	'20	'21	연평균 증가율
□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16,024	15,911	15,704	15,405	15,113	△1.5
○ 산업 금융지원 부문	1,186	1,289	1,268	1,256	1,244	1.2
○ 산업 기술지원 부문	1,448	1,415	1,487	1,592	1,688	3.9
○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586	607	580	563	537	△2.2
○ 산업진흥 고도화 부문	8,967	8,695	8,736	8,484	8,254	△2.0
○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3,290	3,332	3,035	2,885	2,734	△4.5
○ 산업 중소기업 일반 부문	546	573	599	626	655	4.6

(3) 중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 중소기업 지원사업군 재정 지출 효율화

중소기업 지원사업 및 수혜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재정 지출 효율화를 위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에 걸쳐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2015년부터는 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수혜기업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고 이 정보를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이 통합관리시스템의 지원이력정보를 활용하여 부처간 유사·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출범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성과 평가·분석, 중소기업 사전협의 기능 등을 확대하고자 한다.

■ 수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제고

수출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등 수출의 낙수효과는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전체 수출 중 미국과 중국의 수출비중이 38.5%, 반도체 등 13대 주력품목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수출의 편중현상도 커져 대외여건에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취업유발 효과가 큰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수출구조 개선과 제조업 이외 서비스 분야의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우선, 중소·중견기업 수출을 전체 수출의 40% 이상(2016년 37.6%)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마케팅·무역금융 등의 지원을 집중할 예정이다. 유망시장 조사, 해외 거래선 발굴, 해외 전시회 참가 등 중소·중견기업이 선호하는 마케팅사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중견, 수출 초보기업 등을 중심으로 무역보험 지원을 집중 확대한다.

서비스업 해외진출의 성공모델 창출·확산을 위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서비스 분야 선도기업 100개사를 선정·집중 지원하고 주력 수출품목의 프리미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소비재·신산업 등 수출 품목 다변화를 함께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수출시장·품목 개척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에너지공기업 내실화 및 투명성 강화

그간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공기업들의 경영악화에 대응하여 해외자원 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수립(2016년 6월)하여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왔다. 이에 따라 자원개발 공기업들은 투자비 절감, 비핵심 자산 매각, 조직·인력 개편 등의 구조조정을 이행하였다. 그러나 누적된 부채와 이자비용 부담으로 인한 부채비율 상승과 자본잠식이 지속되고 있어 고강도 구조조정 노력의 지속과 함께 기업경영을 내실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더 크게 요구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의 구조조정을 더욱 가속화하는 한편, 자원개발 공기업 추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정부 사전협의 및 자체심의 강화 등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함께 취해나갈 계획이다.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17		'21
▪ 수출액(억불)	5,450	⇒	6,500
▪ 국가산단 가동율(%)	80.8	⇒	82.0
▪ 도시가스 보급률(%)	83.1	⇒	87.4
▪ 전통시장 주차장 확보율(%)	73.0	⇒	85.0

■ 추진목적

- 신성장동력 확보와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중견·벤처기업의 유망 사내창업팀을 발굴하여 사업화·분사 등을 지원

- ◇ '90년대 후반 벤처기업 열풍과 IMF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중심의 사내창업이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정체 상황
- ◇ 기업내 혁신적 창업 DNA의 선순환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가 필요하나, 자금 부족 등으로 사내창업 도입 및 활성화 부진
- ◇ 4차 산업혁명 변혁기에 대응하고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세계적으로 사내창업 확산 추세

■ 사업내용

- 모기업이 1억원 이상 선투자한 사내 창업팀에게 정부예산 1억원 매칭 지원
 - * 창업팀당 1년간 최대 2억원 지원(정부예산 1억원 + 모기업 투자 1억원)
- 사내창업기업의 아이디어 기술개발, 프로토타입(시제품) 개발·제작, BM개발 등 사업화 필요 자금 지원
 - * TIPS 프로그램 창업사업화의 경우도, 운영사 1억 투자시 정부 사업화자금 1억(별도 평가후 해외마케팅 1억, R&D 5억 지원)

■ 기대효과

- 모기업의 자금 및 기술·인프라 등 지원을 통한 창업성공률 제고와 이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동력 확보
- 사내창업 및 분사를 통한 소규모 투자로 신제품 개발 및 신시장 진출 등에 따른 대규모 투자 및 위험부담 없이 시장 창출이 가능
 - * 투자 지분에 대한 수익창출 및 분사기업 M&A 등을 통한 사업다각화 추진 가능

■ 추진목적

- 혁신적 아이디어가 상상에 머무르지 않고 구현·사업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와 융합할 수 있는 참여·융합형 크리에이티브 랩 생태계 구축 추진

◇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에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민간 주도의 메이커 활동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 공유·개방형으로 운영되는 민간의 메이커 플랫폼*을 통해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되어 성공사례 창출

* 테크숍(Techshop), 팹랩(Fablab), 해커 스페이스(Hacker space) 등의 온·오프라인 창작공간 또는 커뮤니티를 포함하는 것으로,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로 통용

⇒ “민간 주도의 선순환 혁신생태계 조성”이라는 글로벌 추세에 맞추어, 기존 체계를 벗어나 새로운 한국형 모델로 재편 필요

■ 사업내용

- 크리에이티브 랩 구축을 위해 상상구현터(일반랩) 70개, 창업연결터(전문랩) 5개를 구축하고, 인력양성·문화활동 등 지원
 - 사회적 참여와 저변 확산을 위해 학생·직장인 등 일반인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인 상상구현터 구축 지원
 - ‘아이디어 → 시제품 →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는 민간 전문랩인 창업연결터 구축 지원
 - 메이커 전문인력 양성, 창의적 문화활동 지원 등 아이디어의 공유·융합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지원

■ 기대효과

- 국민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확산되어 사업화까지 연계될 수 있는 참여·융합형 혁신 창업생태계 기반 구축

6. SOC 분야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SOC(Social Overhead Capital)는 경제 성장과 국민편의 증대를 위한 중요한 생산요소이다. 정부는 성장잠재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교통시설과 수자원, 산업단지, 물류시설 등 다양한 SOC 시설을 적기·적소에 공급하는데 주력해왔다.

정부의 SOC 투자는 과거 경제성장을 견인하였으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일례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SOC 분야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당시 일자리 창출과 내수회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SOC 스톡에 대해서는, 정부가 1970년 이후 SOC에 지속 투자해 온 결과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여 충분하다는 의견, 여전히 출퇴근 시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인프라의 질적 측면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립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SOC 스톡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다만, 신규건설 위주의 SOC 투자에 치중하다보니 노후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복지부문의 재정지출 소요는 증가하고 과거에 비해 SOC 투자소요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SOC 투자를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다만 재해예방·안전, 4차 산업혁명 대응, 국정과제 등 핵심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SOC 건설사업은 완공사업 위주로 투자하면서 전반적인 투자효율성 제고에 주력할 계획이다.

< SOC 분야 재정투자 추이 >

	'13	'14	'15	'16	'17	연평균 증가율
* SOC 분야(조원)	24.3	23.7	24.8	23.7	'22.1	△2.3%

* 본예산 기준(추경 포함시 '13년 25.0조원, '15년 26.1조원, '17년 22.2조원)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 교통인프라 투자 패러다임 전환

교통 인프라를 둘러싼 사회·기술·경제·환경 등 다양한 여건의 변화에 따라, 교통인프라 투자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과거 SOC 투자는 사후적 투자, 산업 인프라 중심, 양적 투자 성향을 띄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미래선도를 위한 사전적 투자, 생활 인프라 중심, 질적·전략적 투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인프라 건설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안전·운영 중심의 투자체계를 구축하고 국토 균형발전, 4차 산업혁명 대응, 일자리 창출 관련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규사업은 재해예방·안전, 국정과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위주로 최소화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고규격·과잉설계를 지양하고, 신설·확장 보다 기존 시설의 활용도 및 연계성 제고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기존 계속사업은 과거 집행실적과 투자성과 등에 따라 투자 우선순위와 연차별 소요를 재점검하고, 집행부진 사업의 경우 과감한 구조조정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신기술과 경영관리 기법을 도입하고 첨단장비를 확충하여 건설비와 운영비 절감도 추진한다.

■ 국민체감형 국토균형발전 추진

과거 성장거점을 중심으로 한 압축성장 과정에서 지역별 격차가 심화되었다. 그런데 향후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진전으로 그동안 발전이 늦었던 지역이 SOC 투자에서 더욱 불리해지고, 지역간 격차는 심화될 우려가 있다. 정부는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역별 경제적 상황과 주민 삶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잡힌 투자를 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혁신도시·세종시·새만금·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이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쇠퇴하는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등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과 도시활력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을 통해 도시내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시재생 사업이 다른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되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는 지역재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해나갈 예정이다.

■ 예방중심의 안전체계 구축

1990년대 교통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이 도입된 이후 SOC 시설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건설된 시설물의 노후화도 동시에 진행되어 노후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소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건설된 기존 시설물에 대한 안전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점차 SOC분야에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종전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 확보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도로, 철도 등의 터널과 교량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유지보수 및 보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동시에 교통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졸음운전 방지, 위험도로개선, 교통안전강화, 자동차 안전도 강화 등에 대한 안전투자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태풍 및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발생에 대응하여 하천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진 및 수해 등에 대비한 댐 안전도 제고를 위해 치수능력 증대 및 댐 안전성 보강 등을 지속 추진하여 수해예방 능력을 더욱 확보해나갈 것이다.

■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신산업 대응

4차 산업혁명은 SOC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와 같은 지능정보기술이 교통서비스에 적용되는 경우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등 국민의 삶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 기술 등을 활용하여 교통혼잡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중교통 증편, 실시간 교통량 조절, 도심 주차문제 해결 등 교통서비스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와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물류산업에도 자동화·무인화 기술을 도입하여 새로운 사업 기회와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도로 시스템 등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 교통시설의 공공성 및 편의성 제고

그동안 교통 인프라의 양적 확대를 위해 지속 투자해왔으나,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은 충분히 완화되지 못하였다.

고속도로 통행료 명절 무료화, 광역알뜰카도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농어촌 교통복지 강화를 위한 공공형 택시의 전국 확대 등 교통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저상버스 공급,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과도한 출퇴근 시간 등 대도시권 교통혼잡은 개선의 여지가 많다. 혼잡·광역도로 구축·확장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기존 전철 급행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대도시권 교통혼잡을 완화할 계획이다.

■ 권역별 거점항만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선박대형화, 국제 해운업 재편 등 급변하는 해운물류 환경 속에서도 세계 물동량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부산·광양·인천 등 권역별 거점항만을 국제물류 허브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증가 등에 대응하여 해경 부두 등을 확충하고, 여객 부두, 소형선박 접안시설 등 소규모 항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 SOC 분야 투자계획 >

(단위 : 십억원, %)

구 분	'17	'18	'19	'20	'21	연평균 증가율
□ SOC 분야	22,135	17,716	17,009	16,515	16,218	△7.5
○ 교통 및 물류	18,624	14,186	13,444	12,897	12,521	△9.4
▪ 도로	7,409	5,442	5,120	4,849	4,737	△10.6
▪ 철도·도시철도	7,144	4,714	4,456	4,275	4,074	△13.1
▪ 해운·항만	1,761	1,702	1,634	1,587	1,558	△3.0
▪ 항공·공항	144	126	140	136	117	△5.1
▪ 물류 등 기타	2,167	2,201	2,094	2,051	2,036	△1.6
○ 지역개발	3,511	3,530	3,565	3,618	3,697	1.3
▪ 수자원	1,811	1,676	1,539	1,429	1,402	△6.2
▪ 지역 및 도시	1,203	1,554	1,715	1,888	1,998	13.5
▪ 산업단지	498	3,00	310	302	297	△12.1

(3) 중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전국적으로 도시쇠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생활환경 개선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정비가 시급히 필요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열악한 저층 노후주거지, 안전등급 D·E지역 등 공공개입 필요 지역의 정비사업 보완, 동네단위 생활밀착형 편의시설* 확충, 지역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택공급·개량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아파트 기준에 준하는 편의시설 및 개방형 주민공동시설 설치 지원 등

생활 밀착형 환경개선과 함께 저밀 공용청사 복합화, 역세권 공유지 활용, 국공유 재산 활용 개발사업 등을 통해 도심의 새로운 활력 거점을 조성하여 혁신공간 창출 및 신성장동력에 기여한다.

이를 위해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지자체·지역전문가 등 추진 주체의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고, 도시재생과 연계한 지역기반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지원하여 도시재생 이익이 지역사회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순환구조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임대인·임차인·지자체의 자발적인 협력을 위한 상생협약 제도를 신설하고, 안정적인 상업활동 지원여건을 마련하여 도시재생을 통해 영세상인·주민 등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방지해나갈 계획이다.

■ 도로 공공성 강화 및 안전투자 확대

정부는 설날 및 추석 등 명절 기간 면제, 친환경차 할인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도로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추가적인 재정지원 없이 한국도로공사 사업으로 추진하여 통행료 인하효과를 볼 수 있으며, 조기 준공을 통해 세종시 활성화 등 국토 균형발전도 선도하게 된다.

아울러 버스·트럭 등 사업용자동차의 줄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 사고 방지를 위해 투자를 확대한다. 노후시설물에 대한 적기 보수·보강, 싱크홀 방지, 줄음쉼터 및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 또한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 빠르고 안전한 철도서비스 제공

정부는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및 통근시간 획기적 단축 등을 위해 수도권 일대 광역급행열차를 지속 확대하고, 서울 도심과 수도권 외곽 지역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GTX)’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사업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사전 절차가 진행 중인 여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GTX-B, GTX-C)노선도 사업추진이 확정되면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GTX)”이 당초 계획대로 모두 추진되면 수도권 통근시간이 최대 80% 이상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 * 동탄⇄삼성(A): 현재 77분 → 19분(75.3% 감소)
- 송도⇄서울역(B): 현재 82분 → 27분(67.1% 감소)
- 의정부⇄삼성(C): 현재 73분 → 13분(82.2% 감소)

정부는 철도망 확충 이외에도 기존 노후철도시설에 대한 개량투자를 확대하여 국민안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철도교량, 터널, 전기설비 등 각종 철도시설에 대해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중장기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설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철도시설의 과학적 시설관리를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철도시설 유지관리 품질을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첨단 기계장비를 도입하고, 시설 생애주기 정보를 관리하는 시설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 공항투자 확대와 안전한 하늘길 조성

저비용 항공사(LCC)의 공급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중국·일본·동남아 관광객 증가에 따라 인천뿐만 아니라 지방의 항공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점을 고려하여, 거점별 공항 SOC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김해신공항 및 제주2공항 개발을 본격 시작하고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추진한다.

대구 혁신도시 일원에 제2항공교통센터,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 청사 및 시스템 완공 등 항공교통관리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항공교통 안전성도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한국형 위성정밀위치서비스(SBAS) 연구 개발로 항공안전 및 연관산업인 자동차 및 비행기 자율주행, 비행연료 절감, 물류수송 자동화 등 4차산업 혁명에도 향후 크게 이바지할 전망이다.

■ SOC 분야 4차 산업혁명 적극 대응

교통안전 제고 및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2020년 레벨3 자율주행차(고속도로 등 일정구역 자율주행 가능) 상용화를 추진한다. 테스트베드 'K-City' 조성 등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C-ITS와 3차원 정밀도로지도 등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각종 시범사업과 함께 안전기준 등 법·제도 정비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첨단기술이 융합된 드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로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다. 드론산업 창업지원, 기술개발, 시험 인프라 및 제도개선 등 소생애주기 맞춤형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는 교통·에너지 등 도시내 개별 분야와 ICT·빅데이터 등 핵심기술이 융·복합된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이자 미래 먹거리사업으로 각 국에서도 스마트시티 정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선정·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시티를 통해 성장활로를 모색해 나갈 것이다.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17	'21
▪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 (명)	4,250	2,700
▪ 자율주행차 상용화	레벨2	레벨3
▪ 비즈니스 드론 상용화 (드론사업체/등록대수)	1,031/2,171	2,500/5,400
▪ 국도 안전성 미흡 구간 (km)	1,792	1,161
▪ 댐 홍수조절용량 (m³)	51.9	53.6

■ 추진목표

- (주거복지 실현) 거주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을 우선 정비하고,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 (도시 경쟁력 회복) 단순 주거환경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기능을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resilience)
- (사회 통합) 재생 과정에서 소유주와 임차인, 사업주체와 주민간 상생 체계를 구축하고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
- (일자리 창출) 주거공간 외에도 업무, 상업, 창업 공간 등 다양한 일자리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에 기반한 좋은 일자리 창출

■ 추진방향

-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단위 사업 규모를 줄여서 대규모 철거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방식
- 도시재생사업의 도시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 2개 유형에서, 우리 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5개 유형으로 다양화

< 사업유형별 특징 >

구분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지 지원형	일반 근린형	중심 시가지형	경제 기반형
대상 지역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저층 주거밀집지역	골목상권과 주거지혼재	상업, 창업, 역사 관광, 문화예술 등	역세권, 산업단지 등
특성	소규모 주거	주거	준주거	상업	산업
면적 규모(m ²)	5만 이하	5~10만	10~15만	20만	50만

7. 농림·수산·식품 분야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최근 5년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은 연평균 1.7% 증가하였다. 농림 부문은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우선 중점을 두었으며, 재해예방·가축전염병·식품안전 등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여 농식품분야 재해대응 능력을 보강하였다. 또한, 농업인 생활안정과 노후위험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특히 2013년에는 중장기 농정 로드맵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13~’17)」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전업농, 중소농, 영세 고령농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였다. 전업농에 대해서는 ICT 보급 등 첨단화와 규모화·전문화로 수출경쟁력이 있는 핵심경영체를 육성하고, 중소농에 대해서는 조직화 및 6차산업화로 부가가치를 제고하였다. 영세고령농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수산 부문 역시 최근 5년간 2013년 1.5조원에서 2017년 2.1조원으로 연평균 8.8% 증가하였다. 이러한 재정 확충을 통해 수산물 수출 지원, 첨단 양식기술 개발, 과학적 수산 자원 관리, 수산 식품산업 육성 등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어촌 6차 산업화, 귀어귀촌 활성화, FTA 대책 등을 통해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힘써 왔다.

산림 부문은 산림자원 육성과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숲을 찾는 국민적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산림복지서비스 공급을 확충하였다.

<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투자 추이 >

	'12	'13	'14	'15	'16	연평균 증가율
* 농림·수산·식품분야(조원)	17.6	18.1	18.4	18.7	19.3	1.7%

* 본예산 기준

그러나,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어촌 경제의 활력이 점차 저하되고 있다. 전체 인구에서 농어가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젊은 층의 농촌유입이 정체되면서 농촌 고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그 결과 지속적인 재정투자에도 불구하고 농림어업 분야의 생산성 제고 및 부가가치 창출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GDP에서 차지하는 농림어업 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농림어업분야 비중(명목GDP 대비): ('10) 28.3조원(2.2%) → ('16) 32.7조원(2.0%)

* 농어가인구(총인구 대비): ('10) 323.4만명(6.5%) → ('16) 262.2만명(5.1%)

또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 농업경영비 상승, 주요 채소류의 수급불안, 빈번한 재해발생으로 인해 농업 소득이 정체되고 있으며, 의료·교육·문화 등 생활 인프라의 도농간 격차는 여전한 상황이다.

* 1인당 연간소비량: (쌀) '00년 93.6kg → '15년 62.9, (채소) '00년 165.9kg → '15년 158.1

* 상수도 보급률/도로포장률('15) : (전국) 96.4%/92.1, (농어촌지역) 73/47.9

여기에 최근 국민 먹거리 안전성 문제가 새로운 정책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근본적 방역체계 구축, 농축산물 안전성 확보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 지속가능한 농어업 기반 조성

농업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노동집약적 전통 농업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IC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농업의 생산·유통·가공 등에 접목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빅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형 스마트 팜 도입의 확산과 대규모 스마트 팜 생산·유통단지로서 스마트 원예단지 지원을 확대하여 첨단 농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 분야를 청년층이 취업과 창업에 도전할 만한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 분야로 육성한다. 국가 전체 취업자(2,623만명)의 약 14.5%가 농식품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등 첨단기술과의 융합과 청년층의 귀농·귀촌 증가 등으로 농식품 분야는 좋은 일자리 창출의 잠재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에 청년 창업농에 대해 성장 단계별로 자금·기술·농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생산·유통·가공에 이르는 청년 ‘벤처 농업’을 육성하는 한편, 현장 창업 보육 확대,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 및 식품·외식 연관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전후방 농식품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AI 등 가축질병 발생, 농축산물 안전성 문제 등으로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신뢰가 저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가축질병 예방 대책 지원과 농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열악한 축산환경이 가축 질병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을 확대하고 동물복지형 축산농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농어업인 소득안전망 확충과 경영위험 완화

최근 개방 확대, 고령화, 농산물 가격 변동 등으로 농업 소득이 정체되고 있고, 이상기후에 따른 빈번한 자연재해 발생으로 농업 소득의 불안정성 또한 커지고 있다. 따라서 농업인의 소득 안전망을 확충하고 경영위험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밭농업직불금, 쌀직불금 등 다양한 직불제를 지속 지원하는 한편, 밭고정·조건불리·친환경 직불제 등 단가 인상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 농산물 가격 불안 등에 따른 경영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보장보험 및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보장성 확대와 다양한 상품 개발 등으로 농업인의 소득·경영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 농작물·가축 재해보험 : ('17) 69 품목 → ('19) 75 → ('21) 79
- * 농업수입보장보험 : ('17) 6 품목 → ('19) 8 → ('21) 10
- * 어업재해보험 가입품목 : ('16) 24품목 → ('17) 27 → ('19) 27

또한, 구조적 쌀 공급과잉으로 인한 쌀값 하락 추세와 주요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성은 농업인의 경영위험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농산물 수급을 구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쌀 생산조정제를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쌀 수급안정을 도모한다. 또한 채소가격 안정제의 품목 및 계약물량을 확대하여 주산지 중심의 자율적인 수급대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어촌 조성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의 주거·교통 등 기초 생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농어촌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등 취약농가 인력지원 확대, 농촌형 교통모델(100원택시) 등 농촌의 특성을 반영한 체감형 복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확대와 농지연금 상품 다양화 등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촌 지역별 여건에 맞추어 맞춤형 지역 개발 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소화된 마을을 연계한 소생활권 조정, 중심 마을과 읍면 소재지를 연계한 농촌 중심지 고도화, 농촌의 특화자원을 발굴·개발하는 농촌 활력 지원 사업 추진 등 농촌 마을의 특성에 따라 농촌 지역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3) 중점 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 농식품 분야 후계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창업 활성화를 통해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활력이 저하된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청년 실업 등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최근 농식품 분야는 4차 산업혁명 등 첨단기술과의 융합, 귀농·귀촌 증가 등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여건이 성숙되고 있으나 농지, 창업자금, 영농기술 등 사업 초기 비용과 높은 기술장벽 등이 창업 제약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영농정착 제약요인 설문 : 자금부족(51%), 농지(42%), 주거(26%), 영농기술(21%)

이에 성장단계별로 자금·농지·기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청년 ‘벤처농업’을 육성한다. 우선 `18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제를 도입하여

창업 초기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월 100만원)하고, 청년층에 대해 농지를 우선적으로 임대해 주기 위해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창조농업선도고교, 농대 영농특성화과정, 한국농수산대 입학정확 확대 등을 통해 실습 중심의 기술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 분야에 특화된 지원을 통해 벤처 창업분을 가속화하여,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장 창업보육을 확대하고,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모태펀드 등 농업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외식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경영역량 교육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 농산물 구조적 수급 안정 강화

식생활 패턴 변화에 따른 쌀 소비 급감에도 불구하고 쌀에 편중된 농업 위주의 생산 구조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구조적으로 쌀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한다. 논에 쌀이 아닌 콩, 조사료 등 타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일정 소득을 지원하여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쌀 적정 생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FAC(식량원조협약) 가입을 통한 쌀 해외원조 실시, APTEER를 통한 소규모 원조 확대, 복지용·사료용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신규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쌀 수급안정을 추진한다.

또한, 가격변동성이 매우 큰 주요 채소류의 수급을 구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채소가격안정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평년가격의 80%를 보전하는 조건으로 계약물량의 50%까지 사전적 수급 조절 의무(생육단계 폐기, 출하정지 등)를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사전적·자율적 수급안정 체계를 구축한다. 대상품목을 배추, 무, 마늘, 양파 4개 품목에서 고추를 추가하여 5대 주요 채소까지 확대하고, 계약물량도 품목별 생산량의 8%에서 15%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농업 분야 재해 대응 강화

이상 기후 등으로 최근 우박·가뭄·수해 등 기상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농업 분야의 심각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농업 분야 재해 대응을 위해 운영 중인 재해대책비, 농업재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등을 개선하고, 재해 발생 위험으로부터 농가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재해 발생 이후 지급되는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타 산업에 비해 농작업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에도, 보험료 부담 등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영세 농업인 부담 경감 차원에서 국고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산재보험 보장 수준의 상품을 개발·보급하여 농업인의 영농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산업전체 재해율(4일 이상 요양)은 0.5%, 농업분야는 0.94%('15년)

■ 가축 전염병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며, 먹거리 안전성 및 축산업 산업 기반 침식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가금 밀집지역, 사육시설이 열악한 농가에서 AI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특단의 사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상시적인 방역체계 구축 등 방역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사육밀도 기준 강화와 함께, 밀집사육 지역 내 농장 간, 일정 간격 이상이 확보 되도록 축사시설을 이전을 지원하는 한편, 계란수집상인들이 가축전염병 전파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계란 GP시설 유통의무화와 연계하여 GP시설 신축·개보수를 지원하고 전통시장 내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 등 열악한 사육·유통 환경 개선을 통해 가축질병에 대한 체질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전업 축산농장 CCTV 설치 지원, 신속한 역학조사 및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축산차량 GPS 등록대상 확대 및 축산차량 관제센터 설치, 지자체별 현장 방역 인력 교육, 축종별 농가대상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원 등 예방 중심의 상시방역 체계 구축과 강력한 초동 대응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지역 균형발전 및 농촌 활력 증진

도농격차 확대, 농촌 지역간 양극화 심화 등 지역 균형발전 및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 농촌 지역 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농촌 개발 사업을 개편하여 농촌 마을의 특성에 따라 공공서비스 공급 및 전달체계를 차별화 시킬 계획이다.

또한, 농촌 재능나눔 캠페인, 농촌 관광 활성화 지원 등으로 농촌활력을 제고하고, 사회적 농업 활성화 등으로 새로운 농촌사회 서비스 제공 모델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 안정적 수산물 공급 및 수산물 수출확대

순환 여과식, 바이오플락 등 친환경 양식시스템을 지원함으로써 첨단·대량 양식생산 기반을 지속 구축하는 한편 자원 남획, 치어 포획 등에 의한 자원 감소와 고갈을 방지하지 위해 수산자원 조성사업 및 연근해 어업 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또한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대중성 어종 대상 비축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안정적 수산물 공급을 기반으로 위생관리, 유통, 가공, 홍보 등 각 단계별로 수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수산물 이력제 및 양식장 HACCP 등록 컨설팅을 지속 추진하고, 패류 생산해역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 실시와 패류 공동 가공시설 지원 등을 통해 수산물 생산·가공단계의 위생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 산지거점 유통센터(FPC)를 건립하는 한편,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과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하여 지역별 특화품목 위주의 가공업체를 집적화한 수출 지향적 수산식품 거점단지를 지속 지원하고, 아세안, 유럽 등 주요 수출시장으로 해외수출지원센터를 확대하여 수산물 수출업체의 현지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1500톤급 조사선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서해5도, 이어도 등 지역의 수산자원을 정밀 조사하고, 어업지도선을 지속 건조하여 중국 불법조업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자원 안보를 확립한다.

■ 산림자원 육성·관리 및 산림산업 경쟁력 제고

70~80년대 조림한 나무들의 벌채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원가치가 높은 경제수종으로 교체하고 기능별로 산림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경제림 단지를 중심으로 조림, 숲가꾸기 사업 및 임도 시설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가뭄, 홍수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산림재해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예방 중심으로 3대 산림재해(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의 재난 안전 대응체계를 확립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산사태 방지는 사방댐 등 구조물 설치 중심에서 예방·경계 피난 등 비구조물 대책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한·중 FTA 등 대외개방에 대응하여 청정임산물 생산·유통 구조 개선 및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최근 늘어나고 있는 귀산촌인의 정착을 지원하고,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융자 지원도 확대한다.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17	'21
▪ 스마트팜 면적(ha)	4,000	6,263
▪ 농촌복지 체감 만족도(%)	62	66
▪ 밭/조건불리 직불 단가(만원/ha)	45/55	65/70
▪ 동물복지형 농장비중(%)	8	30
▪ 재해보험 가입률(%)	23	31

8. 환경 분야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환경기초시설 보급률 확보

환경기초시설 투자 위주의 상하수도·수질 부문 예산은 2016년 환경부 예산의 60.5%를 차지하였다. 그간의 투자로 2015년말 기준 전국 상수도 보급률 98.6%, 하수도보급률 92.5%에 이르는 등 선진국 수준의 보급률에 근접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도농격차 문제가 여전하고 기초시설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4대강 녹조 등 하천 수질 문제가 정제 혹은 악화 상태에 있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적극적 보조금 정책으로 친환경차 초기시장 형성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확대함에 따라, 2016년말 전기차 누적보급대수가 최초로 1만대를 초과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2016년 기준 친환경차 보급예산이 대기부문 예산의 62%를 초과하는 등 예산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 화학물질 안전관리제도 정비

2,206종의 화학물질 유해성 등 안전정보를 확보하고, 주요 생활화학 제품 23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여 안전·표시기준을 제정하는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흡입독성시험시설 등 유해성 평가기반이 미약하며, 중소기업 지원 등 이행대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 환경 분야 재정투자 추이 >

	'12	'13	'14	'15	'16	연평균 증가율
* 환경 분야(조원)	5.9	6.3	6.5	6.8	6.9	3.6%

* 본예산 기준(추경 포함시 '13년 6.5조원, '15년 6.9조원, '16년 7.0조원)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 노후시설 개량 중심 수질사업 내실화,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보급률을 고려하고,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편중된 환경부 예산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신설투자를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동 수질사업 예산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환경기초시설 노후화에 따른 지반침하, 수도관 파열, 누수 등의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노후 시설 개량 예산을 확대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한 상습침수지역 정비,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 대한 투자 등은 강화함으로써 내용면에서 내실을 기할 계획이다.

또, 4대강 녹조 등 수생태계 건강성 악화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여 수생태계 건강성과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도시침수와 가뭄을 완화하고, 비점오염원도 저감하는 등 종합적인 물관리 솔루션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미세먼지 저감효과에 초점을 맞춘 대기분야 투자

서울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2012년($41\mu\text{g}/\text{m}^3$)을 저점으로 상승하고 있고 (2016년 $48\mu\text{g}/\text{m}^3$),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함에 따라 전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된 상황이다. 새 정부 국정과제로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를 저감하기로 함에 따라 그간 친환경차 예산 위주로 확대되어온 대기부문 예산을 미세먼지 저감효과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따라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나 건설기계 저공해화 등 단위 투입비용당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는 한편, 그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4~5종 영세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인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기술의 성숙과 시장 내 자생적인 경쟁력 확보추세를 고려하여 친환경차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방침이며,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 등 비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대기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축소하고, 여기서 마련된 재원을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투자로 전환할 방침이다.

■ 환경산업 육성 및 수출산업화 지원

환경부문에 특화된 전문무역상사를 설립하여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발전가능성이 큰 중소 환경기업과 환경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투자하는 환경산업 전문 펀드를 운용함으로써 환경산업이 환경 보호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역할을 하도록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 자원순환기본법 본격 시행으로 자원순환사회 건인

2018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순환자원인정 제도와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소각 및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신설함으로써 본격적인 자원순환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한다.

매립장,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지속하되, 노후 시설 현대화나 인접지역간 광역화에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농촌 지역 환경오염 및 미관훼손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영농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에너지화를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 한반도 3대 핵심생태축 보전·복원, 도시생태계 건강성 회복

백두대간, 4대강, DMZ, 국립공원, 습지 등 핵심생태계의 훼손지역을 적극적으로 복원함으로써 한반도 전체의 생태적 건강성을 관리하고,

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도시지역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한다.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습지, 생태·경관우수지역, 도서지역 등을 자연환경보호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추가 지정하고, 보호지역 내 사유지 매입 및 훼손지 복원 등 생태복원 사업을 강화한다.

도시 내 유휴공간을 생태공원화하는 자연마당 조성사업 등을 통해 생활주변의 생태적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생태관광 성공모델 발굴·확산과 자연환경해설사 증원 등을 통해 국민들의 생태체험 기회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국가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출범시키고, 국내 생물주권 확립 및 해외 유용자원 확보 등을 적극 추진한다.

■ 화학물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 체계 공고화

1톤 이상 유통화학물질(약 7천종)을 의무적으로 등록토록 하고, 살생물제 제품은 사전에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제도를 대폭 강화함에 따라, 흡입독성시험시설 등 화학물질 위해성 시험기반을 확충하고, 중소기업의 이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환경 분야 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 분	'17	'18	'19	'20	'21	연평균 증가율
□ 환경 분야	69,160	67,773	66,726	65,714	64,749	△1.6
○ 상하수도·수질	41,679	38,972	38,471	38,173	37,161	△2.8
○ 폐기물	3,492	3,106	3,069	2,792	2,559	△7.5
○ 대기	5,798	7,570	7,647	7,584	8,568	10.3
○ 자연	5,906	5,778	5,583	5,450	5,207	△3.1
○ 해양환경	2,533	2,621	2,732	2,745	2,395	△1.4
○ 환경일반	9,751	9,725	9,223	8,971	8,859	△2.4

* '17년은 국회확정 예산기준

(3) 중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 미세먼지 저감 사업

2016년 서울의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48\mu\text{g}/\text{m}^3$ 으로, 도쿄($21\mu\text{g}/\text{m}^3$), 파리($22\mu\text{g}/\text{m}^3$) 등 선진국 도시 대비 2배 이상 나쁜 수준이며,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은 연간 약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한국대기환경학회, 2016) 이에 따라 새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30% 감축(2014년 32만톤 → 2022년 22만톤)하여, 2022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를 선진국 수준인 $18\mu\text{g}/\text{m}^3$ 로 낮추겠다는 국정 목표를 제시하였다.

먼저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수송 부문에 대해서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당장 폐차가 어려운 차량에 대해서는 매연저감장치(DPF)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대형화물차나 건설기계 등에 대해서도 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 엔진 개조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사업장 배출원에 대해서는 먼지총량제나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등 비재정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면서, 4~5종 영세사업장에 대해 모니터링 등 실질적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한-중 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한중간 미세먼지 협력을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기 위한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친환경차 보급예산은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친환경차 협력금제도 등 비재정사업으로 단계적·점진적으로 전환하여 재원을 절감한다.

■ 화학물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 강화

2017년 2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으로 간병비 및 특별 유족조위금 등을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다. 한편, 가해기업 부도로 구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긴급의료지원 등이 필요한 피해자는 특별법상 가해 기업 분담금으로 조성한 특별구제계정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부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여 특별구제계정에 일정부분 출연할 계획이다. 앞으로 피해자 보건센터를 확충하는 등 피해자 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살생물제관리법을 제정하여 살생물제는 사전에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흡입독성시험시설을 당초 2022년까지 2개소 구축이 목표였으나, 2019년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법 이행을 지원하며, 살생물제법 시행에 대비한 시범사업 등을 통해서 살생물제 관리 제도에 대한 기반을 확고히 해나갈 예정이다.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구분	'17		'21
▪ 미세먼지 국내배출량(만톤)	32('14년)	⇒	22
▪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등록건수(개)	510('17목표)	⇒	1,600
▪ 국토 중 보호지역 면적 비율(%)	11.2('16년)	⇒	17

■ 추진배경

-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통학용 차량을 LPG차 등 친환경적인 차량으로 교체 추진
- 어린이 통학차량 약 8.9만대('17.5) 중 약 97%가 경유차에 해당
 - * 경유차는 LPG차 보다 약 20배 이상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WHO 국제발암연구소(IARC)에서 경유차 배출가스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

■ 주요 사업 내용

- (사업기간) 2017년 ~ 2022년
 - * '17~'18년까지 시범사업 추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본사업 추진 검토
- (사업내용)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15인승 이하(소형) 노후 경유차량을 LPG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 (사업규모) 2009년 이전 등록된 소형 경유차(26천대) 대상, 2017년에 800대, 2018년에 1,800대 지원
 - 2017년 2008년 이전 등록차량, 2018년 2009년 이전 등록차량 대상
 - 2019년부터 차령 9년이 도래하는 차량(2010년 이후 등록) 대상 검토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3조의2 : 2019.1.1.일부터 어린이 통학용도 자가용 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제한, 차령 10년 이상 차량(2009년 이전 등록)은 사용불가
- (지원조건) 노후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 구입 시 5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 정액 지원
- (지원지역) '17년(추경) 신규사업의 효과성 고려 서울시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18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원

■ 기대효과

- 미세먼지에 특히 취약한 어린이 건강 보호 및 미세먼지 저감 기여

■ 추진배경

- 최근 환경산업의 급성장 및 향후 유망한 성장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가 저조하고, 환경전문기업 영세성으로 인해 수출에 한계

* 국내 환경산업 매출액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 9.2%(‘16년 환경산업통계)

** 벤처캐피탈 업계 운용자금의 약 2%만이 환경분야에 투자(‘15)

■ 주요 사업 내용

- (환경산업펀드) 정부예산과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펀드를 조성하여 유망환경기업 및 해외 환경프로젝트에 투자

- (출자규모) 정부출자 350억원(‘17~‘18년), 민간자금 약 280억원

- (투자내용) 기업투자 10~15건, 프로젝트 투자 3~5건 계획

※ (유망 투자대상, ’17.6) 우량 환경기업(428개), 해외 프로젝트(총 17개) 발굴

- (환경전문무역상사) 중소환경기업 수출 지원 전문 무역상사 운영(‘18년)

- (사업내용) 환경기업, 무역 및 물류회사, 전문법인(법무·관세·회계) 등 민간이 참여한 민관 합동 전문무역상사 설립·운영

- (지원내용) 마케팅·바이어 발굴·비관세 장벽해소·계약·통관 등 기업 맞춤형 수출 지원, 환경분야 대표 수출 공동브랜드 개발(~‘19년)

■ 기대효과

- 지속가능한 환경산업 투자 선순환구조(투자→회수→재투자) 구축
- 무역상사를 통한 수출 직접 및 간접 지원으로 신규수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9. 국방 분야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국방비는 최근 5년간(2012~2016년) 연평균 4.1% 증가하였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전력운영부문은 연평균 4.2%, 방위력개선부문은 연평균 4.1%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국방비 내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2012년 30.0%에서 2016년도 30.0%로 동일한 수준이다.

그동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튼튼한 안보의 구현을 위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구축 및 현존 전력 능력발휘 보장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였다. 또한 병 봉급 인상, 급식·개인용품의 품질 및 지급품목 확대 등 장병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였다. 특히 北 핵·미사일 위협 대비를 위한 Kill-Chain,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등 방위력개선 분야의 주요 핵심전력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였다.

< 재정투자 추이 >

	'12	'13	'14	'15	'16	연평균 증가율
* 국방 분야(일반회계기준, 조원)	33.0	34.3	35.7	37.5	38.8	4.1%

* 본예산 기준(추경 포함 시 '13년 34.5조원, '15년 37.6조원, '16년 38.8조원)

국방비의 특성 상 인건비, 급식·피복, 군수지원 등 경직성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재정에 압박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방비 지출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군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체계 수립 및 시설·군수 조달사업의 총사업비 관리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국방 R&D예산의 전략적 투자 및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방안도 추진하였다.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 핵심전력 확보

미래 전략환경 변화와 다양한 안보위협 속에서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과 잠재적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핵심전력의 적기확보에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북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전력인 Kill Chain, KAMD(Korea Air & Missile Defense,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MPR(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대량 응징보복)의 3축체계 조기구축과 북한도발 억제를 위한 차세대 전투기(F-35A), 공중급유기, 한국형 전투기(보라매), 이지스급 구축함 등 첨단전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 현존전력 극대화

현존전력의 능력 발휘를 보장하기 위해 GP·GOP 등 접적지역의 작전·경계시설을 보강하고 전투지원시설을 현대화하며, 성과기반군수지원(PBL) 확대 등 핵심 무기체계의 군수지원능력 보장에 적극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전적 교육훈련을 위해 과학화 훈련장비 도입과 함께 대테러 및 특수전 대비 실전훈련장을 확충하고, 장병 생존성 보장을 위한 방탄복·방탄헬멧 등 야전부대 개인장구류도 확대·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동원훈련 내실화를 위해 부족 물자·장비 보급 확대, 동원훈련장 시설현대화, 예비군 훈련실비현실화 등 예비군 훈련여건 향상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 비대칭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 보장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여 방호 체계 및 대응 인력을 보장하고, 테러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보강을 위해 대테러 부대를 확대하고, 임무 수행을 위한 장비 및 피복도 구비한다.

■ 장병 생활여건 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장병들의 자랑스럽고 만족도 높은 군 복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먼저 병 봉급을 2022년까지 최저 임금의 50% 수준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병장 기준으로 70만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병사들에게 질 좋고 맛있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급식단가 인상 및 민간 조리원을 증원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기능성 내의류, 의류대 등 개선 피복류를 확대 보급하고, 장병들이 사용하는 개인용품에 대해 추가품목 지급 및 단가 인상으로 더 나은 품질의 군수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확충, 진중문고 보급 확대, 병사와 장병가족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국방 헬프 콜 운영 등을 통해 군 생활 적응 및 사고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병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군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의료 시설·장비도 현대화할 계획이며, 응급 환자를 1시간 내에 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는 이송체계를 구축하여 골든타임 확보를 보장하도록 한다.

■ 국방 과학기술 확보 및 국방비 지출효율성 제고

국방R&D 투자 확대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역량을 발전시키고 수출 증대에도 기여한다. 따라서 신규 무기체계 기술개발역량을 확대하고 민간 우수기술과 국방기술을 상호 활용하여 발전적인 방위사업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사전심의를 통해 국방 R&D와 민간 R&D간 중복투자를 방지한다. 국방비 소요검증 강화, 사업타당성 조사 등 무기체계 도입 절차에 외부 전문기관을 참여시켜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계약·원가제도의 합리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지출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 국방 분야 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 분	'17*	'18	'19	'20	'21	연평균 증가율
□ 국방 분야	403,347	431,177	453,167	477,185	504,455	5.8
○ 전력운영비	281,377	296,352	308,154	322,100	337,985	4.7
○ 방위력개선비	121,970	134,826	145,013	155,085	166,470	8.1

* '17년은 국회확정 예산기준

(3) 중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 북한도발 대비 핵심전력 강화

북한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군 정찰위성,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Kill Chain 전력과 패트리엇 성능개량,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등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전력을 조기에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국지도발 및 전면전에 대비하기 위한 대포병탐지레이더Ⅱ, 230mm급 다련장, 국지방공레이더, 2.75" 유도로켓 등 효과적인 대응 전력을 적기에 확보해 나갈 것이다. 한국형 전투기(보라매), 이지스급 구축함, 차세대 전투기(F-35A), 대형공격 헬기 등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첨단전력도 지속적으로 개발·보강할 계획이다.

■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부대개편 필수전력 확보

국방개혁 추진에 따라 확장된 작전지역 감시·통제를 위해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 능력을 확충하고, 병력감소에 대비해 기동·정밀타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형전술차량 등을 대대급 이하 부대에 보급하여 전투력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또한 네트워크화된 지휘통제통신체계 구축을 위한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확장된 전장 내에서 신속하게 기동하고 정밀타격을 할 수 있는 차륜형장갑차 및 K9 자주포, 해양통제 및 상륙전 능력 강화를 할 수 있는 구축함(광개토-III Batch-II), 상륙함-II 등의 확보를 통해 자주적 방위태세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 야전부대 전투력 발휘 보장

대대급 이하 전투부대 전투력 발휘를 위해 방탄복, 방탄헬멧, 전투배낭, 전투조끼 등 신형 개인장구류를 확대·보급하고 대테러 및 특수작전 부대 창설에 따라 부대원들의 생존성 보장 및 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대테러 특수피복류 지원도 확대하였다.

또한 적 도발에 대비한 생존성 보장을 위해 전방포병기지 및 포대의 자주포, 장갑차, 통신 전술차량에 유개화(진지에 덮개를 덮는 것)하고, 적 피탄 및 연쇄 폭발 방지를 위한 이글루 탄약고를 신축한다.

■ 적정 군수지원 등을 통한 작전지속능력 향상

차세대 전투기(F-35A), 고고도무인기(HUAV) 등 신규 도입되는 핵심 무기체계의 전투력 발휘를 위해 적정 군수지원을 보장하고, 군수지원의 일정 부분을 민간에 위탁하는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사업을 확대해 수리부속의 조달기간을 단축하고 주요 무기체계의 가동률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항공우주작전본부 등 주요 작전시설을 신축하고, 군 물류 표준화 및 노후화된 정비고·창고 등 작전지원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작전지속 능력을 향상할 것이다.

■ 비대칭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 보강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여 기초적인 요소별 (네트워크, HW/SW, 암호장비) 방호체계를 강화하고, 신종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지능형 방호체계를 도입하며, 교육 환경 및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대응 인력의 능력도 보강한다.

또한, 테러방지법 시행에 따라 대테러작전부대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대테러 임무 수행 장비 및 피복을 보급하여, 테러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보강한다.

■ 실전적 교육훈련과 예비전력 강화

한미연합연습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합동훈련 정보관리체계 성능을 개선하는 등 전작권 전환대비 모의훈련 시스템 개발을 확대하고, 육군 대테러 특수훈련장, 해군 특전단 특전실내잠수훈련장, 공군 기지방어·화생방훈련장 등 대테러 및 특수전을 대비한 정보화·첨단화된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예비군의 상비군 수준의 전투력 발휘 및 훈련여건 향상을 위해 침낭, 개인천막 등 예비군 전투장구류를 보강하고, 동원훈련장 시설 현대화, 훈련 실비를 현실화 하는 등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투자를 지속할 것이다.

■ 장병 의식주 질적 개선

기존 현대화 사업에서 제외되었던 노후·협소한 병영생활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군 취사식당을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념의 위생적 취사식당으로 개선하고, GOP 지역에 가물 및 결빙시기에도 원활한 급수 공급을 위해 통합급수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급식비 단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민간조리원 채용 확대 및 처우개선을 통해 군 급식의 맛과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기능성 내의·양말 보급확대, 바디워시 신규 보급과 함께 합정근무자에 대한 내의류 추가지급, 정비병, 조리병 등 특수한 근무환경 근무자에 대한 현품보급 확대로 위생여건도 개선함으로써 장병들의 병영 생활 만족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방 의료지원체계 발전

격오지 부대 장병들의 진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격오지 부대와 의무사령부 응급환자 지원센터를 원격으로 연결하여 진료하는 원격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진료 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병원 시설 및 장비도 현대화하고, 전·평시 외상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외상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국군외상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 첨단 국방과학기술 확보 및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무기 및 신무기체계 대한 국방 R&D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핵심전력 무기체계의 국내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핵심기술 및 부품을 개발한다. 국방과 민간 R&D를 융합한 민·군 기술협력을 통해 국방전력 강화를 위한 기술확보 및 국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선진 외국에서 기술이전이나 판매를 기피하는 주요 핵심부품 및 국방SW의 국산화를 전략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자주적 국방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입대체, 매출·고용증대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여 튼튼한 방위산업 기반을 육성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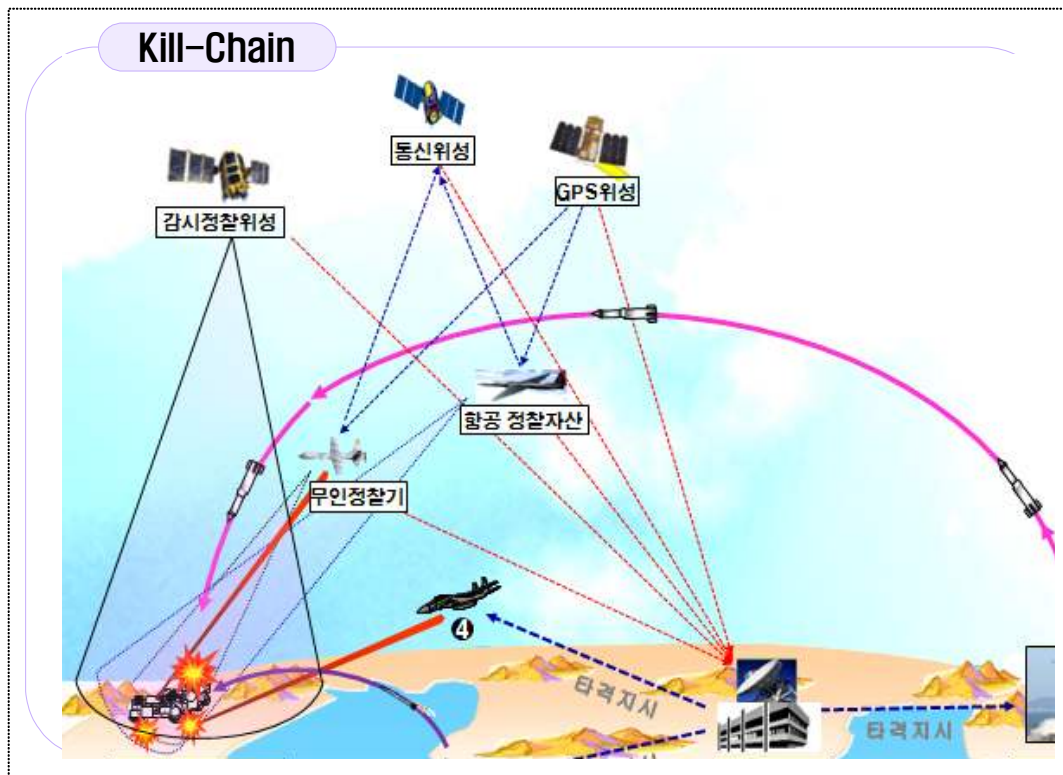
■ 국방비 지출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성과기반군수(PBL)사업 확대를 통한 군수예산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방사업의 전반적인 비용효과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사업타당성 조사 대상을 기존 방위력 개선 분야 사업에서 전력유지 분야 사업까지 확대하여 군수사업의 지출효율성을 제고한다.

시설사업 패러다임을 신축에서 유지보수 중심으로 전환하여 시설분야 투자효율성을 제고하며, 신축시에도 설계단계에서의 예산낭비를 최소화 하기 위해 건축설계에 대한 설계적정성 검토 등을 도입하여 총사업비 관리를 강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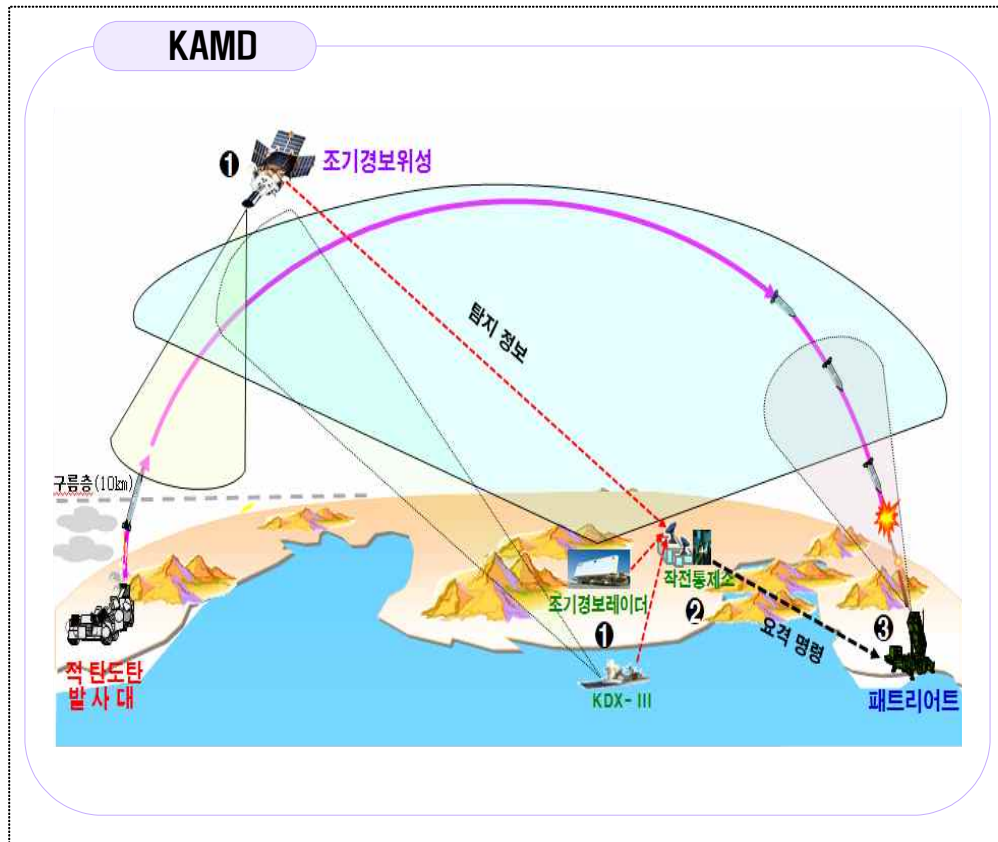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구분	'17	'21
▪ 국방비 내 방위력개선비 비중(%)	30.2	⇒ 33.0
▪ 병 봉급 인상(만원)	21.6 (병장기준)	⇒ 67.6 (병장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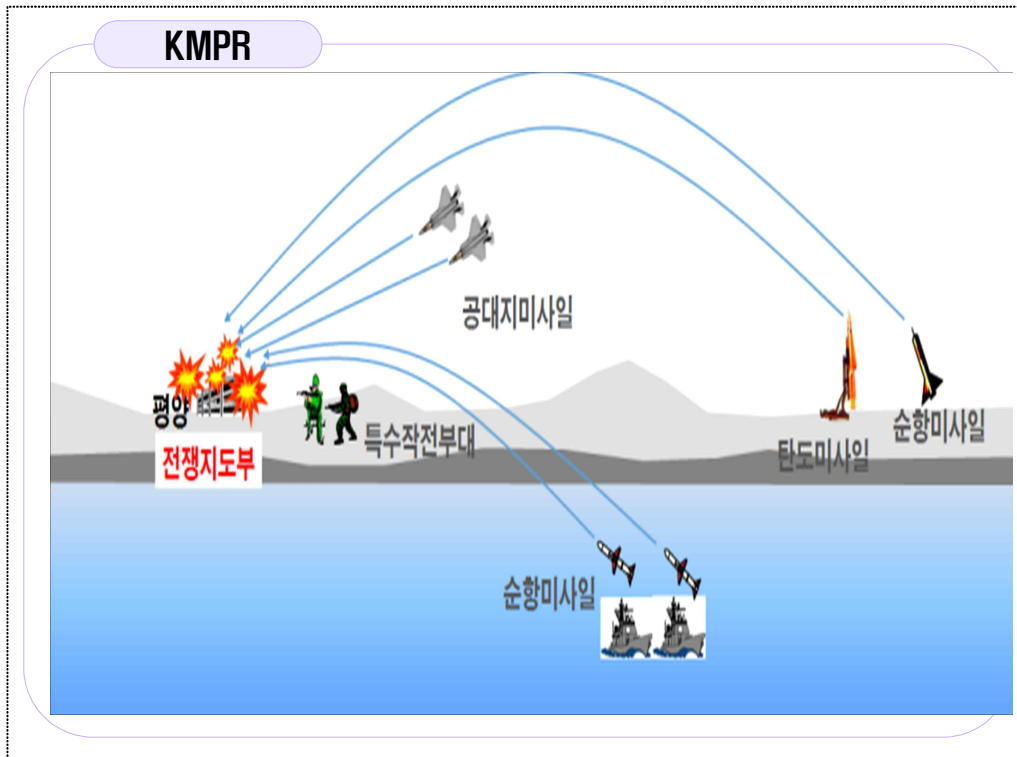
운 용 개 념 (감시 및 타격)

- ❶ 위성, 무인정찰기 등 탐지식별용 자산을 이용하여 적 핵심지역의 표적을 탐지(find)하고
- ❷ 탐지된 표적에 대해서는 표적의 정확한 위치좌표를 획득(fix)한 후
- ❸ 획득된 표적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적정무기를 선정(target)하고
- ❹ 선정된 무기체계에 해당되는 부대에 타격명령을 하달하여 해당 무기체계로 타격(engage)



운 용 개 념(요격)

- ❶ 조기경보위성,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이지스함 레이더 등에 의해 발사된 적미사일 탐지
- ❷ 탐지된 정보(발사지점, 비행경로, 탄착지점 등)는 작전통제소에서 통합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위협 분석 및 최적 요격부대를 선정하여 자동 또는 수동으로 탐지정보를 패트리엇 포대로 전달
- ❸ 요격명령을 받은 해당 패트리엇 포대는 탐지된 표적정보를 이용, 자체 레이더로 탐색, 추적하여 요격임무 수행



운 용 개 념(대량응징보복)

- ❶ 북한이 핵무기 등으로 위해를 가할 경우
- ❷ 동시·다량·정밀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전력 및 전담 특수작전부대 등을 운용
- ❸ 북 지휘부를 직접 겨냥하여 응징 보복

■ 개 념

- 주요 전투장비의 가동률 보장을 위해 업체와 장기계약을 맺어 그 수행성과(performance)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
 - * 성과기반군수지원 (PBL) : Performance based logistics
- 무기체계의 가동률 향상, 정비관련 병력·시설 감축을 목표로 美 제도 도입

■ 현 문제점

- 해외구매 및 주문제작의 형태로 조달기간 장기화
 - * 평균 조달기간(해외조달) : 상업구매(380일), FMS(231일), BOA(140일)
- 무기체계 수리부속 확보 및 정비 애로 ⇨ 장비가동률 저하, 유지비 증가

■ 추진경과

- 新정비지원개념으로 성과기반군수지원 도입 검토 : 2006~2009년
- 제도 시행기반 구축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정 등) : ~ 2010. 6월
- 시범사업 추진(공군 KT/A-1, 해군 홍상어, 육군 UAV체계) : 2010. 3월 ~
- 주요 무기체계 적용 확대(現 총 10개 사업) : 2011년 ~
 - * 공군 F-15K, KF-16엔진(운영유지) FA-50(방위력개선), K1A1전차 등

■ 개선효과

- 수리부속 조달기간 단축(평균 267일 → 79일)

구 분	수리부속 조달기간		증 감	계약업체
	PBL 前	PBL 後		
F-15K	427일	139일	△67%	美 보잉
F-16엔진	119일	25일	△79%	美 플랫&휘트니
무인정찰기	260일	36일	△86%	한국항공

- 민·군 협력에 의한 안정적인 가동률 보장 및 후속군수지원 보장
- 수리부속의 장기 미사용 방지 및 군의 재고수준유지 비용 감소

10. 외교·통일 분야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 국제사회 내 역할 확대에 따른 예산 증가

외교·통일 분야 총지출은 지난 5년간 연평균 5.0% 증가하였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기여 요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국제기구 분담금과 같은 국격 제고를 위한 지출이 계속 확대되어 온데 주로 기인한다.

아울러, 경제 영토 확대를 위한 한·미 FTA, 한·ASEAN FTA, 한·EU FTA 등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 특히, 미·중·일 주요국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우리의 외교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중남미, 아프리카 등 자원 부국과의 외교관계도 확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하였다. 2010년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정회원국 가입 및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이후,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개도국의 빈곤 감소와 자립 성장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적개발원조를 지원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실적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1년 1조 4,667억원에서 2016년(잠정) 2조 2,281억원으로 연평균 9.2%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ODA/GNI비율도 2011년 0.12%에서 2016년 0.14%로 증가하였다.

<외교·통일 분야 재정투자 추이>

	'13	'14	'15	'16	'17	연평균 증가율
* 외교·통일 분야(조원)	4.1	4.2	4.5	4.7	4.6	2.9%

* 본예산 기준

■ G20, 핵안보 정상회의 등을 통해 중심국가로 부상

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의 대폭 확대, 국제기구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함께 성장하는 '성숙한 세계국가' (Global Korea) 구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고, G20 서울 정상회의, 핵안보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함에 따라 주변국가에서 중심국가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이 현저히 제고되었고 외교의 선진화를 구축하는 토대를 성공적으로 마련하였다.

■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실질적 통일준비 강화

정부는 그간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해 노력하였다. 국제적으로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UN결의, 독자 제재 등 제재·압박 조치를 실시하는 상황이지만, 국내적 차원에서 남북 경제협력, 탈북민 지원,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통일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북한인권법 제정(2016년 3월) 및 북한인권기록센터 출범(2016년 9월) 등 북한인권 개선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탈북민 3만명 시대를 맞아 탈북민의 자립·자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대학통일교육 강화, 통일 박람회 및 통일문화주간 등 관련사업을 확대·추진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남북피해기념관 건립, 탈북민 정착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외교역량 강화

북핵문제 진전, 재외국민 안전 및 권익보호, 공공외교 등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외교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 전략동맹 등 주변국과의 전통적 협력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고,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을 위해 아세안·인도와의 관계를 주변 4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외교관계의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 국민·공공외교 역량강화 및 재외국민 안전제고

700만 재외동포, 1,500만 해외 여행객 등 우리 국민의 해외진출 확대 및 이로 인한 재외국민보호 외교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외교의 영역이 정치·경제적 분야를 넘어 문화·공공외교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외교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 및 참여 강화, 국민외교 역량 결집을 통해 통합적인 국민외교 체계를 구축하고, 21세기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는 공공외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공외교위원회에서 중장기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미·일·러·중·EU 등 주요국가에 대한 통일 공공외교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재외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2015년 설치된 영사콜센터 운영의 내실화와 해외대규모 재난발생시 자국민의 신속한 대피지원, 사건사고 영사 및 보조인력 확충 등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 서비스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테러, 자연재해에 대비해 재외공관 및 공관원의 안전 제고에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시대, 한국 ODA의 질적 도약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2016~2030)’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 기여에 적극 참여하고, 개발재원 및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SDG의 취지에 걸맞도록 개발금융 등 민간을 활용한 혁신적인 ODA를 지속 확대한다. 반세기만에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택·지원한다.

한국 ODA의 브랜드화와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여러 부처가 협업하여 시너지를 발휘하는 융합형 ODA를 중점 추진한다. 유·무상 및 무상 ODA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전략적인 ODA를 추진하여 한국 ODA의 질적 도약을 목표로 한다.

■ 한반도 평화와 안정 및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위한 남북관계 조성

정부는 「베를린 구상」에 입각하여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 및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 나가되,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있게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북핵문제 진전 및 여건 조성 시 ‘한반도 新경제지도’ 구상을 통해, 평화·공동번영의 경제공동체 형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동시에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비정치적 교류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할 것이다.

< 외교·통일 분야 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 분	'17	'18	'19	'20	'21	연평균 증가율
□ 외교·통일분야	45,660	48,054	49,062	50,043	50,044	2.32
○ 외교부문	33,305	34,962	35,275	36,260	36,321	2.19
○ 통일부문	12,355	13,092	13,787	13,783	13,723	2.66

(3) 중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대응한 외교역량 강화 추진

북핵 문제의 진전을 위해 비핵화 프로세스 재개 여건을 조성하고 한·미·중 등 3자 전략대화를 단계적으로 가동해 나가는 한편, 비핵화 진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확대와 함께 남북간 실질협력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추진을 위한 관련국간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한·미동맹과 한·중 동반자관계의 조화·발전과 함께 한·일관계의 안정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다.

한편, 외교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 및 참여강화, 국민외교 역량 결집을 통해 통합적인 국민외교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 및 우리 국정비전·외교 정책에 대한 지지와 공감 확보를 위한 전략적 공공외교를 추진하여, 우리나라를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는 한편 한국에 대한 호감과 신뢰증진으로 한국에 대한 수용성 제고에 노력할 예정이다.

■ 다자관계 협력 강화 및 지역외교 협력사업 확대

유엔 PKO(평화유지활동) 참여 등을 통해 세계평화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G20(주요 20개국)·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의 범세계

적인 이슈 대응에 기여할 것이다. IMO(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당선을 계기로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증대하는 글로벌 외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아세안·인도 등과의 외교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우리 국민 및 기업의 전략적·체계적 아프리카 진출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각 지역 국가 및 지역협의체와 실질협력관계를 계속 공고히 하여 우리의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함은 물론, 국익에 최우선을 두고 지역외교 협력사업을 확대 지원해 나갈 것이다.

■ 해외진출 확대에 따른 재외국민 보호 및 지원 강화

우리 국민의 해외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시스템을 최적화할 것이다. 사건사고 영사 및 보조인력의 확대를 통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 세계에 퍼진 재외동포 역량을 결집하고, 우리교육 및 문화를 재외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재외국민의 만족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다.

■ 기업 및 인력 진출과 연계한 상생형 ODA 집중지원

ODA분야는 2차 대전 이래 최악의 난민문제 등에 따른 국제사회 지원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우리 기업 및 인력의 해외진출 지원을 동시에 도모하는 상생형 ODA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개도국 경제 인프라 확충에 기여함과 동시에 우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과 연계되는 대개도국 차관 및 우리 우수기술 및 시스템 보급 사업을 중점 지원하며, 청년 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개발협력 코디네이터 사업 등을 추진하여 개도국의 사회·문화 발전을 돕고 우리나라 개발협력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체계적인 경력 사다리를 마련할 것이다.

■ 우리 사회의 실질적 통일준비 지속 추진

2018년에는 통일국민협약 체결, 탈북민 정착지원,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해결 노력, 통일교육 내실화 등 실질적 통일준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여·야·정, 시민사회 합의를 기반으로 ‘통일국민협약’ 체결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통일·대북 정책의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집중하여 유전자검사·영상편지 등 국내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추진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사회의 정상적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향후 통일을 함께 준비하는 동반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정적인 탈북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지원 수준을 향상하고,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자립·자활 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탈북민의 우리 사회 통합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17년		'21년
▪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만족도(%)	83.0	⇒	85.0
▪ 對개도국 차관(억원)	9,545	⇒	10,181

11. 공공질서·안전 분야

(1) 그동안의 재정투자

국가의 기본적 책무인 사법, 치안, 재난관리 관련 투자로 2012년 14.5조원에서 2016년 17.5조원으로 연평균 4.8% 증가하였다.

특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도입, 112 범죄신고시스템 고도화 등 범죄 피해에 대한 보호 강화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조력 강화 등 법률 복지분야에 중점 투자해 오고 있으며, 재해·재난 예방투자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오고 있다.

< 공공질서·안전 분야 재정투자 추이 >

	'12	'13	'14	'15	'16	연평균 증가율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조원)	14.5	15.0	15.8	16.9	17.5	4.8%

* 본예산 기준(추경 포함시 '13년 15.2조원)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 조력 강화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무료 변론 등 법률구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법률홈닥터와 무변촌에 대한 마을변호사를 운영하는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감독 강화

보호관찰 대상자 중 성폭력, 약물, 정신질환 등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지도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심리상담치료 프로그램 확대,

정신질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특정범죄자 위치 추적 전자감독시스템 기능 개선 등 다양한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여왔다.

■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강화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여 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범죄 피해자에게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긴급생계비, 간병비 등의 다양한 의료·경제 지원 서비스(직접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일센터·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피해자 지원시설을 통해 심리치유, 상담, 법률조력, 법정동행 등의 서비스를 지원해왔다.

또한, 진술조력인·피해자국선변호사 등의 법률조력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의 수사·재판 참여 지원 및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있으며, 보복범죄 우려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이전비·위치추적장치를 지원하는 신변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피해자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전자소송서비스 확대

2010년 4월 특허사건을 시작으로, 2011년 5월 민사사건, 2013년 1월 가사·행정사건, 2014년 4월 회생·파산사건, 2015년 3월 집행·비송사건으로 전자소송이 단계으로 확대되어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전자적 제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전자소송서비스를 통해 소송수행의 시·공간적 편의 향상, 소송비용 절감, 소송절차의 신속성, 편의성,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기초 치안활동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112신고 대응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신속히 출동함으로써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예방진단팀 운영을 통해 지역별 범죄·불안요인을 심층 분석하여 취약환경 개선 및 맞춤형 대책 마련하는 등 국민들의 불안요인을 해결하는 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학대·가정폭력 등 근절을 위해 학대예방 경찰관을 발족하는 등 업무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예방 - 수사 - 사후 보호 지원’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중이다.

■ 재해·재난 예방사업 투자 확충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국지성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9년 이후 재해 위험지역 및 소하천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재해예방사업에 집중 투자해오고 있다. 그 결과 재난피해 규모와 복구비 지출수준이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 재난피해액 및 복구비 추이 >

구 분(억원)	'05~'09 평균	'10~'16 평균	비 고
예방투자	2,577억원	6,566억원	154.8% 증액
피 해 액	7,214억원	4,226억원	41.43% 감소
복 구 비	1조 3,421억원	8,488억원	36.8% 절감

< 재해예방 인프라구축 재정투자 추이 >

구 분(억원)	'10	'11	'12	'13	'14	'15	'16	'17
재해위험지역 정비	3,083	3,075	3,688	4,293	3,523	4,640	3,692	3,586
소하천정비	2,072	2,072	2,269	2,585	2,093	2,645	2,115	2,115
우수저류시설	384	388	557	690	655	881	718	710

■ 해양재난 대응역량 강화

해양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내 현장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장비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2017년에 대형헬기 1대를 배치하고, 2019년까지 중형헬기 2대를 배치하는 등 항공기 중심의 초기 대응 역량을 제고하였다. 주변국의 해양주권 침해에의 대응, 해양사고 예방, 수색구조 등을 위해 해경의 함정 확충 및 노후 함정 대체도 지속 추진 중이다. 해경의 중·대형 함정은 2007년 28척에서, 2020년까지 78척으로 증강운용될 예정이다. 64개 주요지역을 대상으로 구형연안구조정을 신형연안구조정으로 교체하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최초 사고상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중계도 위성조난 시스템을 구축하여 함정-지휘본부 간 실시간 의사소통과 정보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확대

경제력 등으로 인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복지 제도를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구속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단계까지 동일한 변호인에 의해 조력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인제도를 개선하고, 법률구조의 수혜자 폭을 확대하는 등 법률복지서비스의 충실화를 도모해나갈 것이다. 법원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한 서민들에게 소송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실패했다하더라도 재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할 것이다.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법률상담터, 무변촌에 마을변호사를 운영하는 마을변호사 사업 등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복지서비스도 지속 확충해나갈 것이다.

■ 범죄피해자 보호 확대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긴급생계비, 심리치료비 등 직접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일센터 등 다양한 피해자 지원시설을 통해 전국적인 피해자 심리치료·상담·법률지원 서비스를 확충하고, 진술조력인·피해자국선 변호사 서비스 확충을 통해 범죄발생 초기부터 수사·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교정시설 수용 환경 개선 및 출소후 취업지원 확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수용자 인권을 보장하고, “수용” 중심에서 “사회복귀 지원”으로 교정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다.

보이스피싱 등 국민생활침해범죄 단속 강화 등으로 인해 교정시설 수용자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과밀수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도소, 소년원의 과밀수용 해소 등 교정시설의 수용 환경을 지속 개선하여 기본적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출소후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정시설내 직업훈련과 교도작업도 충실화해나갈 것이다. 교도소별로 취업연계형 직업훈련·교도작업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시행실적을 기관장평가 등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출소후 취·창업지원을 담당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과 교정당국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사회복귀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해나갈 것이다.

■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관리 강화

‘묻지마 범죄’ 발생 등으로 높아진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신 질환이 있는 범죄경력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소년원에 정신 보건 임상심리사를 배치하고, 대전소년원을 의료소년원으로 전문화하여 정신병력 소년원생들의 치유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경제력이 없는 심리치료명령대상자에게는 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에 의한 재범을 억제하여, 불특정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해나갈 것이다.

■ 국민의 사법 접근성 강화

법원은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제도·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전자소송 확대, 판결문 공개 등 대국민 사법서비스를 꾸준히 확대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우선지원창구를 설치하고 전담 민원상담위원을 배치하는 등 사회적 약자가 손쉽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검찰청내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외부로 지속 이전하여 공단의 형사변호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자유로이 법률구조에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 공동체 중심의 예방치안 활성화

범죄예방진단팀 전국 확대, 범죄예측시스템 구축, 범죄예방협의체 상설화 등 범죄예방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지역사회와 범죄불안 요인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주민이 원하는 시간·장소를 반영한 '탄력순찰'을 도입하고 파출소 증설을 통한 출동시간 단축 등 주민밀착형 치안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험지역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안심구역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치안정책 강화

여성·아동·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를 위해 △ 젠더폭력 근절 △ 학대·실종 대응 강화 △ 청소년보호 등 '3대 치안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성·가정폭력 근절 정책을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스토킹·데이트폭력·몰카성범죄 등 신종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아동·장애인·노인 대상 학대 피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학교폭력 및 위기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재해예방인프라 확충

한편, 상습침수·붕괴위험지역 등 시급히 보수·보강이 필요한 재난취약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재해위험지구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재해예방인프라가 계속적으로 보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육상재난 현장 대응력 강화

국가 차원의 대형 특수재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119 특수구조대,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다. 특히, 전국의 어떤 육상재난에도 골든타임 내 신속한 현장대응이 가능하도록 4개의 중앙119 특수구조대의 장비·시설 투자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에 필수적인 소방공무원 확충과 교육훈련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소방학교 장비·시설 투자도 확대해나갈 것이다.

■ 해양 대응능력 강화

해양에서의 안전사고 대응체계를 함정중심의 장비증강에서 효율적인 운용체계 마련으로 전환해나갈 것이다.

중국어선의 불법어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간 증강된 함정에 대해 정비지원을 강화하여 운용효율성을 제고하고, 해수부 등 유관기관 함정과의 협조체계를 통해 단속효과를 높힐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공공질서·안전 분야 투자계획 >

(단위 : 십억원, %)

구 분	'17	'18	'19	'20	'21	연평균 증가율
□ 공공질서·안전 분야	18,140	18,897	19,010	19,219	19,527	1.9
○ 법원및헌재	1,906	1,959	1,942	1,972	2,019	1.5
○ 법무및검찰	3,421	3,640	3,633	3,696	3,789	2.6
○ 경찰	10,479	10,797	10,815	10,983	11,227	1.7
○ 해경	1,207	1,270	1,300	1,319	1,359	3.0
○ 재난관리	1,127	1,231	1,320	1,251	1,133	0.1

(3) 중점 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 교정시설 수용자 취업지원 확대

수형자에게 실시하는 직업훈련, 교도작업은 출소 후 취업과 생계유지로 직결되는 실질적 통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제까지의 수용관리 중심의 교정행정에서는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못해왔다.

앞으로 출소 후 사회재정착을 위한 취업연계형 직업훈련, 교도작업을 시행하여 안정적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도모할 계획이다. 단순 노동형 교도작업을 출소 후 해당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취업연계형 교도작업으로 단계적 전환하고, 직업훈련과 연계한 교도작업 시행으로 출소후 취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 차상위계층까지 무료소송구조 지원 확대

차상위 계층은 그간 국가의 무료 소송구조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와 달리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왔다.

법률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 취약계층 권익보호를 위해 대한법률구조 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무료 소송구조를 2018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실시한다.

무료소송 범위의 확대는 차상위계층의 권익보호 및 생활안정 도모, 중산층 도약의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제도 전면 시행

기존에는 변호인의 조력이 가장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속 상태인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 및 공판단계까지 피의자 접견, 가족상담, 유리한 증거 수집, 수사단계 의견서 제출, 경찰·검찰 피의자신문 참여 등 무료 변호활동을 계속하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하반기경 ‘올해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우수한 논스톱 국선 변호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국선변호인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회적 약자의 변호인 조력권이 더욱 강화되고, 열정을 가진 청년변호인에게 보다 많은 참여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 개인회생·파산 지원 강화

경제적 파탄에 놓인 개인회생·파산신청자들에게 서울회생법원 내 설치된 ‘뉴스타트 상담센터’에서 파산관재인, 회생위원 등이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소송비용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변호사보수 및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등을 지원하여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신청서 간이화 및 유관기관 정보 연계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 해상 구조장비의 최적 운용성능 보장

연안 및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신형 연안구조정과 수상오토바이 등을 배치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신속한 출동대비태세 유지와 구조요원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신형연안구조정에 맞는 계류시설 설치, 민간을 활용한 수상오토바이 맞춤형 정비 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08년~2013년간 중·대형 경비함정을 집중 도입하여왔음에도 정비소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함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된 점을 감안, 함정계획정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적의 정비체계를 유지하게 되면 신규장비를 추가로 배치하는 이상의 운용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의 통합적 해상교통관제 운영체계 구축

현재, 우리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18개의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이 운용중에 있으며, 2017년에 2개소가 추가로

운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 시('14.4.16) 제주 VTS와 진도연안 VTS간 정보전달 체계 미흡이 큰 원인으로 지적된 바와 같이 여전히 관제 공백이 존재하고 각 시스템간 연계도 없어 대형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2018년에 군산·목포 연안VTS 구축에 착수하여 우리 해역에서의 관제 공백을 해소하고, 인천에서 제주를 거쳐 동해까지 운항하는 선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해상교통관제 통합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소방공무원 역량 강화

참혹한 사고 현장에 다수 노출되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PTSD 등 정신 건강 관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2015년부터 운영중인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소방관들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외에 심신안정 프로그램 개발, 치료비 지원 등에 대한 지원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가적인 재난 대응을 위한 중앙119 특수구조대, 화학재난합동 방재센터를 지속 지원하고, 전국 소방공무원들의 역량 표준화를 위해 각 지방소방학교에서 활용할 표준 교재를 마련할 계획이다.

■ 생활안전 강화

국민 참여를 통해 실생활 속에서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안전신문고'의 편의성 제고와 외국어 지원 기능 탑재 등 기능 확대를 지원한다.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운행 승강기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간 불법·부당한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으로 인한 승강기 사고가 다수 발생한 바, 유지관리 계약의 전자입찰시스템을 도입하여 승강기 안전 문제의 취약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관심이 높아진 점을 감안, 각종 안전교육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대상자별 맞춤형 안전교육이 가능하도록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홈페이지에 지속 공개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가이드북 제작, 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교육 등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17		'21
▪ 법률구조 수혜자 수(명)	196,865	⇒	234,764
▪ 직업훈련 참여인원(명)	6,696	⇒	7,128
▪ 전자감독대상자 1인당 심리치료 집행횟수	2.7	⇒	3.1
▪ 보호관찰대상자 재범율(%)	7.6	⇒	7.6
▪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중 가족접견 비율	13.5	⇒	27.5
▪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율(%)	29.8	⇒	43.8
▪ 외국인마을번호사 지원 수혜자 수(명)	950	⇒	6,700
▪ 해양사고 인명구조율(%)	98.0	⇒	98.4

■ 추진배경

- 수용자의 출소 후 안정적 사회 재정착을 위하여 취업연계형 직업훈련, 교도작업 운영을 통한 취업능력역량 강화 필요

■ 주요내용

- 취업유망 직업훈련 확대와 맞춤형 훈련종목 체제 정비를 통한 취·창업 지원 프로세스 구축
 - 산업현장 수요 고려 직업훈련('지게차운전', '농기계정비') 확대
- 직업훈련과 연계한 교도작업 운영으로 실무중심의 숙련공 양성과 실질적인 취업경쟁력 향상
 - 자동차정비 직업훈련 수료자 → 경정비센터 직영작업장 취업
- 단순 노동형 교도작업을 출소 후 해당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취업 연계형 교도작업으로 단계적 전환('18년 2개 작업장 시범 운영)

■ 기대효과

- 사회적 취약계층인 수형자의 출소 후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과 재범방지 및 사회안전망 구축
- 취업지원 사업 극대화 등 사회복귀 강화 정책 실현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및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 추진배경

- 경제적 빈곤으로 소송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무료 소송구조 지원 필요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국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

■ 주요내용

-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무료 소송구조 대상자를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지원
 -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비용 무료지원('18년 예산 29억원)

<2017년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금액(원/월)	826,466	1,407,225	1,820,458	2,233,690	2,646,923

■ 기대효과

- 차상위계층 대상자에 대한 무료 소송구조 지원으로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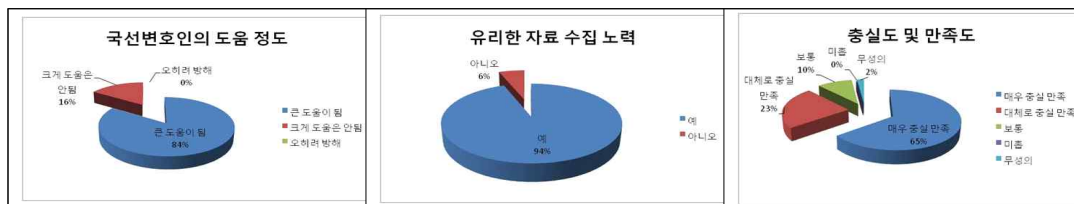
■ 추진배경

- 기존에는 변호인의 조력이 가장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속 상태인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
-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공백 발생으로 인하여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 ‘약촌오거리 살인 재심사건’과 같은 사례 발생
 - *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은 영화 ‘재심’의 소재로도 사용

■ 주요내용

-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 및 공판단계까지 변호활동을 계속
 - 영장발부 후 기소 전 피의자 접견, 가족상담, 유리한 증거 수집, 수사단계 의견서 제출, 경찰·검찰 피의자신문 참여

<5개법원 시범실시(2016. 10. ~ 2017. 4.) 결과>



■ 기대효과

-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인 변호인조력권 보장
- 열정을 가진 청년변호인에게 참여기회 부여

■ 추진배경

- 경제적 궁지에 몰린 개인회생·파산신청자의 경제생활복귀를 지원할 대책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서울회생법원내 “뉴스타드 상담센터” 운영
 - * 회생법원을 방문한 채무자들에게 개인회생·파산절차에 대한 무료상담 실시
- 개인회생·파산신청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확대
 - * 소송구조예산 ‘17년 46억 원 → ’18년 60억 원
- 개인파산사건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지원
 - * 파산관재인 보수를 납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파산관재인 보수 지원
- 개인회생·파산신청서 간이화, 유관기관 정보 연계시스템 구축(첨부서류 간략화)을 위한 사전 계획(ISP) 수립

■ 기대효과

- 개인회생·파산신청자에 대한 무료상담, 소송비용 및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의 복귀 지원
- 복잡한 회생·파산신청 절차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19~’20년 예정) 신청자의 비용·시간 절감 도모

■ 재해·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예방투자 강화

- 안전위험 시설에 대한 상시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 공공시설 등 재난 취약시설에 보수·보강 지속 추진
- 지방하천, 소하천, 우수저류시설,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유사사업간 연계를 강화하여 예방효과 제고와 투자 효율화를 도모
- 사회·경제적 파장이 큰 지진, 신종 감염병, 가축전염병, 대형화재, 싱크홀·지반침하 등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및 투자 확대

■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생활 밀착형 안전 인프라 확충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 특화된 안전관리 대책 지원을 강화하여 안전 사각지대 해소 추진
- 교통사고, 산업재해, 생활화학제품 등 생활 밀착형 안전관리 사업 지원 강화

■ 국민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복지시설의 시설관리자 안전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 국민참여형 안전점검 활동 및 현장중심의 재난대응 훈련 강화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확대

- 안전신문고 등 상시적 안전점검으로 위험도가 높은 재난취약 시설 보수·보강에 우선 투자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

■ 안전산업 육성과 국가·지자체·민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

- 안전 R&D, 소방안전교부세 및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하여 지자체의 필수 안전 인프라 투자를 유도해 나갈 계획

■ 추진배경

- 비어선 해양사고 중 인명피해 대부분이 연안사고에서 발생*하는 등 , 연안에서의 여가활동 증가에 따른 대비체계 구축 필요

* 최근 3년('13~'15년) 평균 비어선 인명피해 215명 중, 연안사고 사망 130명(60%)

- 국민생활 안전과, 해양주권 보호간 균형있는 운영체계 마련

< 해양경찰업무의 균형있는 운영 >

관심분야	광역해역(EEZ) / 해양주권 수호	연안해역 / 해양안전관리 · 수색구조
주요업무	해양영토 수호, 불법어선 단속	해양레저 및 연안해역 안전관리

■ 주요내용

- 약조건에서도 인명구조활동이 가능한 구조장비를 본격 도입하고, 최상의 유지보수 지원체계를 마련

- 안전센터(95개) 중 이용객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신형연안구조정을 우선 도입(64개)하고, 관련 계류시설을 순차적으로 설치

<연차별 확보 계획(척)>

구 분	목표	'15년	향후 소요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비 고
연안구조정	64	8	56	6	12	12	12	14	

- 안전센터에서 운용중인 연안구조장비를 민간시설을 활용하여 위탁관리하는 등으로 최상의 운용상태를 유지

* 연안인명구조장비 : 고속제트보트 78대, 수상오토바이 127대

■ 기대효과

- 구조장비 운용요원의 안전한 활동과 최상의 장비 운용조건을 보장하여 연안에서의 인명사고 구조율을 제고

* 사고지점 5마일 대응체계: (기존) 12노트, 25분 소요 → (변경) 35노트, 8분 소요

■ 추진배경

- '14년 세월호 사태로 해상교통관제 공백 및 선박 운항정보 관리 부실 문제 보완 필요성 부각
- 서해·남부권 연안지역의 해상교통관제 공백을 우선 보완하고, 우리나라 전역의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통합체계 구축을 추진
- * Vessel Traffic Services: 해상교통의 안전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탐지, 통신 장비 등을 활용하여 선박에 안전정보를 제공

■ 주요내용

- 항만 및 연안해역 내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해상교통관제센터를 구축·운영*
- * 항만 VTS(15개), 연안VTS(3개소, '17년 2개소 추가)에서 레이더, 운영시스템, 통신장비 등의 관제시설을 활용하여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제고
- '18년 군산·목포 연안VTS 확충을 위한 실시설계(10억원) 및 전해역의 VTS간 통합을 위한 기본조사비(0.4억원) 실시
- * 군산연안 VTS센터를 기운영중인 군산항 VTS센터에 통합, 확충될 목포연안 VTS센터에 목포항센터(노후), 진도연안센터(임차시설)를 통합

■ 기대효과

- 우리 연안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보장하고, 위급상황을 조기에 파악하여 신속한 초동대처를 유도

■ 추진배경

- 우리 해역에서의 주권수호와 해양재난(오염 및 인명사고)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

■ 주요내용

- 우리해역의 영공에서 주권수호를 위한 초계활동 및 위급시 신속한 초동대처를 위한 항공기 확충 및 노후대체
- 독도·울릉해역 해양영토 주권 수호, 우리 해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어로 활동 근절을 위한 경비함정 확충 및 노후대체
- 해양재난에서의 신속하고 원활한 수색·경비·오염방제 임무수행을 위한 함정 확충 및 노후대체

구 분	계	항공기	함 정	방제정	형기정 등*	유류바지
기 확보(대·척)	340	23	184	20	93	20
'18년 반영(억원) (장비 수)	1,636 (34)	210 (2)	1,044 (10)	155 (6)	291 (22)	72 (6)
노후대체(억원) (장비수)	846 (26)	42 (1)	569 (6)	68 (6)	231 (19)	72 (6)

* 형기정, 방탄정, 예인정, 소방정, 순찰정, 훈련함, 공기부양정, 잠수지원정

■ 기대효과

-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의 해양 영토분쟁에 대응, 해양오염 및 외국어선의 불법어로로부터 우리 어족자원 보호

12. 일반·지방행정 분야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정부는 그동안 지방교부세 지원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였으며, 국정성과 창출 및 공유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여 일반·지방행정분야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9% 증가하였다.

< 일반·지방행정 분야 재정투자 추이 >

	'12	'13	'14	'15	'16	연평균 증가율
· 일반·지방행정분야(조원)	55.1	55.8	57.2	58.0	59.5	1.9%

2011년도 및 2012년도에는 유상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전액 국비로 지원함으로써 주택거래 활성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완화시켰다.

2013년에는 「중앙-지방간 기능·재원 조정방안」을 통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6%→11%)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 과세화하는 등 지방재정을 확충하였다. 2014년에는 담뱃값 인상을 통해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등 추가적인 재원조치를 실시하였다.

2015년에는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에 사회복지 수요 반영 비율을 상향 조정(보통교부세 20%→23%, 부동산교부세 25%→35%) 하였으며, 특·광역시 본청이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을 통해 복지비 부담이 많은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켰다.

2016년에는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재정력 비중을 확대(20→30%)하고 교부세 불교부단체 우선배분 특례를 폐지하는 등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였다. 보통교부세의 사회복지 수요 반영 비율을 추가 확대(23%→

26%)하였으며,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지속 정비(2013년 13%→2016년 15.5%)하여 지방재원을 확충하였다. 또한, 「지방재정365」를 5월부터 정식 서비스 개시하여 지방재정정보를 통합하여 공개하였다.

열린혁신 사업은 국민소통 및 참여확대 등을 통해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따뜻한 서비스 정부,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정부 구현을 목표로 한다. 이에 행정서비스 통합제공, 행복출산·안심상속 등 맞춤형서비스 활성화, 행정·공공기관의 정보공유 확대, 국가중점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지원 등을 추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편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전자정부 사업은 통합민원서비스 등 다수 부처가 연계·협업하는 과제와 안전·복지 분야 등 국정 현안과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성과로는 온라인 민원 발급과 통합민원서비스, 민원인의 구비서류 감축 등 국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경제적 효과 또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워크센터 이용기관을 확대하고 인식을 개선하여 센터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범정부 영상회의 활성화로 정부기관간 소통·협업을 강화하였고, 업무 파일, 메시지를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공무원 전용 모바일 메신저 ‘바로톡’을 개발·보급하고 전자문서 열람·결제 기능을 확대하여 모바일 행정환경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구현하였다.

또한, 한시적으로 구축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정보시스템 정비를 추진, 해당시스템 폐기·통폐합으로 정보화예산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공공 분야의 정보자원 현황을 등록하여 기관간 공동활용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지방자치분권실에서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여 624개 읍·면·동에 656개 맞춤형 복지팀을 구성하였으며, 2013~2016년 동안 복지담당

공무원 7,520명, 소방인력 4,413명을 확충하는 등 주민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하였다.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접경지역과 도서지역 등 지역특성과 연계한 개발을 추진하여 평화누리길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여수 금오도 비렁길, 통영 연대도 출렁다리 등 지역특화 관광자원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교동도·대성동 프로젝트와 같이 주민에 의한 사업 발굴, 전문가그룹의 자문, 행자부·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 등 기존 관 주도의 지역개발에서 탈피하여 지역·주민 중심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개발·추진하였다.

또한 자생력 있는 마을기업 육성을 추진하여 마을기업 수는 2012년 787개에서 2016년 1,446개로 증가하였고, 고용인원도 동기간 6,533명에서 16,101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희망마을사업을 통해 112개의 마을을 조성하고 210억원을 지원하였으며(2010~2015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는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지역사회와 국민 통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사회통합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국민통합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였으며, 「부마민주항쟁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주4·3사건특별법」 등 제·개정을 통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또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 자원봉사 참여자는 2013년 264만명에서 2016년 459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정부청사에서는 입주부처 대상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정기적 운영지원 과장 회의 개최로 입주부처 공무원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근무환경 개선 및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각종 문화행사를 통해 휴게시간 및 퇴근이후 스트레스 해소의 공간을 마련하는 등 입주공무원을 위한 다양한 편의 증진을 추진하였다.

국가기록원에서는 중·장기 계획에 따른 주요 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및 정리, 범국가적 전자기록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확산

및 시의성·역사적 가치 높은 기록콘텐츠 제공으로 기록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2007년 생산된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포함)의 표준전자문서 확립, 온나라시스템(과정중심) 생산 전자기록물의 차질없는 이관 추진 및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 등 종합적인 기록물 보존·복원 추진 등을 추진하였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는 국민이 신뢰하고 변화를 선도하는 지방핵심인재 양성을 목표로 공직가치 확립과 국정철학의 확산을 위해 새정부 국정현안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자치 미래비전 실현을 위해 현장과 사례중심의 교육, 글로벌 역량 교육 등을 실시하고 유관기관 협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행정혁신, 전자정부, 지방거버넌스 등 한국의 발전경험을 폭넓게 전파하기 위해, 기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한정되었던 연수대상국을 팔레스타인 과정 신설을 통해 중동지역까지 확대하는 등 행정한류 확산에 치중하였다. 또한,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영문홈페이지, SNS, e-Newsletter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 사후관리를 강화·인적 네트워킹을 활성화 하였다.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 시민주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는 뒷받침하는 열린혁신 추진

앞으로 정부는 시민주도의 민·관파트너십, 데이터공유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을 주요 전략으로 추진하는 ‘열린혁신’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를 구현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주민,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열린혁신’을 추진한다. 시민의 아이디어와 직접

문제해결방안을 함께 추진하는 ‘국민참여형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현안을 토의하고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혁신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혁신 아이디어가 공유되고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광화문 1번가」 상설운영을 통해 국민의견의 지속수렴 및 공직사회와 각종 정부사업에 다양한 국민 의견의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데이터개방·공유, 데이터기반 스마트행정을 실현하는 ‘정부혁신’을 추진한다. 정부가 보유한 고품질의 데이터를 발굴하고 민간에 개방하며, 공공-민간데이터간 융합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중점데이터 등을 집중적으로 개방하고 우수한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하여 민간의 창업을 촉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것이다. 데이터기반 지능형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부처·지자체별로 파편화된 데이터를 표준화·연계·융합하는 범정부 통합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정책시뮬레이션을 통해 사회현안 예측·대응역량을 강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운영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며 시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정책 및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 지능형 정부 구현을 통한 행정혁신 기반 강화

기존의 온-오프라인 전자정부서비스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과 서비스를 혁신하는 지능형 전자정부로 구현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개인의 주변상황과 서비스 이력을 추적·관리하여 지능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인공지능이 업무 프로세스를 스스로 진단·개선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정책수단과 시기를 도출하는 등 행정혁신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새정부 국정목표를 달성하고 핵심정책인 100대 국정과제의 실행력을 확보한다. 2019년부터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서비스로 열린 혁신정부를 구현하고 국민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서비스를 실현할 계획이다. 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 기반 조성, 민·관 공유서비스 관리시스템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전자정부 거버넌스 정립

그간 기관·분야별 데이터의 중복 수집에 따른 불일치와 국민 불편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국가적으로 중요한 데이터를 국가마스터데이터로 지정하고 범정부 관리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범정부적 성과관리체계도 정립된다. 지금까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단계에 제한적으로 성과분석이 수행되었으나, 2018년부터는 정보시스템 기획, 사업추진(계획수립→발주→구축→운영), 점검·환류 등 전 단계로 성과관리 영역이 확장되어 정보시스템의 성과가 차년도 예산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한편, 국제기구·선진국·개도국을 망라한 전자정부 교류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Digital-5 장관회의를 정례화하고 권위 있는 국제회의체로 발전시키는 등 전자정부의 국제적 질서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안심하고 이용하는 사이버 환경 구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인공지능 기반으로 최신 보안위협을 스스로 학습하여 체계적으로 대응·방어할 수 있는 지능형 사이버 관제체계를 구축하고,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이 국가적 손실로 이어짐에 따라 지하철, 정수장 등 국가 주요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안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5만 이상 보유한 민간·

기업 등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의무 시행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민간 협업을 통해 기업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율규제 제도를 확산한다. 개인정보 제공내역 통지제를 실질화하고 자신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권리 행사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개인정보 주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 혁신 등 시민사회 성장 지원

비영리민간단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공익지원사업 혁신을 추진한다. 2017년도에는 전문가·시민사회 의견수렴을 거쳐 공익사업선정 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2018년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발전단계를 고려한 지원 프로그램(교육·컨설팅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민간화, 자원봉사 영역 확대, 지역 자원봉사 인프라 개선 등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1365 포털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수요-공급 매칭에 활용하고 하나의 ID로 부처별 자원봉사시스템(복지부 VMS, 여가부 Dovol 등)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 실적 DB를 구축한다.

■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접경지역 등 지역발전사업 추진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남북분단 및 도서의 지리적 여건 등 소외·낙후 지역 해소를 위한 국가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기반 조성에 주력하였다. 꾸준한 예산투자로 2010년 이후 특수상황지역(접경, 도서)의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있고, 2016년 특수상황 지역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사업만족도가 83.8%로 2015년에 비해 0.5%p(2015년 83.3%) 상승하였다.

■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해결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헬기 사격과 최초 발포 명령자 등 남은 의혹을 해결하고(국방부 소관), 제주4.3사건 해결을 위해 희생자 추가신고 및 암매장 유해발굴과 신원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미해결 과거사 전반에 대한 포괄적 진실규명을 위해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진실·화해 위원회 활동을 재개하는 한편, 위령·추모사업과 유족지원 등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과거사통합재단’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 지역발전을 이끌어 갈 지방핵심인재 양성

바람직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공직가치 교육, 자치분권과 국가균형 발전 등 새 정부 국정철학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주요 핵심과제를 교육 과정으로 확대·신설하여 국정과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현안업무 해결능력을 배양하고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시도 교육원 및 교육훈련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현정부 국정과제(99번)에 따라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차원에서 개도국 공무원 교육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외국공무원 교육 20주년 기념 홈커밍 워크숍(2019년)을 개최할 예정이다.

< 일반·지방행정 분야 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 분	'17	'18	'19	'20	'21	연평균 증가율
□ 일반·지방행정 분야	633,379	696,464	742,430	779,452	813,452	6.5
○ 지방행정재정지원	415,389	467,426	511,032	537,322	565,748	8.0
○ 입법 및 선거관리	11,658	10,409	10,134	14,160	12,052	0.8
○ 국정운영	5,331	5,672	5,776	5,920	5,961	2.8
○ 재정·금융	171,787	183,561	184,646	188,840	195,350	3.3
○ 정부자원관리	8,602	7,809	8,531	9,384	9,725	3.1
○ 일반행정	20,611	21,587	22,311	23,827	24,616	4.5

(3) 중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지원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지방교부세 등 재정자립에 악영향을 미치는 의존재원을 줄이고, 국세-지방세 구조개선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으로 8:2 수준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개선할 예정이다. 지자체의 실질적 재정자주권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지방예산편성·집행지침, 지방채 발행·승인, 투·융자 심사제도 등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중앙정부의 사전규제를 사후평가와 컨설팅 위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15% 수준으로 관리하고, 지방세·세외 수입 체납징수율을 제고하며, 예산낭비사업 근절을 위한 예산낭비신고 센터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이 공공 및 민간부문의 지역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도록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을 달성할 것이다.

■ 민간활용도가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 활성화 및 혁신창업 지원

지능형·융복합형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대폭 개방하고, 데이터 활용 창업기업 지원 및 데이터 가공·분석 기업 집중 육성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기관별로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형 중앙관리시스템으로 전환 및 데이터의 품질, 표준화 등의 기준을 확립하여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결정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주민중심의 읍면동 서비스혁신(혁신 읍면동) 추진

“주민이 주인이 되는 건강한 마을커뮤니티 조성”을 목표로 행정과 공동체를 포괄한 종합적인 읍면동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2017년 하반기까지 주민중심의 행정복지서비스 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마을협의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2018년까지 마련하여 추진한다.

또한 읍면동 청사를 창의적 공간혁신을 통해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개선하여 읍면동을 주민자치의 실현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4) 지표로 본 5년후 미래상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구분	'17		'21
▪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48	⇒	112개 분야
▪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공무원 공채 (5,6,7급) 인원 확대(명)	6,023	⇒	9,580

제 5 부

사람 중심의 경제구현을 위한 재정혁신

제5부 사람 중심의 경제구현을 위한 재정혁신

1. 기본방향

■ 재정혁신은 재원 확보를 뛰어넘는 「정책 혁신」

저성장·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 정부는 재정혁신을 단순히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차원을 뛰어넘는 「정책 혁신」을 추구한다. 사람중심의 지속경제 구현을 위해 공정경제 기반위에 일자리 중심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혁신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 지출 구조조정, 세제개혁, 재정민주화·분권을 중점 추진

정부는 재정혁신을 위해 강도 높은 양적·질적 지출 구조조정, 세제 개혁, 재정민주화와 분권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2018년도 예산안 편성시 당초 계획(9.4조원)보다 2.1조원 많은 11.5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반영하였으며, 향후 5년간 6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일자리 확충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 일자리 중심의 조세 지원제도 개편,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강화, 대기업 과세확대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5년간 23.6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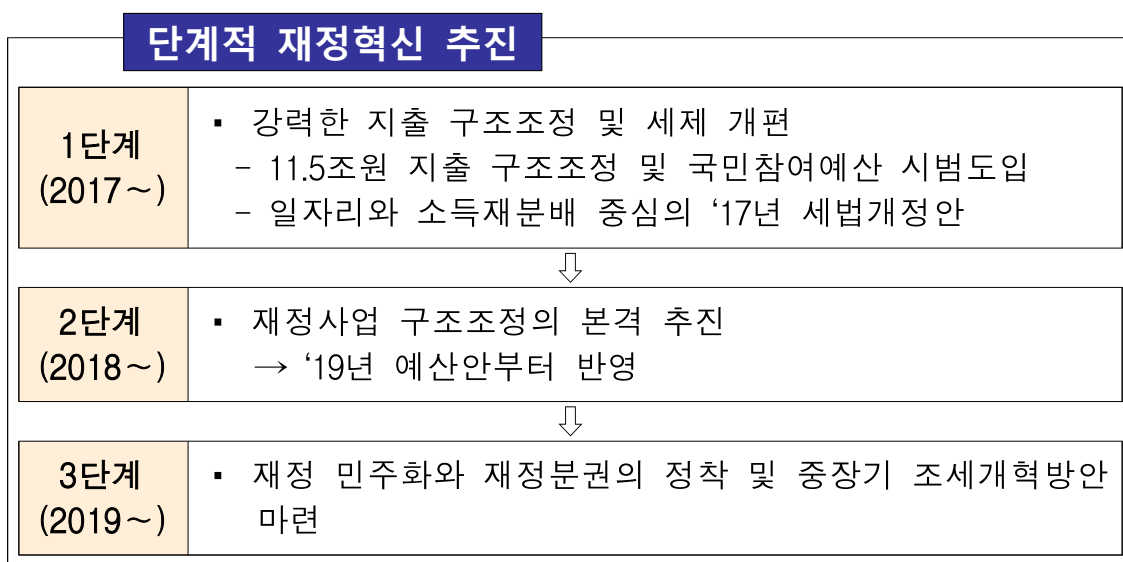
2018년 예산안부터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국민이 직접 제안·심사·결정까지 하는 방식으로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재정정보 사용자 맞춤형 정보, 정보공개창구 통합, 상세집행내역 신속 공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단계별로 추진하되, 새정부 초기부터 재정혁신 노력 집중

정부는 재정혁신을 시기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로 2018년 예산안 편성시 11.5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반영하였으며 국민 참여예산제도를 시범 도입하였다. 또한 일자리와 소득재분배에 중점을 둔 2017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2단계로 내년에는 재정사업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하여 2019년 예산안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3단계로 2019년부터는 재정 민주화와 재정분권의 정착을 추진하고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혁신은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에 대한 변화를 수반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진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정부는 초기부터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당국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부처·관계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공동 추진

지출 구조조정을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설한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재정혁신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부처·관계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있다.

재정당국과 관계부처,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고 협업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재정당국과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재정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조직으로 기획재정부 내에 재정혁신국을 설치할 계획이다.

2. 강도 높은 양적·질적 지출 구조조정 추진

(1) 추진방향

■ 정책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추진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78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국정과제 이행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 등 세출개혁 95.4조원과 세입개혁 82.6조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출개혁 중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할 재원은 62.7조원이다.

최근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직접 지원,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보훈보상 확대 요구 등 추가 재정소요도 발생하고 있다.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과 추가 재정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강도 높은 양적·질적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분야별로는 복지·교육 등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분야별로는 복지·교육 등 사회분야의 새로운 재정지출 소요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반해 그동안 경제분야 지출비중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제분야 재정지출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경제분야 재정 지출비중은 더욱 줄이고, 복지·교육 등 사람에 대한 지출비중은 높일 계획이다. 또한, 지출 비중이 늘어날 복지 등의 분야에서도 전달체계상의 비효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접근방법으로는 양적·질적 지출 구조조정 병행

투자 우선순위, 사업성과, 집행수준, 지출성격 등을 Zero-base에서 검토하여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성 지출에 대한 양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보상체계 혁신, 전달체계 개선, 정기적 준치평가 등의 질적 구조조정도 병행할 계획이다.

(2) 양적 지출 구조조정

■ 정책전환과 함께 성과미흡·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점검

그동안 재정투자를 통해 스톡이 상당히 축적된 분야에 대한 지출은 줄이고, 성과가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 2018년 예산편성부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실시

초기부터 강도 높은 양적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2018년도 예산안 편성시 당초 계획(9.4조원)보다 2.1조원 많은 11.5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반영하였다.

우선 그동안 스톡이 축적된 SOC, 농업생산시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미흡”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또한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은 실수요를 감안하여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선심성·소비성·관행적 지출사업에 대해서도 연례적 행사비용 절감, R&D 일몰제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유사·중복 사업정비,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지적사업 등도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분야별로는 환경, 문화, 산업 분야에 대한 지출은 줄이고, 성과가 부진했던 일부 복지사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실시하였다. 분야별로는 SOC 4.4조원, 국방 1.5조원, 복지 1.4조원, 산업 1.0조원, R&D 1.0조원 등의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 2018년 예산안 편성시 분야별 구조조정 결과 >

분야	SOC	산업	농림	환경	R&D	문화
(조원)	△4.4조	△1.0조	△0.6조	△0.5조	△1.0조	△0.5조
분야	복지	교육	국방	외교통일	공공질서	행정
(조원)	△1.4조	△0.3조	△1.5조	△0.1조	△0.3조	△0.5조

* R&D 분야는 각 분야에 포함된 R&D 사업과 중복 있음

< 2018년 예산안 편성시 양적 지출 구조조정 사례 >

- [정책 전환] 그간 스톡이 축적된 SOC(도로·철도 등), 농업생산시설(수리시설 개보수 등), 환경기초시설(하수관로 정비 등) 구조조정
- [성과미흡]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미흡” 사업 구조조정, 보조사업 연장평가 및 부채 자체점검 결과 반영
- [집행부진]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은 실소요를 감안하여 구조조정
- [선심성·소비성·관행적 지출] 연례적 행사비용 절감, R&D 일몰제 실시
- [외부지적 등] 유사중복 정비, 국회·감사원 지적사업 등

(3) 질적 지출 구조조정

■ 개별 특성을 감안하여 유형별로 접근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양적 지출 구조조정 뿐 만 아니라 질적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되어야 한다. 질적 지출 구조조정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상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별로 접근할 계획이다.

첫째, 보상체계 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직접지원 방식에서 인프라와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부 수혜자에 지원이 집중되는 문제를 완화하고 재정지원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정책 수혜자 관점에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확충하거나 기존 체계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전달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혜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재정사업을 3~5년 단위로 정기적인 준치평가를 통해 재정지원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 영향 평가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 2018년 예산안에 일부 반영하고, 2019년 예산안부터 본격 추진

2018년 예산안에서는 렌트 배분체계 개선, 대학창업·ODA 융합예산 편성, 수요자 중심의 수출바우처 확대 등 질적 구조조정을 일부 추진할 계획이다.

질적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대상 과제와 추진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2019년 예산안부터 질적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2018년 예산안 편성시 질적 지출 구조조정 사례 >

- [렌트 배분체계 개선] 협업 네트워크, 인프라 지원으로 규모의 경제 구현
* (예) 중소기업간(産-産) 공동 연구개발 지원 확대(36→56개 과제)
- [융합예산 편성]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 연계
* 대학창업, ODA, 관광 분야 시범실시
- [복지 사례관리 연계] 업무분야·소속기관별로 분할 운영되는 사례관리(총 7종)를 연계하여 맞춤형 복지 강화
- [수출 바우처 확대] 수출기업이 서비스·공급기관을 선택하는 수출 바우처 대상을 확대(2개→6개 사업)하여 소비자 선택권 제고 및 공급자간 경쟁 촉진

3. 세입기반 확충

(1) 국세수입 확충

1) 추진 배경

현재 우리나라는 저성장·양극화, 일자리-배분-성장의 선순환 약화 등 구조적·복합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다. 가계간, 기업간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이 미비하고 조세·재정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도 높지 않아 양극화의 사후교정도 미흡한 실정이다.

* '97~'16년간 실질소득 증감율(%) : (하위 10%) △11 (상위 10%) 28

* 세후 지니계수 개선율('14, %), (한국,'15)13.5, (미국)22.4 (독일)42.2 (영국)31.3

그간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경기회복에 큰 역할을 한 것과 같이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러한 재정의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한 채원조달방안으로는 재정건전성과 낮은 조세 부담률을 감안할 때 세입 확충이 안정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

* '16년 조세부담률(잠정)은 19.4%로 역대 최고 수준이나, OECD 35개국 중 하위 3위(OECD 평균 25.1%, '14년)

2) 추진 방향

■ 고소득층·대기업 과세 강화

그간 비과세·감면을 지속 정비한 결과 국세감면율이 감소하였고, 감면액 중 근로자·중소기업·농어민에 대한 감면 비중이 커 추가 정비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세율 인상 등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의 세입확충 방안으로 고소득층·대기업 과세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일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누진 세율을 도입하는 등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지속하는 한편, 상속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 편법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고소득층·대기업 과세강화를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취약계층과 영세기업 등을 지원할 경우 계층간 양극화 해소와 소득재분배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과세기반 확대

조세지출 심층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일몰이 도래한 조세지출을 정비하거나 재설계하는 한편,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과세 대상 발굴과 면세 범위 축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세지출 정비는 제도의 실효성과 다른 제도와 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대기업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 축소, 금융소득 과세특례 정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 유형자산 처분손익 과세대상 확대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탈루세금 과세 강화

탈루세금 과세 강화는 국민의 경제활동 위축과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과세인프라 확충과 사전 성실신고 지원 등을 통한 자진신고·납부 유도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형별·업종별 신고 도움자료를 납세자에게 사전 제공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 대상 확대,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 금액 인하 등 세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2)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1) 추진배경

우리나라 국유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행정재산(필지기준 88%) 중 상당부분이 지자체·공공기관에 관리위임 되어 있으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관리중인 행정재산의 무단점유 및 유희 재산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워 이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국유재산 현황 ('16년 결산기준) >

(단위 : 만필지, %, km²)

	필지	비중	면적	비고
행정재산	501.1	88.1	24,109	중앙관서·공공기관·지자체가 관리
일반재산	67.5	11.9	831	총괄청이 캠프에 위탁관리 (일부 타 공공기관 위탁)
계	568.6	100.0	24,940	

이와 함께 현재 관리중인 재산의 경우도 국가가 직접 활용을 위한 행정목적의 활용과 대부·매각 중심의 재정수입 확보에만 편중되어 있어, 국유재산 활용을 통한 공익가치 실현에는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사람 중심 경제'로 전환되면서, 기존 국유재산 정책방향도 변혁이 필요하며, 사회적 가치 제고, 혁신 성장 지원 등을 위해 재정과 함께 국유재산도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2) 추진 방향

■ 국유재산 총조사를 통한 국유재산 확보

각 부처가 관리중인 행정재산 중 지자체에 관리 위임되어 있는 재산의 활용현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개발 및 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국유재산 적극 활용

청사 내 공익 등을 위한 다목적 활용 공간 마련, 국유재산을 통한 사회적 기업지원, 청년·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추가 확보된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익 실현 및 재정수입 확보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유재산의 수입증대를 위한 대부 활성화

부정형·경사·맹지 등 형상불량 및 극소규모 토지, 시설보수 필요 건물 등 활용조건이 열악한 재산에 대한 대부료 감면을 허용하고, 현행 대부료율 전반을 검토하여 요율 탄력 적용 등을 통해 신규 대부 수요 발굴, 조립사업 등 장기활용이 필요한 재산은 대부기간 연장 등 대부료율 및 기간을 합리화 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토지의 공중·지하 및 건물옥상 유휴 공간에 대한 사용료 산정 기준 신설을 통해 추가적인 임대수요를 유도할 계획이다.

4. 재정의 민주성·투명성 강화

(1) 국민참여예산제도 도입

1) 추진 배경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중앙정부의 재정운용에 참여하는 방법은 기획재정부의 ‘재정혁신타운’ 홈페이지(www.budget.go.kr)를 통해 나라살림 아이디어 공모에 응모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낭비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이 있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아이디어를 제안한 이후에 정부 부처의 공무원이나 다른 국민들이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제안이 예산편성 또는 집행 과정에서 얼마만큼 반영되는지를 알기가 어려웠다.

또한 국민들은 나라살림 아이디어 공모에 참가하여 예산사업을 제안할 수는 있지만 자신 또는 타인이 제안한 사업의 심사와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국민은 자신의 세금으로 나라살림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만큼 국가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심사와 결정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동안은 대의민주주의를 통한 간접 참여가 더욱 강조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고, 외국의 경우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일반국민의 의사가 예산편성에 직접 반영되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가 재정운용에 대한 민주성을 강화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17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7월 20일~21일)에서 재정민주주의 구현의 일환으로 국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 추진 방향

■ 금년에는 국민이 ‘제안’하고 ‘결정’한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

앞으로는 국민이 중앙정부 예산사업을 제안하는 데서 더 나아가 제안된 다수의 사업 중 예산안에 반영될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이미 2017년부터 시행 중에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4~5월 ‘재정혁신타운’ 홈페이지에서 나라살림 아이디어를 공모하였고 국민들은 358개의 사업을 제안하였다. 기재부는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일반국민 1,000명으로부터 위 제안사업 중 10개의 사업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상위 6개 사업이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422억원이 2018년 예산안에 반영되었다.

국민이 사업을 ‘제안’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정부예산안에 반영할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직접 ‘결정’한 것이다. 6개 국민참여예산사업은 1)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지원(20억원), 2) 어린이집 등·하원 자동알림 서비스(7억원), 3) 365일 일자리 상담서비스 운영(14억원), 4) 농촌지역 일손부족 해소(24억원), 5) 농어촌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함 지원(0.5억원), 6) 여성 안심용 임대주택 지원(356억원) 등이다.

■ 내년에는 ‘제안·심사·결정’의 3단계에 모두 국민이 참여

내년에는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결정’ 과정뿐만 아니라 ‘심사’ 시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외국 또는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시민이 참여하는 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에서 제안사업을 심사하고 있다. 한편, 해외사례를 보면 시민이 사업을 제안, 심사, 결정하는 ‘특정사업 선정방식’을 도입한 국가가 있는가 하면, 시민이 특정 분야(예: 주택, 보건 등)의 지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우선순위 선정방식’을 도입한 나라도 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운용에 적합한 국민의 참여 방안을 전문가와의 논의 등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취지는 참여와 분권을 통한 재정민주주의의 구현에 있다. 정부는 국민이 나라살림의 ‘제안·심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설계함에 있어 이러한 제도 취지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 재정정보 공개 확대

1) 추진 배경

우리나라는 디지털회계예산시스템(dBrain)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기반으로 대국민정보공개포털(열린재정, <http://www.openfiscaldata.go.kr>)에서 예·결산, 운용현황, 성과관리 등 재정 흐름별 상세 통계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외에도 예산(재정혁신타운, www.budget.go.kr)·국고보조금(e나라도움, gosims.go.kr) 등 특정 분야별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며, 각 부처(중앙관서·기금운용주체) 홈페이지에도 해당 기관의 월별 세입·세출 운용현황 및 사업별 설명 자료를 공개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정보공개는 국고보조금, 예산 등 국민들의 관심사가 높은 주요 항목에 대해 별도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부처 차원의 별도 상세자료(사업별 설명자료)를 공개한다는 점 등 양적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향후 국민참여예산제 등 보다 적극적인 국민의 재정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양적 측면을 넘어 사용자 중심의 질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의 관점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수요자 중심의 목적적합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 및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보 공개현황을 바탕으로 이를 분석·응용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최적의 정보공개방법 및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2) 추진 방향

■ 산재된 정보의 통합·연계로 정보 접근성 강화

정부는 다양한 정보 공개 창구를 통합·연계하여 사용자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대국민 재정정보공개홈페이지(열린재정) 외의 정보창구에서 공개되는 다양한 정보를 열린재정과 통합·연계하여 사용자의 정보이용 편의성을 증진할 계획이다.

■ 공개 수준 확대 등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정부는 재정의 민주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공개수준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참여예산제 도입,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정보공개 확대 관련 편익과 국가 안보 침해 등 공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적절히 고려하여 향후 최적의 정보공개 수준·주기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재정정보 공개

또한 기존에 공개되던 정보 형태 외에도 사용자의 정보이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공개형태를 맞춤형으로 다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정부는 관련 빅데이터 이용·분석, 사용자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정보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 수요자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재정정보 공개 확대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5. 재정관리체계 개선

(1) 공공기관 운영·관리·평가 체계 개선

1) 추진 배경

공공기관은 양질의 서비스를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면서도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 확보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운영의 효율성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운영·관리·평가 체계를 혁신하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공공기관이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자율-책임 경영체계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을 개선할 계획이다.

2) 추진 방향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경영 효율성 제고와 함께 공공성 강화를 공공기관 운영의 중요한 가치로 추구할 계획이다. 인권·안전·환경·양질의 일자리 등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국민 전체가 누리는 사회적 편익이 높아지도록 공공기관 운영체계를 재정립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정책 수립·시행 시 사회적 가치를 적극 고려하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 공정한 근로계약 선도 등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2017년부터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금년에는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직무능력중심(NCS) 채용 및 블라인드 채용이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다.

■ 열린 공공기관, 찾아가는 서비스

경영공시 및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경영공시시스템인 알리오(ALIO)의 정보 제공 내용을 대폭 확대하여 공공기관 종합 포털로 발전시키고 국민들이 공공기관 정책을 제언할 수 있는 국민 참여마당(쌍방향 소통창구)을 신설하여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 공공기관 평가체계 개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경영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공공기관 평가제도도 개편할 것이다. 우선 금년에는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을 경영평가편람에 확대 반영하는 등 고용 친화적 평가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이 기관의 설립 목적 등을 감안하여 인권, 안전, 환경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 노력하도록 2019년부터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2) 지방재정 분권 추진 방향

1) 추진 배경

지방 가용재원은 65%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비중은 24%에 불과하여 지속적으로 '2할 자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 지자체 등에서는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을 요구 중이며, 지방 재정운용의 자율성 부여 등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 지방세 비중(총조세대비, %) : ('00) 18 → ('05) 22 → ('10) 22 → ('16) 24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는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뒷받침하고 지방의 재정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위해 ①국세·지방세 구조개선 및 재정분권 확대, ②이전재원 조정으로 지방재정의 자주역량 강화 ③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다.

2) 추진 방향

■ 자주재원을 확충하여 국세·지방세 비중 7:3 구조 실현

국세·지방세간 구조개선을 통해 지방 자주재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국가·지방간 기능 재조정과 연계하여 국고보조사업 등을 정비하고 재원 이양을 병행 추진하는 한편, 지방 신세원 발굴,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지방 재정운용의 자율성·건전성 확보

지방 재정운용에 대한 중앙부처의 사전 규제*를 사후평가와 컨설팅 위주로 전환하여 지자체의 실질적 재정 자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의 자율성을 대폭 제고하는 한편 지방의 예산낭비사업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지방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방안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예산 편성·집행지침, 지방채발행한도승인제도, 지방투융자심사제도 등

(3)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1) 추진 배경

■ 경제 및 재정여건 변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타당성 없는 대규모 사업의 추진을 억제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되었다. 제도 도입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재정규모가 대폭 확대*되는 등 변화된 여건에 따른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GDP(경상) : ('99년) 577조원 → ('08년) 1,104조원 → ('16년) 1,637조원
통합재정규모(중앙정부) : ('99년) 121조원 → ('08년) 257조원 → ('16년) 386조원

■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책적 반영 필요성 제기

최근 들어 고용·환경·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예타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SOC사업 뿐 아니라 문화·관광·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도 예타가 실시되어 예타 조사 과정에서 전문성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는 한편, 제도 확대에 따라 예타의 실익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도 예타를 수행하여 행정낭비가 발생하고 사업추진이 지연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건설·토목 → R&D, 정보화 → 보건·복지, 교육, 산업, 문화, 관광 등 기타재정

2) 추진 방향

■ 예타 대상기준 상향 및 사회적 할인율 조정 등 경제여건 반영

예타 도입 후 2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예타 대상규모를 당시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경제·재정규모에 맞게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500→1,000억원, SOC분야 한정)

아울러 금리 하락, 사회적 시간선호율* 등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사회적 할인율을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5.5% → 4.5%, △1%p)

* 개인의 소비행태를 고려한 적정 사회적 할인율 수준

■ AHP 체계 개편, 수행기관 다원화, 예타 면제대상 확대

AHP 평가시 정책성 평가 가중치의 상한을 상향조정*하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비중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용효과'와 '환경성'에 대한 평가를 내실화하고, '안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항목에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는 KDI, KISTEP으로 한정된 조사 수행기관을 확대(예: 정보화진흥원, 조세재정연구원 등)하여 분야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편익의 화폐가치화가 불가능하여 타당성조사가 곤란한 '단순 소득이전 사업'을 예타 면제대상에 포함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4) 유사·중복 통폐합

1) 추진 배경

재정지출 효율화 및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2014년부터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추진하여 2015년까지 689개를 통폐합하였으며, 특히 2016년에는 4대 중점분야*를 위주로 유사·중복 통폐합을 지속 추진하여 3개년간 총 894개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였다.

* 다문화 가족 지원, 대학 R&D,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 유사·중복 통폐합 대표사례 >

- ①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가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고용부(취업사관학교)가 유사한 별도의 지원사업을 각각 운영
⇒ **여가부로 지원체계를 일원화**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취업사관학교 간 시너지효과 제고
- ②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이 대상별로 구 미래부(중·고등학생 및 성인)와 방통위(유아·초등학생)로 각각 운영되어 비효율 발생
⇒ 방통위로 교육창구를 일원화하여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는 콘텐츠로 사이버인성 및 사이버폭력예방 교육을 실시

2) 추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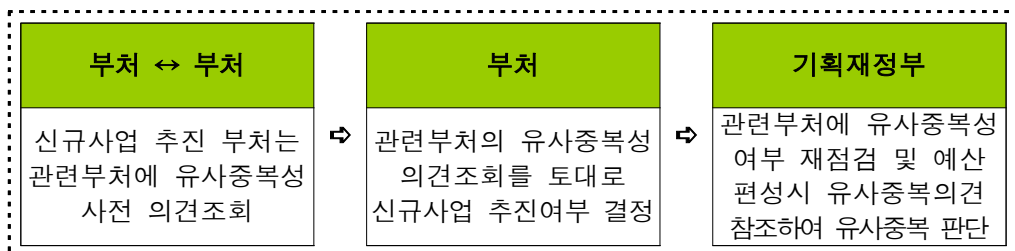
2017년에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노력은 지속하되, 물량위주의 감축 목표에서 벗어나서 질적 내실화에 집중하기 위해 신규사업 반영 전 유사·중복 다발 부처간 상호검증 의무화를 통해 유사·중복사업을 사전에 차단하여 신규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2014~2016년간 통폐합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행현황을 점검하여 사업 추진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를 추진 중이다.

■ 추진배경

- 수혜대상, 지원내용 등 사업목적이 유사함에도 부처별로 따로 추진하던 신규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요구 전 부처 간 사전 상호검증을 의무화하여 타부처 사업과 유사·중복한 신규사업을 사전차단

■ 주요내용

- 각 부처는 신규사업 요구시 과거 유사중복이 빈번히 발생했던 관련부처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의 유사중복 여부에 대해 사전 의견 수렴을 의무화(부처 ↔ 부처)
-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요구한 신규사업에 대해 예산편성과정에서 유사중복성 여부를 재점검(재정당국 ↔ 부처)



■ 기대효과

- 신규사업 요구 전 관련부처에 유사중복성 사전 의견조회를 통해 부처 예산요구단계에서 유사중복사업을 사전 차단
- 부처별 특성에 따라 신규사업 관리가 명확해지고, 부처 간 전략적인 자원조정이 가능하게 되는 등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

(5)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 개선

1) 추진 배경

최근 보조금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보조금 및 수급자 정보의 통합·연계가 곤란하여 보조금 전반의 정보공개나 부정수급 방지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 보조금 예산 추이(조원) : ('13)49.2 ('14)52.5 ('15)58.3 ('16)60.3 ('17)60.8

이는 국고보조금 예산·결산 정보를 관리하는 재원 관리·배분 시스템(dBrain, e-호조, 에듀파인)과 지급 대상자 자격검증 등을 위한 사업관리 시스템(행복e음, Agrix 등)이 별도로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고, 상호 시스템간 연계가 미흡하여 유사·중복 보조사업이나 부정수급자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시스템간 연계 및 통합을 통해, 보조금 전체 정보를 체계적·통합적으로 관리·공개하여 보조금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수급자 정보를 연계·통합하여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추진 방향

정부는 2014년 12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국고보조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하고, 2015년 업무프로세스 재설계(BPR) 및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을 시작으로 약 2년여 간의 구축과정을 거쳐 '17년 1월 보조금 집행기능을 위주로 1차 개통한 뒤, 2017년 7월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정보공개 기능 등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을 전면 개통하였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의한 보조사업 관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 중복·부정수급 방지

우선 보조금 예산편성, 공모, 사업수행,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보조사업 전 과정에 걸쳐 7단계* 검증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중복·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①유사·중복사업 확인, ②자격 검증, ③중복수급 검증, ④가격 적정성 확인, ⑤거래 유효성 검증, ⑥부정징후 모니터링, ⑦중요재산 사후검증 등

특히 부정징후 모니터링은 보조금에 최적화된 부정거래 탐지시스템을 본격 가동*하여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 특수관계 가장거래, 허위증빙, 허위인원 등재 등 50개 부정패턴을 적용하여 '17년 7월부터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 부정수급 최종 확인시 관련 법에 따라 처벌

■ 보조금 정보 공개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투명한 대국민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참여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별 국민입장에서 수혜 가능한 보조금 검색 및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보조금 이용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 업무 효율성 제고

전자증빙에 기반한 실시간 지급관리, 업무표준화, 온라인 정산 등을 통해 공모, 집행, 사후관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보조사업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 * 정산업무의 경우 온라인으로 자동 수행됨에 따라 기존에 약 2~3주 소요되던 기간을 1일 정산체제로 개선

(6) 사회보험 재정 안정화

1) 추진 배경

최근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인해 우리 국민의 노후·건강·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회보험(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및 건강·노인요양·고용·산재 보험)의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어 최근의 저성장 추세와 맞물려 사회보험의 보험료 수입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15~64세 인구: ('16년) 3,704만명(정점) → ('60년) 2,186만명('16년 대비 59%)

또한, 급속한 고령화로 우리나라도 2018년이면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14%에 달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연금급여 확대, 노인 의료비 증가 등으로 이어져 향후 사회보험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사회보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속에서 지난 2016년 3월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가 출범하였는데, 앞으로 정책협의회를 통해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그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2) 추진 방향

■ 사회보험 통합재정추계 실시

정부는 보험별로 상이한 추계 시기·가정 등을 통일하고 주요 변수들의 추계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상호 비교·검증 가능한 추계결과를 산출하여 사회보험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정확히 진단·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16년 4월 「사회보험 통합 재정추계위원회」와 그 산하에 연금·보험 2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2018년에는 70년 장기재정 추계를 실시하여 전망결과를 다양한 정책적 수요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

사회보험별로 자산운용 역량이 상이한 상황을 감안하여 「사회보험 자산운용 협의회」를 통해 각 사회보험이 축적해 온 자산운용의 정보·경험·기법 등을 서로 공유하고 국제금융시장 동향 공동조사, 공동 대체투자 기회 발굴, 투자정보·기법 공유 등을 지속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사회보험별로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해외투자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금흐름 특성에 맞도록 투자 상품을 다변화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시간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등 리스크 관리 강화 노력도 병행하여 사회보험 여유자산의 안정적 수익성 제고가 가능하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7) 안정적 국고채 발행 및 시장 선진화

1) 추진 배경

美 연준의 금리인상, 영국의 브렉시트 등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도 그간 정부는 안정적으로 국고채를 발행함으로써 재정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해 왔다.

다만,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인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상황에서 국고채 발행을 통해 중장기 재정자금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조달하고, 이를 위해 국고채 시장을 선진화 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추진 방향

■ 국고채 인수기반 강화

국고채가 시장에서 원활히 발행되고 인수 될 수 있도록 인수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에 국고채전문딜러의 국고채 인수 실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등 인수 중심의 평가 체제로 전환하고, 중위권 국고채 전문딜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중·하위권 국고채전문딜러들의 국고채 인수를 위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고채전문딜러들이 국고채 인수에 집중하도록 유통, 거래 등 시장 조성의무는 상대적으로 낮추어 국고채전문딜러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 국고채 차환리스크 관리

2018년 만기도래 국고채는 64조원 수준으로 만기도래 국고채 물량이 2018년에 집중됨에 따라 이로 인한 조달금리 상승 위험 등 차환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재원, 국고채 시장조성재원 등을 활용하여 국고채 차환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017년 말까지 2018년 만기도래 국고채 물량을 선제적으로 차환·관리하여 만기도래 물량을 64조원에서 50조원 수준으로 감축해 나갈 예정이다.

■ 만기물별 발행 비중 탄력적 운용

종전에는 국고채 발행비중을 연물별로 관리해 왔으나, 시장 상황과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기(3년물, 5년물)-중기(10년물)-장기(20년물, 30년물)로 그룹화하여 관리함으로써 국고채 차환 발행에 따른 조달비용 변동 위험을 줄이고, 상환 부담을 분산시킬 계획이다.

■ 국채시장의 안정적 관리

주요국 정치 일정, 금리 인상 및 양적 완화 축소 등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하며, 금융위·한은·금감원 등 정책당국과의 실무협의를 정례화하고, 시장참여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협의채널'을 통해 시장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채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